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工學博士學位論文

# 경제적 요인이 가구형성에 미치는 영향

-상대임금과 주거비 부담을 중심으로-

The Effects of Economic Factors on  
Household Formation

-Focused on Relative Income  
and Housing Expenses-

2017 년 8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설환경공학부 도시계획전공

곽 윤 철



# 경제적 요인이 가구형성에 미치는 영향

- 상대임금과 주거비 부담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정 창 무

이 논문을 공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 년 8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설환경공학부 도시계획전공

곽 윤 철

곽윤철의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 년 8 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 국문초록

본 연구는 가구형성에 관련된 개념 및 이론 고찰을 바탕으로 경제적 요인이 가구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존의 가구형성에 관한 경제적 요인에 대한 분석은 거의 대부분 절대적 임금에 국한되어 있었고 주거비 부담의 경우에도 주택가격(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모두)의 절대적인 크기에만 논의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에서 벗어나 임금의 경우에는 지역 내 상대적 임금이 가구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주거비 부담의 경우에는 주택가격 대신에 주택마련 비용 부담( $PIR = \text{Price to Income Ratio}$ )가 가구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주요 내용 및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소득불평등과 주거비 부담이 가구형성(혼인율과 출산율)의지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는 혼인율과 출산율의 감소로 나타날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제시하고 경제적 요인이 조혼인율과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

주택 관련 변수와 조혼인율의 관계를 보면  $PIR$ 와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 모두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시도 단위에서  $PIR$ 나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상승하는 경우에 조혼인율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신혼부부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매매가보다는 전세가에 더욱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높아질수록 조혼인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소득불평등의 대리변수인 남성임금표준편차와 여성시간당임금표준표차 모두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지역의 실업률 역시 조혼인율에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소득불평등과 고용불안정성을 해결하는 것이 혼인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택 관련 변수와 합계출산율의 관계를 보면 지역의 로그 평균매매 가격은 합계출산율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주택가격과 출산율의 관계는 연구마다 결과 및 해석이 다양한데 본 연구의 결과는 주택매매가격은 가구의 자산효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소득관련 변수를 살펴보면 가구의 소득은 합계출산율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지역의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가구소득의 Gini 값은 합계출산율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육환경을 대표하는 지역의 국공립 어린이집 수는 합계출산율에 양(+)의 영향을 고용불안정을 의미하는 실업률은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의 저소득층 또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중 하나인 공공임대주택재고량 변수도 합계출산율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정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이 출산율 제고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낸다.

둘째, 본 연구는 사회 경제적 요인이 결혼 의향에 미치는 영향은 남녀가 서로 상이할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령에 따른 차이는 미혼남녀 모두 고연령층일수록 결혼 의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제적인 변수들을 살펴보면 남녀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때 순자산이 높을수록, 상대적 임금이 높을수록 결혼의향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규직 여부도 결혼의향에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치관에 따른 결혼의향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남녀 성역할과 자녀가치 변수는 결혼의향에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남성은 직업을 가지고 여성은 가정을 돌본다는 명제에 동의할수록 결혼의향이 높음을 뜻한다. 자녀가치관 변수는 가족생활에서 자녀의 가치를 높게 생각할수록 결혼의향이 높음을 뜻한다. 하지만 혼전 동거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한 사람일수록 결혼의향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가구의 상대적 소득 및 주거비 부담은 출산 의지를 약화시킬 것이며 이는 현재 출산자녀의 유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주거비부담은 자녀가 없는 가구와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모두 출산을 연기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혼인한 가구가 자녀 출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거비 부담이 출산연기라는 의사결정에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방 수가 많을수록 출산을 연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러한 결과는 결혼 초기 가정을 확장해 나가는 시기에 주택의 규모가 작으면 출산의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맞벌이인 경우에는 자녀가 있는 가구와 자녀가 없는 가구에서 모두 출산을 미룰 가능성이 높았다. 이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출산을 결정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배우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양 집단 모두에서 출산을 미루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으며 유자녀의 경우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가정은 출산을 미루지 않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기존의 가구형성에 영향을 주는 경제적 요인에 대한 분석을 절대적 임금과 주거비 부담(주택매매가격, 전세가격 또는 매매가격지수, 전세가격지수)의 수준에 국한되어있던 것을 절대적 임금을 발전시켜 지역의 비교집단과의 상대적 임금으로 분석, 주거비 부담을 발전시켜 주택마련 비용 부담(PIR)로 분석하였다는 것이다.

연구의 한계로는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불평등의 범주 중 주로 노동시장이나 가정에서의 여성의 상대적 지위와 관련되는 젠더불평등(성별차이)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지 못했다는 것과 거시-미시 연계적 분석이 좀 더 유기적인 과정으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주요어 :** 저출산, 조혼인율, 합계출산율, 소득불평등, 주거비부담

**학 번 :** 2009-23159





#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	10
1. 연구의 범위 .....	10
2. 연구의 구성 .....	12
제 2 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	15
제 1 절 결혼에 대한 태도와 의향에 관한 연구 .....	15
제 2 절 저출산에 관한 이론적 고찰 .....	26
1. 개인적 접근이론 .....	27
2. 경제적 접근이론 .....	34
3. 사회적 접근이론 .....	41
4. 가족적 접근이론 .....	50
제 3 절 저출산 요인에 관한 연구 .....	56
제 4 절 출산의지에 관한 연구 .....	72
1. 인구학적 요인 .....	73
2. 가족 가치관 요인 .....	75
3. 돌봄 여건 요인 .....	77
4. 정책적 요인 .....	78
제 3 장 연구방법 .....	81
제 1 절 연구 문제 .....	81
제 2 절 연구 가설 .....	83

제 3 절 분석의 틀 .....	86
1. 분석대상 및 범위 .....	86
2. 분석의 흐름 및 방법 .....	88
<b>제 4 장 경제적 요인이 결혼에 미치는 영향 .....</b>	<b>91</b>
제 1 절 거시 분석 : 시도별 혼인을 결정 요인 .....	91
1. 자료의 탐색 및 기초 분석 .....	91
2. 연구가설 및 분석 방법 .....	94
3. 분석 결과 .....	96
제 2 절 미시 분석 : 미혼 남녀 결혼 의향 요인 .....	98
1. 자료의 탐색 및 기초 분석 .....	98
2. 연구가설 및 분석 방법 .....	111
3. 분석 결과 .....	112
<b>제 5 장 경제적 요인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b>	<b>116</b>
제 1 절 거시 분석 : 시도별 합계출산율 결정 요인 .....	116
1. 자료의 탐색 및 기초 분석 .....	116
2. 연구가설 및 분석 방법 .....	119
3. 분석 결과 .....	120
제 2 절 거시 분석 : 서울시 자치구별 합계출산율 결정요인 ..	121
1. 자료의 탐색 및 기초 분석 .....	121
2. 연구가설 및 분석 방법 .....	122
3. 분석 결과 .....	124
제 3 절 미시 분석 : 신혼부부가구 출산 지연 요인 .....	126
1. 자료의 탐색 및 기초 분석 .....	126
2. 연구가설 및 분석 방법 .....	131
3. 분석 결과 .....	132
<b>제 6 장 결론 .....</b>	<b>135</b>

제 1 절 주요 연구결과 및 정책적 함의 .....	135
제 2 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	138
참고문헌 .....	140
Abstract .....	150

## 표 목 차

표 1. 연구의 내용적·공간적·시간적 범위 .....	11
표 2. 연구의 구성 .....	14
표 3. 결혼에 대한 태도와 의향에 관한 기존 연구 .....	25
표 4. 분석의 흐름 .....	89
표 5. 시도별 혼인율 결정 요인 자료 .....	94
표 6. 시도 혼인율 모형 하우스만 검정 결과 .....	96
표 7. 시도 혼인율 모형 : 도구변수 패널고정효과 .....	96
표 8. 미혼남녀(20~44세)의 일반특성별 결혼 의향 .....	100
표 9. 결혼 의향이 있는 미혼남녀(20~44세)의 일반특성별 결혼 계획 연령 .....	103
표 10. 미혼남녀(20~44세)가 제시한 배우자 조건 .....	106
표 11. 결혼의향이 없는 미혼남녀(20~44세)의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은 이유 .....	108
표 12. 결혼의향이 없는 미혼남녀(20~44세)의 연령별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은 이유 .....	109
표 13. 미혼 남녀 결혼 의향 자료 .....	111
표 14. 미혼 남녀의 결혼의향 영향 요인_남녀 전체 : 로지스틱 회귀분석 .....	112
표 15. 미혼 남녀의 결혼의향 영향 요인_남자 : 로지스틱 회귀분석 .....	113
표 16. 미혼 남녀의 결혼의향 영향 요인_여자 : 로지스틱 회귀분석 .....	114
표 17. 시도 합계출산율 결정 요인 자료 .....	116
표 18. 시도 합계출산율 모형 하우스만 검정 결과 .....	120
표 19. 시도 합계출산율 모형 : 패널고정효과 .....	120
표 20. 서울시 자치구 합계출산율 결정 요인 자료 .....	122
표 21. 서울시 자치구 합계출산율 모형(임대주택 포함) 하우스만 검정 결과 .....	123
표 22. 서울시 자치구 합계출산율 모형(임대주택 미포함) 하우스만 검정 결과 .....	124
표 23. 서울시 자치구 합계출산율 모형(임대주택 포함) : 패널고정효과 .....	124
표 24. 서울시 자치구 합계출산율 모형(임대주택 미포함) : 패널고정효과 .....	125
표 25. 세대구성 .....	127

표 26. 현재 자녀 수 .....	129
표 27. 총 계획 자녀수(현재 자녀 포함) .....	129
표 28. 신혼부부가구의 출산 지연 요인_무자녀 : 로지스틱 회귀분석	132
표 29. 신혼부부가구의 출산 지연 요인_유자녀 : 로지스틱 회귀분석	133

## 그 림 목 차

그림 1. 경제적 요인이 결혼에 미치는 영향 .....	89
그림 2. 경제적 요인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	90
그림 3.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추이(1970-2015) .....	92
그림 4. 평균초혼연령(1995-2015) .....	92
그림 5. 연령별 혼인율(2015) .....	92
그림 6. 시도별 조혼인율(2015) .....	93
그림 7.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1970-2016) .....	117
그림 8.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 2005, 2007, 2016 .....	118
그림 9.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 1996-2016 .....	119
그림 10. 부모와의 동거이유 .....	128
그림 11. 자녀를 (더) 갖기를 희망하지만 미루는 이유 .....	130
그림 12. 자녀를 (더) 갖기를 희망하지 않는 이유 .....	131

# 제1장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의 급속한 고령화 현상과 이와 맞물린 일반적인 저출산을 넘어서는 초저출산 현상에 대한 우려가 높다. 인구규모의 감소와 인구구조의 불균형으로 파생되는 문제가 단순히 비용적 차원을 넘어서 그 부정적 파급효과가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발휘하여 궁극적으로는 사회의 기능적 질서 유지에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출산율의 하락문제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범세계적인 현상이 되어 오고 있다. 지난 30년간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에 있어서 출산율은 감소해왔으며 전 세계적으로 합계 출산율(Total Fertility Rate)<sup>1)</sup> 1.5 혹은 그 이하의 수준을 보이는 국가 또한 60개국으로 증가되었다(조명덕, 2010). 특히 합계출산율 1.3이하의 초저출산 현상을 보이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28개국으로 나타나고 있다.<sup>2)</sup>

이처럼 저출산 현상이 범세계적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에 대한 심각한 우려는 최근 출산율을 회복하고 있는 서구국가들과는 다른 몇 가지의 특징에 기인한다. 먼저 사회보장제도가 성숙한 단계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구 구조의 전환이 일어난 서구의 국가들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사회적 대비가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그 결과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단시간에 초저출산 국가로 이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

1)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TFR)이란 출산 가능한 여성의 나이인 15세부터 49세까지를 기준으로,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를 나타내며, 국가별 출산력 수준을 비교하는 주요 지표로 이용된다.

2) 이인순(2011), “한국 기혼여성의 출산기피요인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1-5.



(류연규, 2005). 실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60년 6.0에서 1975년 3.57로 급격히 감소하여 1983년은 인구대체율 수준인 2.1이하로, 그리고 1995년에는 1.65로 떨어졌다. 이러한 추세는 이후에도 더욱 심화되어 2005년에는 1.07로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하면서 초저출산국 (Lowest-fertilityState)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08년 1.19로 소폭 반등하였다가 2009년에는 재차 1.15로 하락하는 등(2015년 기준 1.23) 인구대체율 수준을 월등히 하회하는 심각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리고 문제의 심각성은 현재와 같이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더불어 초저출산현상이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좀처럼 회복의 기미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통계청, 2017).

1975년부터 2005년의 기간 동안 37개국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 HDI)<sup>3)</sup>와 합계출산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이 연구에 의하면, HDI가 일정수준을 넘으면 사회발전과 여성의 노동환경, 보육시설의 정비 등으로 대부분 연구 대상 국가의 출산율이 반등되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같은 기간 동안 HDI의 빠른 상승에도 불구하고 남녀 간 격차가 심한 노동환경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배려의 부족 등 복수의 요인이 작용한 결과 ‘저출산의 덫’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결과에서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이 매우 복잡한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저출산의 진행과정과 수준 등과 같은 ‘저출산 현상’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있어서도 저출산은 경제성장의 둔화와 부양비부담의 증가 등 그 부정적 파급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사회문제이다. 저출산의 문제가 경제·사회에 미치게 될 부정적 결과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출산은 생산인구를 감소시켜 노동력의 부족과 노동생산성의 저하, 노동력 수급 불균형을 야기하여

---

3) HDI : 한 나라가 인간의 능력을 어디까지 개발했는가를 계량하여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수.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이 매년 각국의 교육수준과 국민소득, 평균수명 등을 조사해 인간개발 성취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한 지수로서 비물질적인 요소까지 측정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국민총생산(GNP)과 구별된다.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게 될 것이다. 둘째, 저출산과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따른 저축율의 하락은 소비·투자 위축, 재정수지 악화 등 국가경제성장의 둔화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셋째, 저출산은 중장기적으로 생산인구의 감소를 초래하여 세원의 부족과 국민연금 재정의 불균형,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유발하게 되고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것이다(이삼식·조남훈, 2000). 이는 결과적으로 생산연령층 개인당 조세 및 사회보장비 부담을 증가시켜 세대간 통합이 손상될 수 있으며 경제·사회 전반에서 활기를 떨어뜨려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및 복지국가의 실현에 중대한 도전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김승권·최병호, 2002; 손흥숙, 2004).

이러한 인식하에 정부는 2005년 저출산의 문제에 대한 긴급대책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 2005.3)’를 구성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2005)을 제정하였다. 이를 근거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을 수립하여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과 고령사회의 대응기반 구축을 목표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출산을 하락의 현상적인 문제해결 위주의 미시적이고 단기적인 정책이나 대책만으로 구성되어 장기간에 걸친 사회구조적 변화에 기인한 저출산 문제의 경향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을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장혜경 외, 2004; 이인숙, 2005).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부분 보완하여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에서는 육아휴직에 따른 임금손실의 경감<sup>4)</sup>과 육아기 단축근로 및 산전 후 휴가 분할 사용의 허용, 보육·교육비 관련 목표의 수정과 지원대상의 확대<sup>5)</sup>등 ‘일-가정양립’을 위한 정책이 제시되었다(보건복지부, 2010). 하지만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안의 주요

4) 종전 월 50만원 ‘정액제’ 육아휴직급여를 육아휴직 전 임금의 40%(50~100만원)를 지급하는 ‘정률제’로 변경하여 소득대체율을 높였다.

5)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대상자는 2012년까지 소득하위 50%에서 70%로 상향조정 되며, 보육의 다양성을 위하여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을 도입하고, 보육시설 운영시간의 다양화, 다자녀 추가공제의 확대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내용 중 다자녀가구 중심의 지원책과 급여 형평성 등은 한 자녀의 출산조차도 기피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2006~2015년에 걸쳐 제1차, 제2차 5개년 ‘기본계획’을 추진하였고 2016년부터는 제3차 ‘기본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제1차~제3차에 걸친 ‘기본계획’의 진행은 기본적으로 결혼·출산·양육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을 대응정책의 골간으로 하여 정책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을 세밀화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제3차 ‘기본계획’은 저출산 대응 패러다임의 전환을 선언하고, 이에 따라 새로운 사회구조적 대책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청년 일자라·주거 대책을 추가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2005년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이후 10년 이상에 걸쳐 법·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은 여전히 정책형성의 미흡, 정책목표의 비일관성, 주요 대책들의 실효성 부족, 패러다임의 전환과 사회구조적 대응 실패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즉, 제3차 ‘기본계획’은 큰 틀과 세부정책들에서 기존의 대책들과 큰 차이가 없고 새로이 제시한 청년 일자라·주거 대책마저도 청년들의 결혼·출산 선택을 지지할 수 있는 실효성을 결여하고 있어, 과거 저출산 대책의 관성이 지속되는 전형적인 경로의존성에 갇혀 있는 아쉬움을 남긴다.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저출산의 배경과 원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여성과 개인 가계의 출산 결정은 여성 개인의 가치관 및 인구학적 배경 그리고 출산의 직접적인 환경 요소로 작용하는 가족 내부의 역할 분담체계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모든 여성에게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환경도 중요한 영향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즉, 저출산 현상은 하나의 단일요인으로 설명할 수도 없거니와 어떤 요인들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따라서 다양한 요인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결과인 저출산의 원인을 분석

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진단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출산율이 심각한 수준으로 낮고 출산율의 반등을 낙관하기 어려워 해법모색이 쉽지 않은 우리 사회의 경우 더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진단이 필요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저출산의 현상을 파악하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저출산이 생산 인구의 감소와 노령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저출산 자체를 ‘위기’로 인식하는 관점으로서 저출산 ‘현상자체’와 저출산이 초래할 수도 있는 ‘부정적 결과’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또 하나의 관점은 저출산을 현상 자체보다는 가족과 여성의 출산·육아 부담에 주목하면서 저출산의 지속성과 출산·양육을 기피하는 원인 등에 관한 관심을 가진다(류연규, 2005).

생산인구 감소와 인구노령화 등 저출산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후자의 관점에 중심을 둔 접근방식 즉, 저출산이라는 사회현상에 대한 구조적 분석이 요구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인식들은 저출산의 현상을 분석한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반영되어 있다. 기존 연구에서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들은 전통적 가치관의 약화,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일·가정 양립의 곤란, 육아인프라 및 인적자원의 부족, 실업·고용불안정 등 다양하게 지적되어 왔다(이삼식, 2006). 또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체로 출산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크게 인구학적 요인<sup>6)</sup>, 사회·경제적 요인<sup>7)</sup>,

---

5) 개인의 출산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변수로서 인구학적 요인은 초혼연령의 상승, 여성의 학력상승, 혼인연령의 상승 등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요인들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로는 대표적으로 Toulemon(2001), Kohler(2001), Frejka and Calot, (2001), Bongaarts(2002), Caldwell and Schindlmayr(2003), perelli-Harris(2005), 김한곤(1993), 김승권·김민자,(2003)등이 있다.

6) 개인의 출산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변수로서 사회·경제적 요인은 소득, 경제력, 주거소유여부, 자녀의 비용과 효용, 취업여부, 직종 등으로 다양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요인들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로는 대표적으로 Davis(1982), Desai and Waite(1991), Klerman and Leibowitz(1994), Brewster and Rindfuss(1995), Gauthier(1998), 변준한(2003), 김혜순(1982), 김한곤(1993), 김승권·서문희(2001), 신영수(2003)등이 있다.

문화적 요인<sup>8)</sup> 등의 범주에서 연구해 왔으며, 각각의 범주들 가운데 특히 출산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요인들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연구들<sup>9)</sup>이 주류를 이루었다. 가장 최근 일부의 연구들은 저출산 대응정책의 효과성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여성의 출산기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혼 여성들이 처해 있는 일과 가족 환경의 서로 다른 상황적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전체 기혼여성들을 동일 집단으로 구성하여 분석하고 있거나 어느 한 대상 집단만을 분석의 단위로 한정하고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우리 사회 기혼여성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판단해 볼 때 가구의 출산기피 또는 연기의향은 가구가 처한 출산과 양육의 환경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여성이 일과 가정을 병행해야 하는 경우, 가정 내에서 육아를 전담하는 경우 또는 육아를 전담하고 있으나 취업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에 따라 출산기피나 연기의 정도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음으로서 가구가 출산을 기피(연기)하게 되는 상황의 구조적 메카니즘을 간과하고 있다.

또한 가구들의 출산 결정이나 기피(연기)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들도 분석의 범위를 일정한 지역으로 한정하여 지역적 한계를 보이게 되는 경

---

8) 개인의 출산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변수로서 문화적 요인은 결혼가치관, 자녀가치관, 부부역할 가치관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문화적 요인과 출산율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로는 대표적으로 Kahn, Wolfe, Quinn, Snoek and Rosentha(1964), Grief and Munter(1980), Steiner(1972), Kopelman, Greenhaus and Connolly(1983), Greenhaus and Buetell(1985), Hochschild(1989), McDonald(2000), Torr and Short(2004), Ford, Heinen and Langhamer(2007), 조남훈·김승권(1997), 김승권·조애저(2000), 이삼식·조남훈(2000), 김승권·최병균(2002, 2003), 이병렬(2003), 서문희(2003)등이 있다.

9) 이 이외에 개인의 출산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대표적인 변수로는 보육서비스의 이용, 가정지원서비스, 출산관련 정책 등이 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이인숙(2005), 이소영(2008), 김홍배 외(2008), 김춘숙(2008), 박수미(2008) 등이 있다.

우<sup>10)</sup>가 있다. 나아가 기혼여성이나 개인 가계의 출산기피(연기)의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들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거나, 가구들이 처한 실질적인 출산·육아 환경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환경에 놓인 가구들의 출산기피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연구는 제대로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 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고려해 볼 때 가구의 출산연기문제와 관련한 앞으로의 연구는 가구가 처한 상황에 따라 구분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향에서의 연구결과는 출산율의 제고와 여성인력의 동원과 같은 가까운 장래의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대응전략으로서도 유용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출산(fertility)은 생물학적으로 자신의 유전자를 후손에게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그러나 경제학적인 관점에서는 현 세대의 생산 및 소비인구를 다음 세대와 대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선진국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은 고령화의 속도를 가속시키고 생산인구의 감소를 초래하여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래서 일부 경제학자들은 저출산과 관련하여 “왜 아이를 낳지 않는가?”에 관한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출산에 앞서 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결혼’이다. 왜냐하면 결혼은 출산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출산된 자녀가 경제활동인구로 성장할 때까지 그들을 보살피고 교육시키는 역할을 하는 ‘가정(family)’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sup>11)</sup>

10) 개인의 출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지역단위에서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서울지역 보육시설재원자녀를 대상으로 한 이용복(2004), 경남지역 20개 시·군의 기혼자를 대상으로 한 이인숙(2005), 수도권지역 26~40세의 취업·비취업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박현주(2006), 서울을 포함한 경기지역의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한 마미정(2007), 이소영(2008), 신효영(2009), 이미란(2010) 등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11) 이상호, 이상현(2010), ‘저출산·인구고령화의 원인에 관한 연구: 결혼결정의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금융경제연구』 제445호, pp.1-3.

결혼은 출산과 관련이 깊으며 최근 결혼건수의 감소와 초혼연령의 상승이 저출산을 가속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결혼에 대해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최초의 연구자는 Becker (1973)이다. 그는 이론모형을 통해 결혼에 관한 남성과 여성의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Becker의 이론에 따르면 결혼시장 참가자는 결혼을 통해 얻는 효용수준이 미혼으로 남았을 때의 효용수준보다 높다면 결혼을 선택하고 반대의 경우 미혼을 선택한다. 결혼시장 참여자가 미혼상태로 남는 대신 결혼을 택함으로써 얻는 이득(gain)은 소득의 크기, 교육수준(human capital), 상대적 임금차이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보이고 경제적 요인이 결혼 행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라고 주장하였다.

Becker (1973) 이후 여러 경제학자들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거나 늦게 하는 이유를 찾기 위해 연구를 하였다. 그 중 결혼시장탐색모형<sup>12)</sup>(a search model of marriage market)이 좋은 예이다. (Becker et al., 1977; Oppenheimer, 1988; Luoghran, 2002). 동 모형은 남성이 결혼상대자인 여성에게 청혼을 하고 여성은 남성이 청혼해 오기를 기다린다는 가정으로부터 시작한다. 남성은 결혼시장 참가자 가운데 마음에 드는 여성에게 청혼을 하고, 청혼을 받은 여성은 남성의 임금 수준을 관찰한 후, 그 수준이 자신이 생각하는 유보가치(reservation value)<sup>13)</sup>보다 낮다면 청혼을 거절하고 다음 청혼자를 기다린다는 가설을 상정한다. 결혼시장탐색모형의 가설이 갖는 함

12) 결혼시장탐색모형은 Mortensen(1984)의 직업탐색이론(the theory of job search)을 결혼에 적용한 것이다.

13) 유보가치라는 용어는 직업탐색이론에서 노동을 공급하기 위해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최소한의 주관적인 임금 수준인 '의중임금'(reservation wage; 기대임금 또는 희망임금)과 유사한 개념이다. 즉 유보가치란 여성이 남성의 청혼을 승낙할 것인지 아니면 거절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여성이 이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삼는 남성의 임금수준을 의미한다. 여성이 결혼과 관련하여 생각하는 유보가치를  $w^r$ 라 하고 남성 및 여성의 임금수준을 각각  $w^m$  및  $w^f$ 라 하면  $w^f = w^m = kmw^f$  관계가 성립한다. 즉 여성이 생각하는 유보가치는 여성 자신의 임금수준에 일정한 값( $k$ ; 대체로 0보다 큰 상수)을 곱한 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 어떤 남성 청혼자의 임금수준을  $\tilde{w}^m$ 라 할 때,  $\tilde{w}^m \geq w^r$ 가 성립하면 여성은 청혼을 승낙하고  $\tilde{w}^m < w^r$ 인 경우에는 거절한다고 할 수 있다.

축적 의미 중 하나는 임금불평등(wage inequality)<sup>14)</sup>이 심화될수록 결혼을 하지 못하는 남성과 여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Loughran (2002)은 미국자료를 이용하여 결혼시장탐색모형의 가설을 실증분석 하였는데, 그 결과 백인남성의 임금불평등 확대는 1970년과 1990년 기간 중 20~33세 백인 여성의 결혼의향(marriage propensities) 하락의 7~18%를 설명한다고 밝혔다. 또한 Gould and Paserman (2003)은 남성의 임금불평등 확대가 1970년과 1990년 기간 중 여성결혼을 하락의 약 25%를 설명한다고 주장하였다.<sup>15)</sup>

이처럼 국외의 경우 경제학적 관점에서 결혼 문제를 다룬 연구들이 있는 것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결혼에 관하여 경제학적 관점에서 논의한 연구가 미미한 실정이다.<sup>16)</sup> 경제학적 관점보다는 주로 사회학적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대부분 결혼에 대한 기대(expectation) 내지 인식 변화에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이성희, 2008).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거시적으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혼인율 및 출산율 감소가 경제적 요인(주로 소득불평등, 상대적 임금의 크기, 주택마련 비용 부담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았는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미시적으로는 개인의 결혼 의향, 가구의 출산연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는 것에 있다.

---

14) 본 연구에서는 임금불평등은 소득불평등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였다.

15) 남성의 임금불평등 측정치로 Loughran (2002)은 정규직 근로자(full-time worker) 남성의 시간당임금 로그치(log hourly wages)의 표준편차를 사용하였으나 Gould and Paserman (2003)은 주당임금로그치(log weekly wages)의 표준편차를 사용하였다.

16) 김우영(2007)은 출산과 관련한 연구에서 결혼에 대한 분석이 출산율 하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또한 분석결과를 통해 1990년대 중반 이후 결혼 감소 및 지연이 우리나라 출산율 하락의 한 원인이라 지적하였다. 그러나 김우영(2007)이 접근한 결혼 모형과 본 연구의 결혼모형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김우영(2007)은 개인의 특성과 직종더미를 이용하여 모형을 추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소득불평등과 주거비용 등에 초점을 맞추어 모형을 설정하고 분석을 시도한다.



## 1.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 1.2.1. 연구의 범위

#### 1) 내용적 범위

본 연구는 크게 거시적인 차원에서 소득불평등과 주택마련 비용 부담(PIR = Price to Income Ratio로 측정, 이하 PIR) 등의 경제적인 요인들이 지역의 혼인율과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과 미시적인 차원에서 소득불평등과 주거비 부담 및 기타 경제적인 요인들이 개인의 결혼 의향 및 신혼부부가구의 출산 지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며 각각은 분석 단위와 분석 대상에 따라 세분화 된다.

미시분석 중 개인의 결혼 의향의 경우 경제적 요인이 남녀 전체의 결혼 의향에 미치는 영향, 남자와 여자 각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남자와 여자에 결혼의 의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차이를 보고자 하였다.

또한 신혼부부가구의 출산 지연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에는 조사시점에 자녀가 없는 무자녀가구와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는 유자녀가구의 출산지연에 관한 요인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 2) 공간적 범위

본 연구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경제적 요인이 지역의 혼인율 및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써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전국으로 하되, 주요 연구 자료의 특성을 반영하여 시도 혼인율 및 합계출산율 분석에서는 15개 광역시·도(제주도 및 세종시 제외)를 공간적 범위로 한정하였다. 또한 합

계출산을 분석의 경우 분석단위를 세분화하기 위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공간적 범위로 하였다.

미시분석의 경우 결혼 의향 분석(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2015)과 출산 지연 분석(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 패널조사 2015) 모두 전국을 공간적 범위로 한다.

### 3) 시간적 범위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기본적으로 자료구득이 가능한 모든 기간으로 설정한다. 시도 혼인율 및 합계출산율 분석의 경우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총 8년을 시간적 범위로 하고 서울시 자치구 합계출산율 분석의 경우 임대주택을 변수로 포함하는 경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임대주택을 변수에서 제외한 경우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총 12년이다. (구득 가능한 시군구 단위 임대주택 재고 통계가 2012년부터이다.)

미시분석의 경우 결혼 의향 분석(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2015)과 출산 지연 분석(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 패널조사 2015) 모두 분석데이터의 제공 시점인 2015년을 시간적 범위로 한정한다.

표 1. 연구의 내용적·공간적·시간적 범위

구분	내용적 범위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거시 분석	시도별 혼인율 분석	전국 15개 광역시·도	2008년~2015년
	시도별 합계출산율 분석	전국 15개 광역시·도	2008년~2015년
	서울시 자치구별 합계출산율 분석	서울시 25개 자치구	2004년~2015년 2012년~2015년
미시 분석	미혼 남녀 결혼 의향 분석	전국	2015년
	신혼부부가구 출산지연 분석	전국	2015년

### 1.2.2.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소득불평등과 주거비 부담 등의 경제적 요인이 가구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혼인율과 출산율의 관점에서 조명하고 거시-미시 분석의 연계를 통하여 그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도입부로서 정책적·학술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서술하고 전체적인 연구의 범위와 내용을 소개한다.

제2장은 이론 연구부분으로, 주로 연구 대상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그에 관한 이론 및 선행연구를 고찰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결혼 및 출산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결혼에 대한 태도와 의향에 관한 연구, 저출산 요인 및 출산 의지에 관련 선행연구 결과를 고찰함으로써 연구의 이론적 틀을 정립한다.

제3장은 본격적인 실증연구 수행에 앞서 연구의 틀을 설계하는 부분으로 앞서 검토한 문헌과 이론을 바탕으로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거시-미시 연계 모형의 틀을 설정한다.

제4장과 제5장은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는 장으로서, 크게 경제적 요인이 결혼 및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다. 각각 거시 분석 : 시도별 혼인율 결정 요인, 미시 분석 : 미혼 남녀 결혼 의향 요인과 거시분석 : 시도별 합계출산율 결정 요인, 서울시 자치구별 합계출산율 결정 요인, 미시 분석 : 신혼부부가구 출산 지연 요인에 대한 분석으로 이뤄진다.

제5장은 실증분석을 통해 상대적 임금과 주거비 부담이 결혼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미시 연계 분석으로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먼저, 거시적으로 15개 광역시·도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도별 혼인율 결정 요인을 분석한 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실태조사(2015)를 이용하여 개인단위의 결혼 의향 영향요인을 도출한다.

제6장은 비슷한 맥락으로 상대적 임금과 주거비 부담이 출산에 미치는 영

향을 거시-미시 연계 분석을 통해 규명한다. 먼저, 거시적으로 15개 광역시·도 데이터를 이용한 시도별 합계출산을 결정 요인과 서울시 자치구별 합계출산을 결정 요인을 분석하고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 패널조사(2015)를 이용하여 가구단위의 출산 지연 요인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제6장은 연구의 결론으로서, 앞서 진행된 주요 연구에 대해 제4장과 제5장의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끝으로 본 연구가 가지는 정책적, 학술적 의의 및 한계를 서술하는 것으로 연구를 마무리 한다.

표 2. 연구의 구성

제1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이론 연구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2.1 결혼에 대한 태도와 의향에 관한 연구 2.2 저출산에 관한 이론적 고찰 2.3 저출산 요인에 관한 연구 2.4 출산의지에 관한 연구
연구 설계	제3장 연구 방법
	3.1 연구 문제 3.2 연구 가설 3.3 분석의 틀
실증 연구	제4장 경제적 요인이 결혼에 미치는 영향
	4.1 거시 분석 : 시도별 혼인율 결정 요인 4.2 미시 분석 : 미혼 남녀 결혼 의향 요인
	제5장 경제적 요인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제6장 결론	5.1 거시 분석 : 시도별 합계출산율 결정 요인 5.2 거시 분석 : 서울시 자치구별 합계출산율 결정 요인 5.3 미시 분석 : 신혼부부가구 출산 지연 요인
	6.1 주요 연구결과 및 정책적 함의 6.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 2.1. 결혼에 대한 태도와 의향에 관한 연구

결혼은 사람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따라서 여성학, 사회학, 인구학 등 전반적인 사회과학 분야에서 결혼에 관한 연구는 다수 진행되어왔다(성낙일·조동혁, 2010). 복잡한 경제 활동에서 특정한 규칙성을 발견하여 경제 현상의 원인과 결과를 탐구하고 예측하는 경제학의 영역에서 비경제적 영역인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연구가 시도된 것은 베커(Becker, G., 1973)의 연구에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남녀가 결혼을 하는 근본적 원인을 가정 내에서의 성별 노동 분업이 갖는 이점에서 찾았다. 베커의 주장에 따르면 남성은 노동시장에서의 경제활동에서, 여성은 가사활동에서 비교우위가 있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계약을 통해 서로 이득을 보며, 성역할에 따른 전문화 이득을 목적으로 결혼한다는 것이다<sup>17)18)</sup>.

이러한 베커의 연구는 합리적 선택이론에 입각해서 자기이익의 원리와 효용극대화 모델을 결혼과 같은 비시장에 적용하고 결혼시장의 분석에서 경쟁 및 균형의 개념들과 경제학적 도구의 응용가능성을 제시해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으나(Pollak, R. A., 2003; 이영자, 2008), 모든 실증적인 현상들이 베커의 연구를 지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Goldsheider & Waite(1986)는 미국 National Longitudinal Surveys of Young Women 자료를 이용하여 10,000명 이상의 여성과 남성을 대상으로

---

17) 이 점에서 베커의 가족경제이론은 성역할 전문화 이론(gender role specialization theory)이라고도 불린다(김정현, 2015).

18) 김은지(2017), '결혼의 경제적 손실비용 추정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92(1):7-30, pp.9-13.

이들의 결혼 진입(transition to marriage)에 미치는 요인을 연구한 바 있다. 연구 결과, 남성은 가정 밖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여성은 가정 내에서의 역할에 충실 하는 전통적인 성역할이 지속되고는 있으나, 최근 결혼율의 하락은 여성들에게 있어서 결혼을 하지 않았을 때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들이 증가하면서 결혼에 대한 상대적인 선호(relative preference)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라고 부연하고 있다.

또한 결혼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초혼연령의 상승이라고 할 수 있다. 평균수명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그로 인해 이전 세대보다 더욱 긴 시간의 삶을 살게 되었기에 보다 긴 시간의 청년기와 장년기를 보내게 되었다.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초혼연령의 상승현상을 유발하게 된 것이다. 초혼연령 상승의 주된 요인은 친족망의 약화, 혼인비용의 증대, 부모자녀 간 상호의존성 강화 등으로 설명할 수 있고, 초혼 연령이 상승하는 것은 거시적인 사회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응이기에 결혼이라는 개인적인 의사결정은 가족과 사회 환경의 관계 내에서 설명되어야만 한다. 이는 결혼이라는 것이 자극히 개인적 차원의 의사결정이지만 가족과 사회적 맥락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5년에 비하여 2009년 남녀 모두 결혼 희망 연령이 높아졌다는 것을 진미정과 정혜은(2010)의 연구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이는 향후 한국 사회의 초혼연령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최새은과 옥선화(2003)의 연구에서는 이처럼 상승하는 초혼연령에는 남녀 모두에서 교육 수준이 높아짐과 동시에 소득 수준 역시 증가하였고 취업연수가 길어지는 것이 원인이 된다고 밝혔다.

혼인 연령이 상승함과 동시에 결혼에 대한 의식의 변화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진미정과 정혜은(2010)의 연구에 따르면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비율이 1998년 33.6%에서 2008년 23.6%로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전문직에 종사하는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혼과 결혼기피태도

에 대한 연구(어성연, 조희금, 고선강, 2010)는 가치관의 변화, 경제적 준비의 부담, 연령에 따라 변화하는 남녀의 결혼교환시장에서의 교환가치의 변화가 그 배경요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들 요인 중,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직업개발에 대한 가치가 결혼에 대한 가치보다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미혼남녀들의 가치관의 변화였다. 다시 말하자면 결혼보다는 더 나은 양질의 교육을 받고 더 높은 수입을 버는 것이 중요하고,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현실에서의 결혼은 반드시 경제학에서 말하는 효용극대화에 근거해 선택되는 것도 아니고, 베커가 말하는 성역할 분담이론에 의해 유지되지도 않는 듯하다. 오히려 결혼을 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기회비용이나 이혼, 별거와 같은 결혼 해체에 관한 연구가 현실을 보다 잘 설명해준다.

이처럼 결혼에 대한 가치가 낮아지고 필요성 역시 약화되어 실질적으로 결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이삼식(2005)의 연구를 통해 보더라도 결혼을 하지 않거나 연기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진미정과 정혜은(2010)의 연구에서는 결혼을 하게 되면 자녀를 낳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자녀가 있음으로 인해서 부부관계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인지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김혜영과 선보영의 연구(2011)에서는 30대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결혼에 대한 적절한 연령 규범의 가치관과 전통적인 자녀 가치관을 가진 여성일수록 결혼 의향이 높아지며 반대의 가치관을 가진 경우에는 결혼 의향이 낮아진다고 밝혔다. 그리고 생애주기이론에 초점을 맞춰보자면 시기와 그에 맞는 사건의 규율과 기대는 평가의 기준이 되며 개인을 사회적으로 생애주기의 순서에 맞게 이끈다(Andrew Cherlin, Caitlin Cross-Barnet, Linda M. Burton, Raymond Garrett-Peter, 2008). 정시에 규범적으로 인정된 변화는 사회적인 맥락에서 개인이 스트레스를 덜 받고 합당한 사회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접근 가능한 사회적



지지가 줄어들고 그에 따르는 변화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에 대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는 미국 사회에서도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인 규범이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백인의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아시아인과의 데이트, 동거, 결혼, 자녀 출산에 대한 태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29%는 반대를 하였고 31%는 지지를 하였으나,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아시아인과의 결혼 및 자녀 출산은 원치 않는다고 하였다(Herman & Cambell, 2012).

김정석(2006)의 연구에 따르면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도 성이 매우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밝혀졌는데 여러 가지 배경요인들을 통제 한 뒤에도 성별은 결혼의향에 유의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결혼에서 오는 혜택과 비용에 대한 남녀의 인식 차이로 설명하고 있으며, 남성의 경우에는 결혼을 통해 혜택을 얻는다고 인지하고 있고, 여성의 경우 결혼에서의 비용을 더 고려하고 있다고 보았다. 남성의 결혼의향이 여성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더불어 혼인의향에 미치는 예측요인들도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는데 미혼남성의 경우에는 교육수준과 취업상태가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는 반면에 미혼 여성의 경우 독립가구 거주여부와 성과 혼전동거에 대한 개방적 태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성연, 조희금, 고선강(2010)의 연구에서는 여성의 고학력과 증가된 수입 능력은 결혼시장에서 고학력 남성이 가지는 매력을 상대적으로 축소시켰고, 여성에게는 결혼에 대한 욕구 대신 취업이나 직업개발의 욕구를 향상시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결혼은 연기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결혼보다는 개인적인 목표달성이 더 우선시되기 때문이다(Barber & Axinn, 1998).

고선강과 어성연(2013)의 연구에 따르면 30대 미혼자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성별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30대 미혼남성의 경우, 주택을 소유할수록, 공평양육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수록 그리

고 자녀의 필요성을 인지할수록 결혼의 의향은 증가한 반면에 근로소득이 없을수록, 연령이 어릴수록, 형제자매가 이혼을 한 경우에는 결혼의향이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30대 미혼 여성의 경우에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개인소득이 높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자녀의 필요성을 인지할수록 결혼의향의 증가하였다. 특히 30대 미혼자들이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 중 경제적인 이유에 있어서 유의미한 성별 차이가 있었다. 남성의 경우 응답자의 절반정도가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여성의 경우는 응답자의 1/4만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30대 미혼 남녀가 결혼을 고려하는데 있어서 남성이 여성보다 경제적인 요소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성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자원이 풍부하지 않다면 결혼의 가능성은 낮아지고, 또한 여성의 경우 교환이론에 근거하여 많은 자원을 가진 여성들은 다른 대안이 있기 때문에 남편에게 의지하지 않는 습성을 지니게 된다(Kreager, Felson, Warner, Wenger, 2013). 왜냐하면 교육을 받은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임금 수준이 높은 직업을 가질 수 있어 재정적인 안정이 확보되기 때문이다(Kreager, Felson, Warner, & Wenger, 2013). 또한 교육은 다른 특성과도 상관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초혼뿐만이 아니라 재혼의 경우에도 더 좋은 배우자를 찾을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반면 이러한 자원들이 부족하게 되면 배우자에게 의지하는 경향을 증가시키며 설사 관계가 좋지 않더라도 결혼을 지속하게 되는 성향이 있다.

해외 문헌들을 살펴보면 백인 여성들은 서로 다른 인종끼리의 결혼을 인정하지만 본인은 안 된다고 하였으며, 백인남성은 아시아 여성과의 결혼을 원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백인 남녀는 다른 인종과의 관계를 원하지 않았다(Herman & Cambell, 2012). 대부분의 결혼에 대한 태도는 보편혼이라는 결혼행위에 의해서도 많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 즉 이는 누구나 결혼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는 태도를 의미한다. 또한 결혼에 대한 태도가 비교적 안정적이어서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최근 결혼에 대한 태도도 많이 변했다. 성, 연령, 교육수준 등등 가치관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면서 결혼에 대한 태도에 차이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젊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은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결혼이 필수가 아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생각이 점점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국 사회의 급속한 변동과 함께 가치관에 있어서도 세대 간 차이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혼의 기회비용에 대한 인식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으나 본 연구는 결혼을 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노동시장에서의 경제적 손실에 주목한다. 여성은 결혼과 더불어 경제활동 지속 시의 편익과 비용을 고려하여 경제활동참여 여부를 결정하는데(이혜원, 2014), 여기에서 주요 편익이 근로소득이라면 비용은 가사 및 자녀양육, 그리고 대체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활동을 지속하여도 기대 소득이 높지 않은 경우 여성은 경제활동 참여의 편익에 비해 비용이 높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경제활동참여 포기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진다(이혜원, 2014). 결혼 후 노동시장 이탈이 아니더라도, 가사의 일차적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성별 노동분업 체계를 강조하는 가부장제 남성부양체계 하에서 여성의 가정 내 노동은 무급노동이다. 이로 인해 여성은 남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고 이는 여성 빈곤의 잠재적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Sommestad, 1998).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남성부양체계를 기초하는 사회는 임금, 세제나 복지급여, 가족법 등 사회의 주요 제도가 남성을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남녀 간의 차별이 크고 주요 자원에 대한 접근은 남성을 매개로 해야 가능해진다(허근, 2005). 따라서 여성의 경제사회적 자원의 접근통로로 작용하고 결혼관계의 해체는 여성에게 사회적 경제적 자원의 상실을 의미하고 여성의 경제적 지위는 열악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여성이 가족 내에서 행하는 무급노동 역시 여성의 인적자본 마모를 가속화시켜 경제적 취약성을 초래하며 결혼의 기회비용이 된다.

한편, 여성이 결혼,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단절을 겪은 후 재취업하

는 일자리는 과거의 일자리와 비교하여 질적인 측면에서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해원(2014)는 여성가족패널 1차자료를 이용하여 결혼 당시와 현재의 일자리를 비교하였는데, 결혼 전후로 일을 그만두었다가 재취업하는 여성의 일자리는 본인의 과거 일자리와 다를 뿐 아니라 취업을 지속한 여성들의 일자리와도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에 있어서도 현저한 차이가 나타났다. 취업을 지속했던 여성의 월 소득이 192만원으로 결혼 당시 일을 그만두었다가 재취업한 여성의 월 소득에 비해 약 70만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는 이러한 임금 손실을 경력 연수의 차이, 경력단절기의 인적자본 손실, 재취업 시 하향 취업의 보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다(이해원, 2014. p.53).

Albrecht, Edin, Sundstrom and Vroman(1998)은 경력단절의 임금효과를 분석하였는데, 동 연구에서도 경력단절은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횡단면 분석에 의한 경력단절 기간의 회귀계수의 절대값에 비해 패널 분석에 의한 경력단절 기간의 회귀계수의 절대값이 더 큰 값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Beblo and Wolf(2002)는 독일의 자료를 이용하였는데, Pooled OLS법을 이용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임금손실이 크게 나타나지만, 패널 고정효과를 통제할 경우에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임금손실은 거의 없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국회예산정책처, 2014. p.22).

요컨대, 일부 연구에서 이견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경력단절의 경우 임금손실을 야기하며, 기혼여성의 경우 취업상태를 유지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여성의 경우 경력의 유지와 결혼이라는 결정에 있어 딜레마 상황에 놓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여성의 취업에 대한 태도는 어린 시절부터 각자가 자라온 환경 내에서 그리고 학교 및 사회생활 등 여러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태도라고 볼 수 있는데 비교적 오랜 시기에 걸쳐 형성된 태도라고 볼 수 있는 여성의 취업에 대한 태도에 따라 결혼에 대한 태도는 유의미하게 달리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이나 경제 여건의 변화 등과 같은 현재 자신이

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평가에 따라 결혼에 대한 태도도 달라질 수 있다.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한 경우 가정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최근 몇 년 사이에 자신들의 생활여건이 나빠진 경우가 그렇지 않을 경우에 비해 결혼에 대해 덜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남성의 경우에 사회 내에서 성차별이 있다고 느끼는 남성들은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남성들보다 결혼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게 되고, 여성들의 경우에는 사회 내에서의 성차별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의 성차별에 대한 태도도 결혼 의향을 결정짓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의 변동에 따라 가족이라는 사회제도에도 큰 변화가 일고 있다. 이러한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는 결혼이 감소하고 이혼이 증가하는 것의 변화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처럼 결혼을 비롯한 가족제도에 변화가 일고 있고, 결혼, 이혼, 재혼 등 가족가치에도 변화가 현재진행중이다.

한국도 미국을 비롯한 서구사회에서처럼 안정적인 행위와 가치로 여겨져 오던 결혼에 대한 태도가 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여성이 남성들과 동등하게 자신의 일을 추구하고 경제적인 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 굳이 결혼이라는 제도에 얽매이거나 결혼에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다. 즉, 결혼에 대한 근본적인 의미가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결혼에 대한 태도는 삶의 여건 변화와 같은 단기적인 변화요인에 의해서도 변화할 수 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결혼에 대한 태도가 변하고 있고, 이는 더 이상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성별분업이나 성역할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와 태도가 변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 사회가 겪었던 경제위기 등과 같은 단기적인 주변여건의 변화도 결혼에 대한 태도에 대한 변화를 야기 시키고 있다. 기존의 한국사회에서 결혼이란 가장 보수적인 제도이며 가치였는데도 불구하고 서구사회처럼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데 주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초혼 연령의 상승은 여성들의 가임시기를 단축시킴으로써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 출산율이 낮아진 것은 결혼한 사람들이 출산을 적게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늦게 결혼하면서 출산연령도 같이 상승한 것이 더욱 주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초혼연령의 상승이 출산과의 연계성 때문에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초혼연령의 상승은 궁극적으로 결혼과 가족의 여러 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외 문헌을 살펴보면, 결혼으로의 이행과정에 있어서 동거가 보편화되고 (Cherlin, 2004), 동거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혼율이 더 높은 성향이 있으며(Bramlette & Mosher, 2002; Teachman, 2003), 결혼할 때까지 노년기 부모에게 의존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등(Chelin, 2004), 결혼과 가족의 다양한 변화가 초혼연령 상승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초혼연령의 상승은 그 자체로서 주목해야 할 현상이다.

미혼남녀의 초혼연령의 상승 원인을 살펴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결혼으로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인 구조의 변화가 주요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었다. 은기수(2005)의 연구에서 결혼이 지연되고 저출산이 진행되는 것의 문제는 취업의 어려움, 직장의 불안정성 증대 등 경제적인 상황 악화에 기인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유삼현(2006)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가족형성을 지연시키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이삼식(2005)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미혼 남성의 경우 교육수준이 대학 이상이며, 직업이 전문직일수록 결혼희망연령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93년에서 2005년에 이르는 결혼 감소요인을 살펴보면 여성의 고학력화와 임금율 상승이 결혼을 미루거나 단념하는데 큰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조병구, 조윤희, 김정호, 2007). 그리고 교육수준은 남성에게 경제적 자원으로 작용하여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으로의 이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최새은, 옥선화, 2003; 이삼식, 2005; 유홍준, 현성민, 2010), 여성의 교육수준은 유의한 영향이 없거나(이삼식, 2005)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홍준, 현성민, 2010). 정창무(2008)의 연구에서는 주택공급과 남녀의 초혼연령의 관계를 파악했는데 혼인 시 주택 마련에 대한 남녀의 차별적인 규범으로 인해 주택공급이 남성의 초혼연령에는 음의 영향을 미쳤고, 여성의 초혼연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사례들을 살펴보면 실업율이나 노동시장 확대 등 경기 변화가 혼인율에 다소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지만 그 효과가 미미했다. 오히려 성별관계의 변화로 인해 성별 분업화된 전통적인 결혼의 유인이 약해졌고, 결혼과 혼인 내 출산에 대한 사회적 규범이 약화되면서 결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감소하고 대신 동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개인은 결혼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보상과 치러야 할 비용을 저울질하고, 결혼의 순서와 시기, 형태 등을 적절하게 조합하여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은기수(2005)는 우리나라의 가족 가치가 여전히 보수적이고 전통적이라고 설명하면서 단지 설문항목으로 한국인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가족가치가 약화되었거나 저출산이나 결혼지연을 초래했다고 설명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였다.

25-54세의 비혼 일인가구를 조사했을 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자들이 이혼자들과나 사별자들에 비해 결혼의 당위성에 대해 동조하는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가족가치를 내면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혜영, 선보영, 진미정, 사공은희, 2007). 정기선(2009)의 연구에서는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대체로 더 행복하다는 문항에 찬성하는 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회적인 규범이 약화되면 가치관은 개인의 선택이 더욱 중요한 결정요인이 될 수 있다. 결혼의 필요성과 가치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결혼할 확률이 높고(Sassler & Schoen, 1999), 재혼에 대해 허용적 태도를 가진 사람은 자녀가 있는 재혼자와 결혼할 확률이 높다(Raley and Bratter, 2004). 일반적으로 이혼자들의 경우 미혼자나 유배우자들에 비해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동조 정도가 더 낮는데(정기선, 2009), 이는 이혼의 경험이 결혼의 가치와 보상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미혼남녀의 결혼의 필요성 의식이 약할수록 결혼을 하지 않거나 연기하는 경향이 있다.(이삼식 2005).

그리고 자녀 가치관 약화는 미혼남녀의 결혼의향과 계획시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정서적 지지자로서의 자녀에 대한 가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미쳤다(이삼식, 2005).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일과 가정 양립의 곤란, 육아인프라 및 인적자원의 부족, 실업 및 고용불안정 등 다양하게 지적되어 왔다(이삼식, 2005).

표 3. 결혼에 대한 태도와 의향에 관한 기존 연구

구분	저자	자료	분석방법	주요 연구결과
결혼 의사결정에 관한 경제적 접근	Becker (1973)		연역적 미시방법론	결혼은 개인의 경제적 유인에 의한 선택문제이며, 결혼의 경제적 유인 및 이득은 각 배우자의 특화 및 분업, 소득결합으로 인한 공동소비 극대화에 기인
	Goldsheider & Waite(1986)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ng Women	패널자료 분석	여성이 결혼을 하지 않았을 때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들이 증가하면서 결혼에 대한 상대적 선호(relative preference)가 감소하여 결혼율이 하락함
결혼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관한 연구	Sommestad (1988)		이론 연구	성별노동분업체계를 강조하는 가부장제 남성부양체계 하에서 여성의 빈곤은 잠재적임
	박수미(2002)	한국여성개발원 제3차여성취업 실태조사	사건사 분석	한국사회 여성노동의 특성은 일과 가정 사이를 오가는 전형적인 불연속적 노동공급모형, 일정기간



				취업상태를 유지하다가도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노동시장 퇴장
	이혜원(2014)	여성가족패널 1차자료	패널자료 분석	결혼과 출산이라는 여성의 주요 생애주기적 사건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노동공급 변화를 분석한 결과, 결혼 전후로 노동공급감소폭이 높게 나타남
	Beblo & Wolf(2002)	German Social Security Accounts	IV fixed effect estimation	여성의 노동공급은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반면 남성의 고용은 외생적인 것으로 간주됨. 경력단절은 남성과 여성 모두 임금손실을 가져옴
	김혜원(2011)	노동패널 1-10차 자료	최소자승법, 고정효과모형	경력단절은 재취업 시 임금에 악영향을 미치며 경력단절 기간이 1년 늘어날 때 4%대의 임금감소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남
	Albrecht, Edin, Sundstrom & Vroman (1998)	Family and Work Data	Cross-section anal analysis	경력단절의 기간을 생애 전체적으로 합산하여 새 변수로 만들어 임금함수에 포함시켜 분석한 결과 경력단절은 임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김은지(2017), '결혼의 경제적 손실비용 추정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92(1):7-30, p.12.

## 2.2. 저출산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저출산 현상은 하나의 개별요인만으로 설명할 수도 없거니와 단기적인 현상으로도 볼 수 없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저출산의 원인은 해당 국가와 시대의 사회·경제적 환경과 같은 구조적 변화 그리고 출산을 결정하는 여성과 개인 가계 혹은 가족들이 제반 사회·경제적 구조변화에 적응하기 위

한 하나의 대응전략으로서 출산행태의 변화가 상호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sup>19)</sup>

저출산을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틀은 크게 보아 첫째, 가구의 소득, 자녀 양육비용, 여성의 경제활동과 정책변화 등 사회·경제의 변화와 같은 구조적 원인에 접근하는 이론들과 둘째, 여성의 가치관 변화와 자아실현 정도 등 출산결정에 가장 직접적인 주체인 여성 개인적 원인에 접근하는 이론, 셋째 출산과 육아를 분담하는 가족 내부의 성형평성 등의 원인에 접근하는 이론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각각의 이론들은 한 사회의 출산력이 왜 변화하게 되는가에 주목하며 오늘날의 저출산 현상을 설명하는 것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이론은 비록 모든 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화된 이론적 틀로 자리 잡은 것은 아니나,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제도적 맥락에서 선별적 혹은 복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이론적 틀로서 의의를 지닌다.

본 절에서는 저출산 현상을 설명하는 연구들의 특성과 시사점을 검토하고 저출산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이론적 틀을 검토하고자 한다.

### 2.2.1. 개인적 접근이론

최근 자녀가 제공하는 물리적, 심리적인 혜택이 축소되고 개인주의적 측면이 강조되는 현대 라이프스타일로 인해 저출산이 야기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전통적인 효의 개념이나 자녀에게 노후를 기대는 관습 등이 약화되고 있는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또한 종교적인 신념이나 전통 및 문화적 가치 기준과 같은 현대인들의 사고의 변화양상 역시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종교 및 관습적으로 낙태 및 출산통제를 엄격히 금하고 있는 몇몇 국가

---

19) 이인순(2011), “한국 기혼여성의 출산기피요인에 관한 연구”, 인제대 박사학위논문, pp.34-55.

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Eberstadt(2013)의 연구에서는 무종교계층이 증가함으로 인해, 전통적인 출산과 양육의 의무에 대한 교리적 가르침의 효과가 희미해진 것도 저출산의 이유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최근 미국에서 18세에서 24세 연령의 약 3분의 1 가량이 무교라고 답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가임연령층에서 종교적 신념을 포기하고 무종교로 변하는 계층이 많아진 것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았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와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기대가 많이 희석되었고, 기존의 종교적, 관습적 규범으로부터 벗어난 개방적 사회분위기로 인해 낙태에 대한 사회적 용인도가 증가한 것도 저출산의 결과를 낳게 한 원인이 된다(양정선, 전경숙, 고지영, 김정숙, 구현경, 2010).

#### 1) 탈물질주의적 가치이론(post-materialistic values theory)

탈물질주의적 가치 이론은 제2차 인구변천이론(Second Demographic Transition)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이론은 사회 인구학적 행위의 변화는 개인의 자아실현, 개인적 선호에 대한 만족감, 전통적인 권위로부터의 자유 등의 신장에 의해 촉진된다는 점 등을 구체화시킨다. 이러한 탈물질주의적 가치는 이혼율의 증가, 동거의 증가, 혼외 출산의 증가 등과 연결된다.

일반적으로 가치체계의 변화는 근본주의 혹은 실용주의, 보수적 혹은 진보주의, 물질주의(materialism) 혹은 탈물질주의(post-materialism)등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이 중 물질주의와 탈물질주의에 기반을 둔 Inglehart의 논의는 제2차 인구변천 혹은 출산기피 현상을 설명하는 것에 매우 유용하다고 판단된다(김두섭, 2005; 정성호, 2009). Ronald Inglehart(1997)는 예전의 물질적 가치관이 사회변화와 더불어 삶의 질을 중시하는 가치관으로 이행하는 현상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과정을 ‘조용한 혁명(silent

revolution)'이라고 불렀다. 이 이론은 근대화 단계의 사회에서는 물질적 소비와 안전이 강조되지만 탈근대화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는 생활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가치관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즉, 근대화 단계의 사회에서는 삶의 가치차원이 실존적인 차원에서 개인의 신체적 안녕과 사회질서, 안정, 경제성장에 관심이 집중되지만, 탈근대화 사회에서는 전반적으로 주관적인 행복감과 자아실현을 목표로 설정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마미정, 2007 재인용). 이러한 가치관 변화의 사회학적인 의미를 고려하면, 사회인구학적 행위의 변화는 개인의 자아실현, 개인의 선호에 대한 만족감, 전통적인 권위로부터의 자유 등의 신장에 의해 촉진된다는 점 등으로 구체화된다.

Inglehart의 논의는 탈근대주의 사회에 있어서 출산력 선호성(postmodern fertility preferences)과 관련하여 설명해 볼 수 있다. 여기서 탈근대성의 시기는 근대성 다음에 이어지는 시기로 경제적 안정성, 매우 높은 생활수준 민주적인 정치와 기회의 보장 등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탈근대주의와 함께 도래한 새로운 세계관은 산업혁명 이후 산업사회를 지배했던 세계관을 대체하는 정치, 산업, 종교, 가족 그리고 성역할 등 국가나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관들로서 이러한 탈물질주의적 가치가 가족생활에 유발하는 변화 중 하나가 가족규범의 약화와 만혼화 및 출산기피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김두섭, 2005; 유삼현, 2006).

또한 이러한 변화의 시기는 Lesthaeghe and Van de kaa가 주장하는 제2차 인구변천의 시기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Van de kaa는 탈물질주의의 다양한 특성들과 인구학적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있다. 사실상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은 탈근대주의적 삶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시기 부모가 되는 일은 자아실현을 충족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과제들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부가 자녀를 갖고 양육하는 일이 그들의 삶을 풍족하게 할 것이라고 느낄 때에만 실제적인 출산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이다(김두섭, 2005; 정성호, 2009 재

인용).

일반적으로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의 확산과 이에 따른 출산력 감소 현상은 전통적인 가족문화가 남아있는 남부유럽과 아시아 국가들보다 북유럽과 영어권 국가들에서 보다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Coleman(1998)이 주장하듯이 선진국들 중에서 출산력은 전통적인 사회보다 자유주의적인 사회에서 높게 나타난다는 점도 주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탈물질적 가치이론에 따르면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의 차이는 가치의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탈물질주의로 전환되어가면서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이 중시되고 그러한 영향들이 출산기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되어진다.

## 2) 제2의 인구학적 변천 이론(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Theory : SDT)

제2의 인구학적 변천이론은 주로 혼인 및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를 강조한다(McDonald, 2000; Van de Kaa, 2004; 김승권, 2001; 이삼식, 2004; 김태현, 2006). 전통사회에서 현대사회로의 시대적 이전 과정에서 인구의 변천은 인구가 높은 사망력과 높은 출산력 수준에서 (장기적으로 영(0) 인구성장의 균형상태) 낮은 수준의 사망력과 출산력으로의 새로운 균형상태에 이르는 과정을 묘사한 것이다(김태현, 2006).

Thompson(1929)은 187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유럽에서의 출산을 감소가 근대사회의 사회경제적 변동에 따른 것이라고 보았다(마미정, 2008; 정성호, 2009 재인용). 이러한 설명은 이후 Notestein(1945, 1953)에 의해 인구변천 이론으로 체계화 되었으며, 이에 따른 경험적 연구도 다양하게 진행되었다(정성호, 2009 재인용).

인구변천이론은 1960년대에 이르러 개발도상국들의 높은 인구성장에 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다시 한 번 주목을 받게 되었다. 유럽사회에서는 1960년대 이래 결혼연령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이혼이 계속 증가했으며,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를 통해 남녀가 함께 사는 방식이 사회적으로 보편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혼인 외 출산이 늘어나는 현상도 함께 나타났다. 유럽의 인구학자인 Van de Kaa and Ron Lesthaeghe는 1960년대 이후 유럽에서 전개된 결혼 및 가족제도의 변화 그리고 그로 인한 출산에 관한 가치, 태도, 행위의 변화를 두고 “제2의 인구학적 변천”(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이소영, 2007; 김영순, 2010).

인구변천 이론은 유럽출산력연구(European Fertility Project)에서와 같이 경험적 현상을 이론적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다양한 학문적 시도가 있었으나 출산력 감소에 대한 보편적인 이론을 도출하는데 실패하였다. 그 원인으로서 이 이론은 인구변천의 과정을 경험적으로 비교적 완벽하게 설명하였지만, 국가별로 다양한 사례나 특징들을 동일한 이론적 틀 내에서 반영하거나 설명하는데 있어서 유연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김영순, 2010).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Van de Kaa와 Ron Lesthaeghe가 주창한 제2의 인구학적 변천이론의 적용이 용이하지 않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가치관 변동, 더 넓게 표현해서 문화적 변동은 유럽의 문화적 변동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혼과 가족제도의 네 가지 변화 가운데 동거의 증가 및 혼인 외 출산의 증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중국 등의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관찰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Ronald Inglehart의 분석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가치관 변동이 매우 빨라 세대 간 가치관 차이가 세계적으로도 가장 크다는 주장이 있고, 물질주의적 가치관으로 이행하고 있어 제2의 인구학적 변천이론에서 주장하는 가치관의 변동과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주장되고 있다(은기수, 2005; 김영순, 2010).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제2의 인구학적 변천 이론은 개인주의가 확산되고 직업을 통한 자아실현을 중요시 하게 되면서 결혼관과 자녀관 등 가치관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정한 연령이 되면 결혼해야 한다는 보편적 결혼관과 자녀에 의한 노후보장, 가문계승 등의 전통적 가족 가치관이 약화되는 반면, 부부관계의 강화, 노후에 대한 자녀로부터의 독립 등에 가치를 두는 부부중심의 가치관으로 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가족 가치관의 변화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출산의 기피를 유발할 수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 3) 선호이론(Preference Theory)

선호이론은 시간노동과 가사노동간 여성의 선택을 설명하고 예견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선호이론에서는 20세기 후반에 발생한 피임방법의 보급·노동시장에서 평등한 기회의 제공 등을 핵심으로 하는 역사적 사건들로 인해, 여성들은 이전의 여성들에게는 가능하지 않았던 기회들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동질적이지 않은 여성들이 다양한 행동계획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한다(Hakim,C, 2000; 이정원, 2007 재인용).

특히 최근 저출산 및 초저출산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요인들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요인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선호이론 (preference theory)은 문화적인 요인을 강조하는 이론적 틀로서 ‘일 혹은 가족’에서 어느 쪽을 선호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출산기피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선호이론에서 전제하는 것은 ‘여성의 이질성’이다. Hakim(2003)에 따르면 산업사회에서 여성은 라이프 스타일에 있어서 가정 혹은 일 중 어느 편을 택할 것인가에 따라 가족지향적(home-centered; family oriented),적응적(adaptive), 노동(일)지향적(work-centered; careeroriented) 집단의 세 가지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먼저, 가정지향적 집단은 가정과 아이들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집단이고, 다음으로 노동지향적 집단은 노동에 우

선순위를 두는 집단이며, 이 양극단의 사이에 적응적 집단이 있다. 시간제 노동을 하는 유배우 여성 근로자가 상식적으로 불만족스러운 상황에 대해 만족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아내 노동자로서의 이중적 신분에 대한 선호를 고려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Hakim에 의하면 노동자들이 가정과 노동을 병행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시간제 노동을 선택한 것이라면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대안이 될 수 있고 그 상황에 대해 일반적인 차원에서 가치판단을 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다(조혜선, 2002 재인용).

한편으로, Crompton and Harris(1998)는 선호가 행위에 인과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있어서 특별한 상황과 배경이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서의 지향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이것이 결국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Tomlinson(2006)은 돌봄 네트워크, 일의 위상, 복지 정책 등 세 가지 변수가 여성의 일에 대한 선호 그리고 자녀를 가졌을 때 시간제로 일을 할 것인지 전일제로 일을 할 것인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개인적, 재정적 및 가족의 제한 등이 여성의 일에 대한 지향과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는 Dooreward(2004)의 연구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이정원, 2007 재인용). 그리고 Hakim은 선호 이론은 상황적, 구조적 요인들의 영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선호도가 고용, 고용시간, 출산력, 결혼 및 이혼 형태 등의 행위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Hakim은 여성의 행동 결정에 있어 ‘선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시장노동의 참가여부, 시장노동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상황적 조건이 여성의 ‘시장노동-가사노동’사이의 선호유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사회마다 선호유형 집단의 상대적 비율이 차이가 난다는 실증적 연구들은 선호가 한 여성 개인의 특수성과 함께 외부적 환경 조건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2.2.2. 경제적 접근이론

### 1) 소득관련이론

소득증대는 출산을 억제시킨다는 음의 상관관계 이론이 최근 많은 학자들에 의해 강력하게 주장되고 있고, 이는 인구전환이론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즉 출산율의 변화는 경제발전에 따른 도시화, 산업화, 교육수준 향상, 보건의료기술 발달, 소득증대 등의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인구전환현상에 의하여 설명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노테스타인에 의하여 처음 주장되었으며, 코울 등 많은 학자에 의하여 보완되었다.

소득과 출산력과의 관계에 관한 이론은 여러 학자에 의해 주창된 종합적이며 복합적 이론이다. 소득과 출산력간의 관계를 분석한 이론들은 첫째, 소득의 증가에 따라 출산력이 증가한다는 양(+)의 상관관계이론과 둘째, 소득의 증가에 따라 출산력은 감소한다는 음(-)의 상관관계 이론, 셋째, 소득은 출산력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는 중립적 이론이 있다. 이 이외에도 소득의 세부 변인과 출산력의 관계를 파악한 이론도 있으며 대체로 소득과 출산력의 관계는 사회, 시대, 성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소득수준의 향상이 출산력을 높이는 작용을 한다는 양(+)의 상관관계 이론을 최초로 주장한 학자는 Malthus이다. 그에 의하면 소득이 증가되면 결혼시기가 빨라지게 되고, 결혼한 사람들은 성적 절제를 적게 하기 때문에 출산력이 증가한다는 것이다(김승권 외, 2002). 이러한 견해는 출산력이 소득, 비용, 그리고 기호에 의해 결정된다는 Becker(1960)의 경제적 효용이론으로 발전한다. Becker에 의하면 전통적인 소비자 선택이론의 관점에서 출산율은 소득과 양(+)의 관계를 가지는데, 소득의 증가는 다른 재화와 마찬가지로 내구소비재의 일종인 자녀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박숙자, 2003).

이에 반해 Dusenberry and Okun(1949)은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자녀수

를 증가시키기보다는 제한된 수의 자녀에 대하여 많은 비용을 집중 투입하여 자녀의 자질을 향상시키려는 의욕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 경우 소득의 증가가 자녀수의 감소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관점이다. 즉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내구소비재의 양을 증가시키는 의욕보다는 질을 향상시키려는 의욕이 더욱 강하게 작용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자녀수를 증가시키기보다는 제한된 수의 자녀에 대하여 많은 비용을 투입하여 자녀의 자질을 향상시키려는 의욕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가계 소득증대가 발생하게 되면 여성에게 있어 출산은 대체 효과(자녀의 출산에 따른 직접비용과 기회비용의 증대로 인한 출산을 저하)가 소득효과(자녀를 재화로 보아 기혼여성의 소득증대는 출산율을 상승)를 지배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상의 내용과는 상이하게 Kuznets(1966)는 소득과 출산이 양(+)과 음(-)의 경향성을 동시에 가진다고 하였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유럽에서는 근대 경제발전의 초기단계에서 출산율은 가계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처음에는 증가하였으나, 다음 단계에서는 하강추세를 보이고 이러한 현상이 장기적으로 계속되어 소득과 출산은 초기단계에서는 양(+)의 경향성을 다음 단계에서는 음(-)의 경향성을 동시에 가진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증명하였다(김한곤, 1993).

또한 Cardwell의 ‘부와 유동성의 출산력 이론(Wealth-Flows Theory of Fertility)’은 출산력 저하가 가족 내부의 경제적 구조와 관계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세대 간 부의 이동으로 인해 자녀가 경제적으로 장점이 되는 사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회가 있다는 것이다. Cardwell은 후자의 경우 출산력이 계속 감소하여 제로에 이를 수 있다고 하였다(Cardwell, 197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재인용).

Easterlin(1978)의 상대적 소득가설(Relative Income Hypothesis)에 의하면, 부부가 기대한 이상으로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자유롭게 자녀

들을 둘 수 있으나, 반대의 경우 자녀 갖기를 주저하게 되므로 출산율은 기대되는 상대적인 소득과 자원에 따라 감소되어 종주에는 '0'수준에 도달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 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Easterlin(1983)은 사회경제적출산력이론(Socio-economic Theory of Fertility)에서는 출산율이 자녀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출산의 감소현상을 설명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보면, 소득 관련 이론은 사회의 경제적 발전 수준의 정도, 부부 혹은 가족의 상대적인 소득과 자원, 가족 내의 경제적인 구조 등이 여성의 자녀 출산의사에 영향을 미쳐 전체적·국가적 차원의 출산력을 결정한다는 것으로서 여기서 출산력의 주 영향요인은 '소득'이라는 관점이다.

## 2) 자녀의 경제적 효용이론

자녀에 대한 경제적 효용이론은 동태적인 미시경제학적 관점에서 자녀의 경제적 효용과 비용이라는 경제적 동기는 경제발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출산규범이 변화하게 된다는 것이 많은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었다.

이러한 자녀의 경제적 효용이론은 개인의 출산행위를 경제행위와 관련하여 설명한다. 출산력에 대한 경제학적 관점은 1950년대~1960년대 Leibenstein의 '한계효용이론'과 Becker가 제시한 '소비수요이론'을 적용한 미시경제학적 분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들에 의하면 가계의 출산력 수준은 주어진 가구소득의 제약 하에서 부모의 소비, 자녀의 소비 등을 고려하여 가구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녀출산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인 부모들은 출산결정에 앞서 자녀출산으로 얻게 되는 경제적 효용과 자녀양육에 들어가는 비용 등 경제적 비용-효과분석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효용과 비용이라는 경제적 동기는 경제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산규범도 변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Leibenstein, 1974; 마미정, 2008).

Leibenstein(1974)은 부부가 바람직한 자녀수를 결정함에 있어 추가적인 자녀로부터 얻어지는 효용과 비용을 균형화 시킬 것이라는 가설 하에 출산 행동을 하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고 보고 부모가 자녀를 갖는데 있어서 경제적 가치를 연구하였다. Leibenstein은 자녀를 추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용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첫째, 자녀 그 자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직접 효용(소비효용 : consumption utility)과 둘째, 자녀로부터 얻어지는 소득 또는 노동의 간접효용(생산재 효용 : utility as a productive agent), 셋째, 잠재적인 보장원천으로서의 효용(노후보장 효용 : utility as a source of security)이다.

Leibenstein은 부모가 자녀를 가지는 것에 대한 경제적인 가치를 연구한 대표적인 학자인데 자녀의 경제적 효용을 소비효용, 생산재 효용, 노후보장 효용 등 세 가지로 분류하여 비용을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하였다. 여기에서 소비효용이란 자녀를 소비재로 간주하고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자체가 부모에게 효용가치를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생산재 효용은 자녀를 생산재로 여겨서 가내노동을 수행하는 바와 같은 자녀의 역할로부터 발생하는 효용가치를 의미한다. 노후보장효과는 자녀를 노후의 생활수단으로 생각하여 자녀에게 노후를 의지함으로 기대되는 효용가치이다. 또한 비용으로서의 직접비는 자녀가 자립할 때까지 투입되는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등을 말하며, 간접비는 자녀양육으로 인해 상실되는 기혼부인의 활동기회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보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자녀의 효용이나 비용의 크기는 경제발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경제발전의 초기 단계에서는 자녀효용이 증가하고 비용은 낮아지기 때문에 많은 자녀를 가지게 되고, 경제발전의 다음 단계에서는 소득증대로 인하여 자녀의 효용은 감소되고, 대신 비용이 증대되어 소자녀 규범을 형성하게 된다.

특히 Leibenstein은 자녀의 효용 및 비용측면은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상이

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하며, 이와 같은 내용은 구체적으로 소득효과(income effect), 생존효과(survival effect), 직업분산효과(occupational distribution effect)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먼저, 소득효과는 경제발전 전에 따른 가구 소득의 증대가 비용측면에서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따른 직접비와 간접비를 증가시키는 반면에 효용의 측면에서 자녀의 소비효용은 소득증가에 비탄력적이고 동시에 자녀의 생산재 효용 및 노후보장효용은 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이는 결국 자녀에 대한 경제적 효용과 기대이익을 감소시켜 사회적으로 소(少)자녀관이 형성된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생존효과와 관련한 설명에서 Leibenstein은 영양상태, 의료기술의 발달이 영아생존율을 높이므로 자녀상실의 위험을 감소시켜 다자녀의 필요성이 약화되고 자녀에게서 얻을 수 있는 생산재 효용 및 노후보장 효용을 감소시켜 결국 출산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직업분산효과는 경제발전이 경제적 이동을 촉진하여 직업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초래하고 도시생활을 가속화시키며, 한 전문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축소시키는 효과를 갖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발전에 의한 직업분산효과로서 나타나는 전문화는 자녀교육비투자를 더욱 증대시키게 되며, 이에 따라 부모들은 소(少)자녀를 희망하게 된다(이소영, 2007; 마미정, 2007). Leibenstein은 결국 경제발전의 초기단계에서는 자녀에 대한 효용은 크게 증대되는 반면에 비용은 낮아져 다자녀 형성의 동기가 강하게 나타나지만, 이 단계를 넘어서면 경제발전에 의한 소득증대가 자녀에 대한 효용을 감소시키고 동시에 비용은 증대시켜 소(少)자녀 규범을 형성하는 동기를 제공하게 된다고 하였다(김한곤, 1993; 이소영, 2007; 마미정, 2008).

Becker(1965)의 출산율 효용함수(quality-quantity model)에 의하면, 국민 소득이 높은 선진국들의 경우 저출산 현상은 개별가계가 소득의 증가에 따라 자녀의 수를 증가시키기보다는 자녀의 인적자본 즉 교육수준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더 선호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으로 파악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Freedman and Coombs(1966)는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기를 바라는 부

모일수록, 자녀를 적게 낳기를 원한다는 조사결과를 보여주면서 자녀 양육비용이 출산의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Mincer는 일반적으로 기혼여성의 소득증대가 발생되면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를 지배하여 출산율이 저하된다고 하였다(김승권 외, 2002; 김정이, 2004; 엄정숙, 2004). 즉, 기혼여성에게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자녀를 재화로 보아 기혼여성의 소득증대가 출산율을 상승시키기 보다는 기혼 여성의 기회비용이 증대하여 출산율이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Muller(1972), Heer(1966)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통적 농업중심사회에서는 자녀에 대한 효용이 비용보다 높기 때문에 다자녀 형성의 동기가 되지만 근대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효용은 감소되는 반면, 비용은 증가하게 되어 소(少)자녀관의 동기가 형성된다고 하여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다(김승권, 2003; 김정이, 2004).

또한 Easterlin(1969)은 출산력을 소득, 기호, 비용 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그의 이론은 특히 기호의 영향력을 강조하면서 자녀의 출산을 수요와 공급 그리고 비용(가격)의 함수로 파악하였다. 이 때 수요는 자녀의 가치 및 효용이 되며, 이러한 효용의 개념에서는 경제적인 효용성(노후 봉양, 노동력 제공)과 심리적인 효용성(안정감과 만족감)이 포함된다. 공급은 그 한계가 가임력과 자연출산력에 의해 결정되며, 이러한 구조하에서 어느 정도의 출산수준을 유지할 것인가는 수요와 그 수요충족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의 수준에 의해 결정되게 된다(문창진, 1987; 이소영, 2007 재인용). 즉 자녀를 두는 것에 있어서 소득과 시간의 제약, 자녀에게 투자되는 비용, 다른 재화에 대한 수요 등 많은 제약 때문에 자녀를 통해 얻은 만족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인구학자들은 기회비용(opportunitycost)의 측면에서 출산과 양육을 설명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들에 의하면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임금증가, 사회·경제활동 증가 등 가계 외부 영역으로

의 확장은 자녀양육과 관련된 기회비용을 증가시키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행위는 여성들에게 기회비용의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로 작용하게 되고, 이러한 기회비용의 상승은 기혼여성의 출산을 기피하게 하여 출산율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반면 출산과 양육 이외의 특별한 사회적 역할이 여성에게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는데(Weeks, 1993), 이 경우 여성들의 출산은 기회비용(opportunity cost) 측면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출산력과 가계·경제요인에 대한 연구들이 저마다 다른 연구 설계와 다양한 척도를 가지고 연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아질수록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은 자녀를 적게 낳고 질적 투자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오히려 출산력이 낮아진다는 결과를 많은 연구에서 일관성 있게 보여주고 있다(손승영, 2005). 자녀에 대한 경제적 효용이론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수에 대한 수요에 비해 자녀의 질에 대한 수요가 더 클 수 있으므로 가계의 경제력이 높은 경우 더 적은 수의 자녀를 낳고 대신 소수의 자녀에게 더 많은 비용을 집약적으로 투자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결국 출산력의 방향은 자녀 효용에 대한 개인적 차이에 따라 결정된다는 관점이다.

### 3) 경제적 종속이론(Economic Dependency Theory)

여성의 취업과 관련된 이론들은 여성의 출산율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취업요인과 출산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 종속이론은 여성의 경제적 독립이 출산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고 보는 입장이다(문창진, 1987). 여성이 경제적으로 독립된 경우에는 노후에 안정감을 느끼고 자녀의 출산과 성에 대해 중립적일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이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할 때에는 안전을 위해(예를 들어 사별, 이혼, 사고 등) 자녀의 출산을 희망하게 되며, 이 경우 남아출산을 선호

하게 된다. 이상을 정리해보면 여성의 취업과 이로 인한 경제적 자립은 낮은 수준의 출산을 유도하는 작용을 하게 한다(이소영, 2007).

OECD국가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는 출산율의 감소와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취업여성이 비취업 여성보다 낮은 출산율을 보여 왔다. 국가별로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높은 국가에서 출산율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김한곤, 1993), 그리고 일반적 현상으로서 20세기 중반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여성의 취업활동이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이 출산율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이 일반적이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할수록 출산율이 낮아진다는 많은 실증연구들은 이런 논리를 뒷받침하고 하고 있다(Kogel, 2004).

이 이론은 자녀가 더 이상 노후보장을 위한 방법으로 인식되지 않으므로 자녀수를 제한하여 적은 수의 자녀에게 양육과 교육비용을 집중화하고(이삼식·조남훈, 2000), 여성의 교육 수준 및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여성의 자립도가 높아졌기에 소(少)자녀관이 증가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 2.2.3. 사회적 접근이론

대부분의 사회학자들은 규범과 기호의 형성을 통한 행동과 개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규제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학적인 관점에 있어서 출산을 결정하는 요소들을 규명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을 실시해왔다. 그 중 대표적인 사회학자 사이먼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출산율이 개발의 초기단계에서 증가하지만 경제발전과 소득증대에 따라서는 점차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출산율이 경제발전의 후기단계에서 사회경제적 변수들로부터 보다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술츠의 경우, 출산율의 저하가 유아사망율의 저하에서 기인된다는 이론을 주장하였다.



또한 데이비스는 인구변동과 대응이론을 통해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인간은 자신의 생활을 재조정하게 되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이에 따라 노후의 생활까지를 염두에 두고 생활을 설계하게 된다. 생활을 재조정하는 방법으로는 장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거나 가족규모 축소 또는 결혼 연기를 통해 의무 등에서 탈피한 결과 각 사회에서는 출산율 저하현상을 나타낸다고 주장하였다.

본문에서는 총 5가지의 이론으로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접근 관점으로 설명해보도록 하겠다.

## 1) 차별출산력이론

차별출산율(differential fertility)이란 개인의 인구·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출산율의 차이를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지표는 교육수준의 차이, 도시와 농촌의 차이, 개인의 종교적 배경의 차이 등과 같은 사회적 규범 그리고 개인의 기호, 행동 및 개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규제적인 면을 강조하며 이에 따른 출산력의 차이를 분석하고 있다(김승권, 2002; 변준한, 2003; 김정이, 2004).

차별출산율에 따르면 출생은 전적으로 생물학적 현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사회경제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이소영, 2007). 일반적으로 출산력은 그 사회의 특수한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문화와 밀접한 관련되어 있으므로 한 사회에서 출산력의 차이에 대한 연구에서 어떤 사회적 배경이 중요한 결정변수가 되는가는 사회마다 다를 수 있다(변준한, 2003). 즉,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 요인과 출산력이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사회의 전반적 수준에서 사회경제적 요인과 출산력과의 관계를 다양한 관점으로 살펴봄으로서 고찰할 수 있다(마미정, 2008).

Caldwell(1980)은 대중교육이 가족관계와 가족경제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출산력을 감소시키는 촉매작용을 한다고 주장한다. 즉 교육이 가족관계와 가족경제를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농업사회에서는 자식으로부터 부모에게로 부가 흘러갔지만 산업사회에서는 부의 흐름이 부모로부터 자식에게로 흐르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산업사회에서는 자식이 생산자가 아니라 피부양자가 되면서 자녀를 부양하는데 더 많은 교육이 요구되며 물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더욱 많은 돈을 소비해야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Caldwell에 의하면 농경사회에서는 가족중심의 노후보장의 형태가 일반적이어서 생산자인 자식으로부터 피부양자인 부모에게로 부가 이전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가족중심의 노후보장형태로 인해 자녀를 많이 가지는 것 자체가 부모의 높은 사회적 위신을 보장했다. 하지만 산업화된 사회에서는 가족중심의 노후보장 형태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으며 자녀를 많이 가지는 것 자체가 그들의 부모에게 사회적으로 높은 위신을 가져다주었던 농경사회와는 다르게 오늘날은 그렇지 않다. 그러나 산업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하여 자식이 생산자가 아니라 피부양자가 되어 자녀를 부양하는데 더 많은 보육 및 보육비용 등으로 인하여 과중한 소비가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산업화된 사회에서는 가족중심의 노후보장제도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으며 다자녀가 사회적 위신을 보장해 줄 수 없게 되었다는 점 등이 출산 기피현상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김정이, 2004). 쉘츠(Schultz)는 출산율의 저하를 부모의 사회경제적 상태, 사회적 계급의 차이가 자녀에 대한 취향과 물질재화 사이의 선호도의 차이를 일으켜 출산력의 변화를 초래한다고 하였다(김승권 외, 2002).

출산력 변동은 제반 사회경제적 변화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데 한국의 경우 1970년대부터 출산력 저하가 이루어지면서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러한 출산행위를 결정하는 개인의 특성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교육수준, 아내의 경제활동, 소득수준 및 아내의 결혼연령 등이 출산력

에 영향을 주로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이인숙, 2005).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차별출산력 접근방법은 인구사회경제적 배경과 사회의 규범, 사회적 규제가 출산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 출산기피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차별출산력 이론은 주어진 배경에 따라서 만약 출산력의 차이가 존재하고, 그 배경변수와 출산력 사이의 논리적인 관계의 설정이 가능하다면 그 배경변수가 출산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어 실증적인 연구에서도 유용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 2)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

합리적 선택이론은 사람들이 아이를 출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비용을 능가할 것인가를 계산하여 출산을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이론은 만약 출산하는 것보다 다른 것에서 얻을 수 있는 효용이 크다면, 그 것을 선택한다는 이른바 효용극대화에 주목한다(이준구, 1995).

합리적 선택이론은 아이의 가격 혹은 비용의 변화에 기초하여 출산의 의사결정이나 기피를 설명한다. 이 이론에 의하면 19세기 유럽의 경우 아이의 비용은 의무교육의 시작과 함께 증가했으며(Caldwell, 1980), 특히 여기서 아이의 비용은 노동시장의 질적 변화에 상응하여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인해 커졌다(정성호, 2009). 또한 아이의 가격비용에는 교육비, 주택구입비와 같은 직접적인 비용과 간접적인 비용을 포함하는데 아이를 가짐에 따라 발생하는 간접적인 비용 혹은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의 크기는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의 여부에 달려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이 아이를 갖게 되어 일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아이에 대한 간접비용은 상실임금에 상당하는 수준만큼 반면에 여성의 경제활동참여환경과 보육 및 양육여건이 개선되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게 될 경우 아이의 간접비용은 비례적으로 낮아지게 되는 효과를 가져다 주게 된다(Chapman, 1999). 이상과 같은 일과 가정의 상대적 관계 하에서

개별 여성들에게 있어서 경제활동이 육아보다 더 높은 효용을 가져다주게 될 당사자는 출산을 기피하는 의사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다.

Chapman은 저출산 현상의 맥락에서 아이의 생산과 양육에 드는 비용은 경제적인 측면보다 심리적인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그는 아이의 출산에 따른 심리적 혜택을 내재적인 가치(immanent value)라고 일컬었다. 즉, 사람들은 아이를 하나 더 갖게 됨으로써 심리적인 효용이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 만약 사람들이 출산을 결정하는데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원한다면 직접적으로 아이에게 드는 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부모의 수입을 증가시켜서 육아의 비용부담을 줄여주거나, 아니면 간접적인 방법으로서 출산 및 양육행위 자체를 일반적인 경제행위로 간주하여 이를 전체 효용함수의 상관관계 속에서 개인의 효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체계의 하나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정성호, 2009).

출산의사 결정과 관련한 합리적 선택이론에 또 다른 차원을 추가하여 현실적 설명력을 제고하고 있는 이론으로서 ‘위험이론(risk theory)’이 있다. 이러한 위험이론은 정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람들의 출산여부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위험 기피적 행동’ 경향으로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불확실성의 세계에서 사람들이 취하게 되는 선택 행위는 그 자체로서 위험을 초래하게 되며, 이 경우 위험기피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선택에 따른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다(이준구, 1995). 이러한 의미에서 장래의 생애진로를 바꿀 수도 있는 자녀의 출산을 결정하게 될 때, 사람들은 많은 경우 미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에 의존하게 된다. 이때 만약 사회·경제적인 부분과 주변의 인간관계 등 미래에 대한 생각이 불확실하다고 판단되면 개인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다 안전한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출산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설명해 보면 개인은 자녀의 출산 이후 양육과 교육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출산의 포기 또는 지연이라는

전략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김승권, 2005).

Becker(1986)가 현대사회를 ‘위험사회’로 규정한 바와 같이 현대인들은 환경, 재해, 식량, 직장 등 어떤 면에서도 안전한 삶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특히 위험이론은 아이를 갖게 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불안정성(일정기간 동안 낮은 소득, 일터로의 복귀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 높은 소비지출, 피부양자에 대한 경제적 책임 등)에 대한 투자보다는 경제적 안정성(노후대비, 스스로의 건강, 여가활동 등)에 대한 투자를 선호함으로써 출산이라는 위험요인을 기피하려는 현상이 유발됨을 설명하고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Caldwell and Schindlmayr(2003:256-267)는 저출산 현상을 겪고 있는 현대 국가들에 있어서 저출산의 원인을 한 가지 모델만으로 설명할 수 없으나, 자유주의적 경제체제하에서 소비의 중요성과 직장의 불안정성 증가, 그로 인한 맞벌이의 요구, 자녀비용에 대한 두려움이 출산력을 저하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였다(이정원, 2007).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합리적 선택이론은 사람들이 아이의 추가적 생산으로 인해 야기되는 비용과 혜택의 합리적 비교 기준에 기초하여 출산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위험 이론은 이러한 비용과 혜택이 주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미래의 비용과 혜택이라는 점에서 앞서 합리적 선택이론과 차이를 보인다. 즉 비용과 혜택이 어느 정도의 범위와 수준인지와 관련하여 확실히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들의 장래 삶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변화시키기 위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며, 따라서 그들의 결정은 미래에 그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달려 있다(McDonald, 1996). 만약 경제적, 사회적, 개인적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생각이 들면 의사결정자들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 보다 안전한 방향(출산기피)으로 행동하게 되며 이러한 제약적 상황에서 자신들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안적 전략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 3) 젠더와 제도 이론

한 사회의 출산력 변천에 대한 연구에서, 젠더, 가족, 시장, 국가 등과 같은 제도들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은 연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제도들은 출산 결정에 영향을 주는 기회, 제한, 위험 및 수요 등의 근원을 이루기 때문이다. 사실상 출산력 변천에 대한 설명은 이러한 제도들이 사회마다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독특한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한다. 실증적 연구로서 서유럽의 출산력은 생계부양의 책임을 남성에게 전적으로 부과하였던 가족의 형태가 시장과 국가제도의 기초단위로서 역할을 하기 시작했던 시점부터 감소되어 왔다.

1980년대에 들어서 노동자들은 시장의 자유로운 운영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경제제도이며, 이기심(self-interest)이 사회에 가장 유익한 결과를 가져 온다는 신자유주의적인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는 상황을 맞이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30년 동안 국가에 의한 규제와 제한은 사업의 효율성과 이익의 극대화를 명분으로 지속적으로 축소되어왔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새로운 경제제도의 특성은 작은 정부와 낮은 세금,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자유무역, 임금과 작업 환경을 결정하기 위한 고용주와 피고용인을 위한 자유, 그리고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복지의 삭감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오늘날 정부는 자유주의 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제의 종류나 수준을 제한하는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다. 이 결과 고용주들은 노동자들의 가족 사정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되었으며, 따라서 노동자의 가족에 대한 책임도 느끼지 않게 되었다. 이후 자유시장체제가 활발해지고, 시장주의적 접근 양식이 보편화됨에 따라 그들에게 주어진 제한적인 기회에 효과적으로 반응하기 위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를 인지하게 되었다(정성호, 2009).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오늘날 자유시장경제가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남성이 가구소득의 대

부분을 책임지는 1인 부양가족 모형을 다시 부활시킬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시장은 특성상 이윤 추구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노동시장과 연관된 젠더 구조는 아이를 양육하는 여성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 그로 인한 부정적 파급효과로서 여성들은 아이를 사회적 위험으로 간주하고, 출산에 대해 기피적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것으로 제도가 성 불평등한 젠더 구조를 공고화시키는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 4) 사회적 출산·육아 이론

사회적 출산·육아 이론은 개인의 출산의사결정에 대한 사회나 국가의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사회학자인 船橋惠子·堤マサヒ(1992)는 민속학의 「산육 (産育)」 개념을 이용하여 출산이 갖는 개인적인 의미와 사회적인 의미에서 출산의 의미를 분석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출산은 개인적으로는 「구제적인 출산·육아」이며, 사회적으로는 「추상적인 재생산」이라는 이중성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인생설계 문제로서의 개인적인 입장과 사회의 존속을 위하여 적절한 인구 재생산을 유도하려는 사회적인 입장 간의 긴장·대립관계에서 출산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그리고 이 대립 관계를 완화하고 출산에 대한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재생산과의 양립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출산·육아 비용이 사회적 비용의 개념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출산·육아 비용의 특징을 「본래 사적으로 각 가정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각 기업이나 국가가 공공의 과제로서 분담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주로 여성)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현상」으로 이해하려는 시각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가정적, 개인적으로는 사적 선택인 「산육 (産育)-출산·육아」가 인구의 재생산을 통하여 공적·사회적인 이익에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정부나 기업)는 사회적인 이익(엄밀히는 사적 이익을 훨씬 상회하는 사회전체의 이익)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를 반

증하는 사례로서 국가나 사회는 사회적 이익에 맞는 출산·육아 비용을 분담하려 하지 않고, 결국은 공적·사회적 출산과 육아책임이 가정·개인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출산율의 감소는 가정이나 개인이 출산·육아의 사적 이익에 맞는 수준으로 맞추어 가는 합리적 선택적 행동에 기초한 현상으로 설명된다. 즉 오늘날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책임을 가족(여성)에게만 부여할 것이 아니라 정부도 일정 부분 부담하는 사회적 부양제도의 확립이 불가결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공적·사회적 출산·육아 부담의 형태는 아이가 있거나 또는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 가정에 현금 형태의 보조금 또는 출산·육아교육 등에 관한 서비스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보육서비스는 본래 기혼여성의 취업과 육아의 양립을 지원한다는 노동 시장 정책적인 관점이 강하다. 이러한 관점은 아동의 「사회적 경제가치」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여, 출산율 회복을 위한 공공 정책들의 전략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저출산 원인은 사회구조 및 가족구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이삼식, 2005). 예를 들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성 분업적 역할이 지속되고 육아인프라가 미흡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이 곤란하고, 사교육비를 포함한 자녀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 5) 역할양립이론(role compatibility theory)

여성의 취업과 출산율간의 관계에 대한 주요 이론으로 역할양립이론을 들 수 있다. 역할양립이론은 어떤 상황에서는 여성의 취업이 출산율을 감소시키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출산율에 중립적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예를 들어 농경사회에서 여성의 생산 활동과 산업사회에서 여성의 취업



은 자녀양육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역할양립이론에 의하면 출산율과 관계있는 결정변수는 여성의 취업 자체가 아니라, 직종이나 근무 환경이 되기 때문이다(문창진, 1987).

이 이론에 따르면, 여성에게 있어서 고용환경은 출산휴가, 근무시간의 유연성, 질 높은 보육시설의 보장 등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에게 출산과 자녀양육이 취업활동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조건으로 작용하는 사회에서는 출산율과 여성의 취업률이 함께 높은 경향을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많은 여성들은 출산과 취업 둘 중 하나를 택하여야만 하는 대립적 관계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의 경우 해당 국가의 출산율과 취업률은 모두 낮아지는 경향성을 보이게 된다(Gauthier, 1996; Brewstin and Rindfuss, 2000; 이인숙, 2005; 이소영, 2007 재인용).

#### 2.2.4. 가족적 접근이론

최근 전통적 가족제도의 해체현상은 저출산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는 자녀를 가지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인데, 일반적인 결혼제도나 전통적인 형태의 가정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점점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가족 형태가 거의 사라졌고, 최근 들어 독신가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전통적 가족의 형태와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기대가 많이 희석된 것도 저출산의 영향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 1) 일-가정 양립 곤란이론(Work-family incompatibility theory)

일-가정 양립 곤란이론은 여성에게 부과되는 일의 역할과 가정의 역할에 대한 이중부담으로 인한 일-가정 갈등(Work-Family Conflict)이 기혼여성의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쳐 출산 기피 행동을 유발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일과 가정간의 갈등에 관한 연구는 약 50년 전 Kahn, et.al(1964)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역할 갈등(role conflict)을 둘 이상의 역할 수행을 동시에 요구받게 될 때 하나의 역할에 응하는 것이 다른 역할의 요구에 응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山口一男,2008; 정성호,2009).

이상과 같은 역할갈등에 대한 정의에 따라 Greenhaus and Buetell(1985)은 일-가정 갈등을 단순히 직장 내에서의 역할 갈등뿐만 아니라, 개인이 가정에서의 역할과 직장인으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긴장과 갈등으로 파악하였다.

이런 전제하에서 Greenhaus and Buetell은 일-가정 갈등의 원인을 시간근거갈등, 긴장근거갈등, 행동근거갈등 세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였다(정성호, 2009).

여기서 먼저 시간근거갈등(Time-based Conflict)은 한 역할과 관련된 시간 압력으로 인하여 다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시간의 소요와 관련된 갈등이다.

다음으로 긴장근거갈등(Strain-based Conflict)은 한 역할에서의 긴장이나 스트레스, 피로가 다른 역할의 참여를 간섭 혹은 방해할 때 생기는 갈등으로, 불안과 긴장 및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긴장근거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행동근거갈등(Behavior-based Conflict)은, 개인의 행동과 조직에서 요구 혹은 기대하는 행동이 상호 불일치 할 때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많은 수의 사람들은 두 가지 모순된 행동 및 가치 시스템을 가지고 각 영역에 대처하게 된다. (Greiffand Munter,1980; Steiner,1972).

이러한 모순적 상황에 대처한 개인적 전략의 일환으로서 Mennino and Frayfield(2002)는 여성에게 일과 어머니 역할의 양립이 어렵기 때문에, 일부

여성은 상근 일에서 벗어나 파트타임으로 일하거나 전업주부를 선택하여 일의 역할을 줄여 역할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또 다른 전략으로 다른 일부 여성은 소(小)자녀의 출산으로 어머니의 역할을 줄여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였다.

이상을 종합하면, 일-가정 양립 곤란 이론은 여성의 일에 대한 선택 갈등과 추구가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운 상황일수록 출산율은 감소하고 여성은 소(少)자녀를 희망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급속하게 향상되면서 젊은 세대 여성들은 직업에 대한 높은 헌신도를 보이고 있어 이들이 과거 세대처럼 결혼이나 출산을 위해서 일을 포기하기는 어렵고 이러한 상황이 결혼과 출산기피 원인으로 작용하게 될 수 있다(손승영 외, 2004; 이연주, 2005; 이재경, 2005).

## 2) 양성평등이론(Gender equity Theory)

UN보고서(2005)에 의하면 지난 40년간 선진국 가운데 인구대체수준 이하의 출산력 수준을 지닌 국가가 5개 국가에서 63개 국가로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내의 노동시장 참여증가가 출산을 저하의 주된 원인이 된다는 연구결과들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으나, 최근 많은 연구자들이 출산기피 현상을 설명하는데 가족에서의 성 형평성(gender equity)역할에 주목하게 되었다(박수미, 2005).

McDonald(2000)는 자신의 출산율감소이론에서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하락하게 되는 원인으로서 개인지향적 제도(individual-oriented institutions)에서의 높은 성평등 수준과 가족제도 또는 가족지향적 제도(family-oriented institutions)에서의 낮은 성평등 수준간의 부조화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Hochschild(1989)는 미국의 맞벌이 부부에 관한 연구에서 자녀가 있는 아

내가 임금노동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에 반하여, 가정에서는 그에 따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 ‘지연된 혁명(the stalled revolution)’이 출산을 차이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Torr and Short, 2004; 이정원, 2007 재인용).

이들에 의하면, 초저출산 경향을 보이는 국가들에서는 교육이나 노동시장 등에서 개인 지향적 제도에서의 성평등 수준이 높아 아내가 남편과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게 되지만, 이러한 기회가 출산으로 인해 어느 정도 제약을 받게 되는가는 개인을 가족의 구성원으로 다루는 제도에서의 양성평등의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이나 노동시장으로 진출할 기회가 아내에게 평등하게 부여되더라도, 자녀출산으로 인한 부담을 아내 개인이 짊어져야 하는 경우, 아내는 출산을 기피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저출산이 영속화된다는 것이다(Chesnais, 1996: 731; Esping-Anderson, 1996; Rindfuss and Brewst, 1996; 김승권, 2005 재인용). 환언하면 아내는 취업이나 자아성취를 위해 출산을 조절하고, 또 출산을 위해 취업을 조절하는 복합적이고 유동적인 협상을 하면서, 조건의 변화에 따라 일과 양육을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전략적 선택을 개인적 차원에서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족주의적 성격이 강한 사회에서 출산과 양육은 국가도 시장도 아닌 가족이 책임져야 하는 영역이고, 가족 구성원 중에서 시장노동을 하지 않는다고 전제된 아내에게 그 책임이 부과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교육기회의 증대와 이에 따른 아내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 추세에서 아내가 출산과 양육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전제조건은 매우 비현실적일 수밖에 없다(류연규, 2005). 따라서 아내의 돌봄 노동에 대해 당연시하고 아내의 출산과 양육을 시장 노동에 비해 저평가하여, 아내가 시장노동보다는 출산과 양육을 기피하는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게 된다(김혜경, 2004). 실증적인 예로 성평등 수준이 매우 높은 국가들이 출산율이 높으며, 성평등 수준이 매우 낮은 국가들 또한 출산율이 높지만, 성평등 수준이 중간인 가족중심

주의 성격이 강한 국가의 경우 출산율이 낮게 나타나는 U자형 관계를 보인다는 것이다(Chenais, 1996; McDonald, 2000).

또한 Chesnais(1996)이후 많은 학자들은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사회의 친가족적 성향과 체제의 차이에 따라 아내의 자율성(autonomy)과 형평성(equity)이 달라지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아내의 자율성과 형평성이 높아질수록 일-가정의 양립가능성이 높아지며 이것이 출산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Sainsbury, 1996; Hantrais, 1997; McDonald, 2000; 김수영, 2002; Olah, 2003). 이와 반대로 취업여성에게 일-가정의 양립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사회의 경우 가족 간 열할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이 출산율의 제고를 위한 우선적 전략이 될 수 있다.

Ahn and Mira(2002)는 기혼여성의 출산-취업 관계의 변화에 대한 가장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가정 밖의 보육서비스의 이용 증가를 지적하였는데, 부모 이외의 사람에게 양육을 맡기는 것이 사회적으로 수용되고, 경제적으로 부담가능하고, 손쉽게 이용가능하다면 출산·양육·취업은 더 이상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닐 수 있다고 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양성평등의 관점에서는 개인 지향적 제도와 가족 지향적 제도간의 성평등 수준이 일관성이 없을 경우, 여성들은 일과 가정 사이의 역할 갈등을 피하기 위하여 출산을 제한하게 된다는 설명이 가능해진다(박수미, 2005). 자녀양육을 위한 시간의 사용이 가족 내에 적절히 배분되지 않고 여성에게 과도하게 부담이 되는 경우, 특히 부부간 시간사용이 전통적 성역할에 근거하여 불평등하게 될 경우 여성은 출산을 기피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해볼 수 있다.

### 3) 여성자율성이론(Female Autonomy Theory)

여성자율성이론에서는 남성과 여성은 출산선호도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가정하고, 여성의 자율성 정도에 따라 출산율의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문창진, 1987). 근본적으로 여성들은 자녀의 수가 많은 것을 원하지 않으므로 여성의 자율성이 높은 사회일수록 출산율이 낮아지게 된다. 반대로 여성의 자율성이 제한된 사회의 경우에는 남성의 출산 선호율이 그대로 반영되어 높은 출산율을 나타낸다. 즉, 남성주도가정에서 여성의 취업은 출산율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여성주도가정에서는 여성의 취업이 출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이소영, 2007).

여성의 자율성 이론은 여성들이 교육수준 상승과 경제활동 참여로 전통적인 여성의 성역할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변화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양육과 직업역할에 대한 가족 및 사회의 압력이 여성에게 과중한 책임감과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여성의 결혼만족도나 자아감, 직업역할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으며 결국 결혼과 출산의 기피현상을 유발하였다고 보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여성의 취업관련이론들은 출산율과 관계있는 것은 여성의 취업 자체이기보다 직종이나 근무 환경, 여성의 경제적 독립, 남성과 여성의 출산선호도의 차이임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여성에게 부과되는 과중한 책임과 심리적 부담이 결혼과 출산의 기피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이상의 논의에서 출산결정 관련이론들의 출산의 결정과 기피에 대한 초점과 분석틀, 요소 핵심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초점과 분석틀, 요소 등에 약간의 상이한 차이가 있지만 소득관련이론, 자녀 경제적 효용이론, 효용 극대화이론, 경제력 종속이론 등은 출산의 결정 요인이 경제적 비용과 효용이었다. 차별출산력 이론, 합리적 선택이론, 사회적 출산·육아이론, 역할양립이론은 출산의 결정 요인을 사회적 제도와 젠더구조로 분석하고 있었다. 또한 일-가정 양립 곤란, 양성평등이론, 여성자율성이론 등의 핵심요인은 가족 내 성형성이었다. 그리고 탈물질주의적 가치이론, 제2인구학적 변천이론, 선호이론 등의 핵심요인은 개인가치관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 2.3. 저출산 요인에 관한 연구

2001년 초저출산사회로 진입한 한국사회는 2005년에 이르러 최저 합계출산율인 1.06명을 기록하면서, 범정부차원의 출산장려 노력과 동시에 저출산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나유미·김미경, 2010:8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난 10년간 이루어진 저출산 관련 연구들의 동향을 우선 살펴보고, 이를 통해 연구의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오늘날 가족 내에서 자식의 기능이 경제학적으로 생산재에서 소비재로 바뀌었다. 농업 중심의 전 산업사회에서는 자식이 가업을 계승하는 동시에 노부모의 부양을 기대할 수 있는 생산재라고 할 수 있지만, 현대에는 임금노동자 중심의 사회이므로 가업의 계승이라는 인식이 사라지고, 사회보장제도가 확충됨에 따라 자신의 노후 부양에 대한 기대감도 희박해져 갔다. 즉 자식은 부모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소비재의 의미가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저출산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저출산 관련 인식을 파악하는 연구, (권혜진·김윤정·권수진·박선아·안영미·오금숙·이경숙, 2011; 김한곤·서정연, 2012; 김혜정, 2009; 보건복지부, 2011; 손승영·김은정, 2010; 신효영·방은령, 2008; 안은진·최효진·유계숙, 2007; 이경숙·정석진·박진아·신의진, 2009; 주영희, 2009)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 (김정석, 2007; 김현정, 2010; 마미정, 2008; 민현주·김은지, 2011; 박다은·유계숙, 2011; 박수미, 2008; 송유미·이제상, 2011; 이복순·정운태·이훈희, 2010; 이성용, 2009; 이인숙, 2005; 임선영, 2013; 이소영, 2008; 정영혜·김현주·정소희, 2013; 정은화·최유석, 2013; 주효진·곽경희·조주연, 2010) 기존의 저출산 정책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강은주, 2010; 김민주, 2010; 박미혜, 2006; 박은미, 2007; 서지원, 2007; 송태민, 2010; 엄기복, 2007; 유계숙, 2009; 이명석·장한나·이승연·민연정·최상준, 2012; 이삼식, 2006b; 이삼식, 2011; 정성호, 2012; 민

연경·이명석, 2013; 홍승아, 2010)들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먼저 저출산 관련 인식에 관한 연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과 세대를 중심으로 저출산 현상과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연구한 안은진 외(2007)의 연구, 청소년들의 자녀관 및 출산이미지, 출산 희망여부, 희망출산아수, 자녀양육의 책임 등에 대한 생각을 통해 출산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신효영·방은령(2008)의 연구, 젊은 여성들의 가족 가치관의 변화에 대해 고찰하고 성별과 세대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손승영·김은정(2010)의 연구, 저출산 현상의 심각성과 출산에 대한 책임감, 자녀에 대한 가치관 등을 조사한 보건복지부(2011)의 연구 등이 있었으며,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과 출산 및 자녀관, 가족 가치관 등에 관한 연구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권혜진 외, 2011; 김한곤·서정연, 2012; 김혜정, 2009; 이경숙 외, 2009; 주영희, 2009)

특히 저출산 관련 인식에 관한 연구는 저출산에 관한 다른 연구주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논의의 비중이 낮으며, 청소년, 대학생, 미혼남녀 등을 대상으로 주된 연구가 이루어진 반면 기혼자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다.(나유미·김미경, 2010:822-825) 하지만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있어 기혼여성의 출산에 관한 객관적인 분석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신혼부부 가구 및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출산 및 결혼, 가족가치관 등에 대한 분석을 함께 실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자녀수와 향후 출산여부에 대한 결정요인을 고찰한 이인숙(2005)의 연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차원에서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에 대한 접근을 시도한 이복순 외(2010)의 연구, 산업사회로의 이행 과정 속에서 저출산의 원인을 종적으로 고찰한 송유미·이제상(2011)의 연구, 출산순위별로 출산결정과 그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효과를 비교 분석한 민현주·김은지(2011)의 연구, 기존의 패널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후속출산계획과



후속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분석한 정은화·최유석(2013)의 연구 등이 있었으며, 현재의 출산력과 출산시기, 향후의 출산계획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찰하는 연구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김정석, 2007; 김현정, 2010; 마미정, 2008; 박다운·유계숙, 2011; 박수미, 2008; 이나래, 2011; 이성용, 2009; 임선영, 2013; 이소영, 2008; 정영혜 외, 2013; 주효진 외, 2010)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연구에서 기혼여성의 현재 자녀수는 독립변수 또는 종속변수로 활용되고 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개인의 출산행위에는 현재 출산자녀의 수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현재 출산자녀의 수에 따라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출산자녀수에 따라 구분지어 개인의 출산행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대응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특정 시기의 출산행위나 이미 완료된 과거의 행위를 중심으로 요인을 분석하는 경우 사회·문화적 배경의 지속적인 변화에 따라 미래의 행위에 대한 예측의 효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김정석, 2007:98-99; 이성용,2009:52; 민현주·김은지, 2011:199)

김승권(2011)의 연구에 따르면 2009년을 기준으로 자녀를 키우는 데에 출생 후 대학 졸업까지 1인당 2억 6천만원의 거금이 든다고 밝혔다. 한국적 가족제도에서 30대 이후 자식을 낳아 키울지라도 60대 이후의 자식이 노후에 대한 보험이 아니라, 노후를 위해 마련한 퇴직금을 축내는 짐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탈산업사회가 판단력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지식산업시대로 향해가고 있는 만큼 아이들은 예전보다 더욱 오래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기술이나 자격증, 사회에 대한 이해, 개인적인 성숙함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자식을 키웠다고 해서, 그에 대한 보상은

거의 없다. 반면에 자녀를 두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무를 충실했던 대부분의 부모와 똑같이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다음세대가 벌어들이는 것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된다. 궁극적으로 아이를 많이 낳은 부모들이 다음세대에 기여한 부분을 독신으로 살았던 사람들도 똑같이 누리게 되므로 부의 불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 기업은 이러한 인적자원 생산에 무임승차하기를 원한다. 숙련된 노동력이라는 이득을 얻거나 풍요한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팔아 이득을 챙기는 기업들은 부모들이 투자해서 만들어낸 인간 자원을 어떠한 보상도 지불하지 않고 전용하는 셈이다. 기업들은 그 생산자에게 보상을 하지 않고 인간자원을 소비한다. 기업이 보육시설 확대에 저항하는 등 인간의 출산과 양육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출산과 양육을 둘러싼 불평등이 내재한 가운데, 정부의 출산장려금 정책이나 각종 지원정책의 실효성은 많이 뒤떨어진다.

이러한 현상에서 비롯된 저출산의 원인은 크게 가치관 요인, 제도적 요인, 경제적 요인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 우선 가치관 요인은 저출산이 여성의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라는 점이다. 저출산은 사회경제적인 배경에서 여성이 결혼을 연기하거나 포기하고, 또 결혼하더라도 출산을 축소하거나 포기하는 현상을 말하기 때문에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미혼남녀와 기혼부부들이 개인적인 선호관계와 현실적인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비용과 편익을 고려해 내린 결정인 것이다. 만약 미혼여성이라면 결혼이라는 것 자체도 첫 번째 선택이 되는 것이고, 또 하게 된다면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에 관한 선택이다. 전통적인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여성이 결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한다면 누구와 결혼할 것인지에 관해서 거의 선택권이 없었고, 아이를 낳을 것인지 말 것인지에 관해서는 아예 선택권이 없었다. 하지만 탈산업사회에 들어섰고, 여성은 이전과는 달리 결혼 행위와 출산 행위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만약 기혼부부가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이는 아이를 낳으면 잘 키워야겠지만, 잘 키우기 힘들 것 같다는 현실적인 갈등으로부

터 비롯된 선택이다.

다음으로, 제도적 요인은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은 가부장제라고 할 수 있다. 저출산이 여성들의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결정내리도록 강요하는 요인이다. 탈산업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진출이 보편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에서 남녀성별분업이 여전하고, 노동시장이나 기업에서 여성차별과 여성의 경력단절이 만연하게 발생하고 있다. 여성은 결국 결혼을 연기하거나 포기하고 출산을 축소하거나 포기하는 선택을 하게 되고, 사회적으로는 저출산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요인은 출산과 양육을 둘러싼 불평등이다. 급속히 진행된 고령화로 인해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고, 기대수명의 연장에도 불구하고 한번 퇴직하면 재취업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조건의 악화는 여성의 미래 재정상황에 대한 불안정성, 소득의 감소, 젊은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출산을 하락을 가져오게 되고, 기업의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여성이 더 많은 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 여성에 대한 인적자본 투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출산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한국 사회에서 저출산 원인으로는 무엇보다도 결혼과 자녀와 관련된 가치관의 변화를 꼽을 수 있는데 이는 일정한 연령에 이르면 반드시 결혼하여야 한다는 보편적 결혼관이 약화되고 그 영향으로 충분한 미혼 기간을 보낸 후 결혼하거나 아예 결혼을 포기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한국사회에서 결혼은 보편적인 구속이자 의무가 아닌 선택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여성의 교육기간 증가는 여성의 첫째 자녀 출산의 평균연령을 상승시키고 또 추가적인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기간을 감소시킨다. 또한 여성의 높은 교육수준이 건강과 피임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되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피할 수 있게 된다.

과거에 인구과잉을 우려한 정부는 국제사회의 지원을 얻어 출산수준을 낮

추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한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맞물리면서 큰 효과를 얻었고, 우리나라는 짧은 시일 안에 출산수준 낮추기에 성공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의 실효성이 국민들로 하여금 소자녀관 형성이라는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지금과 같은 저출산 현상을 불러일으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예산과 다양한 방안 등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첫째 아이를 출산하기 직전과 출산 후에 직장인 여성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퇴사하여야 정상적인 영유아들을 보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출산 후에도 직장생활의 연속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보육시설 서비스 이용에 대한 금전적 문제들이 만족되어야 하지만 그만큼 요구가 충족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워킹맘들은 민간 보육시설보다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선호하고 있지만 전체 보육시설 중 국공립 시설의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하여 직장인 여성들은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산업화 사회의 진전으로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여성은 인구 재생산을 위한 출산의 노동과 동시에 경제적 생산을 위한 노동이라는 이중의 노동을 수행하고 있어 점차 건강부담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생식 건강의 부담으로 인하여 임신이 지속되지 못하고 정상출산에 이르지 못한 채 불가피하게 임신소모가 초래되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출산율 감소는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문화적 요인들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으며, 크게 인구학적 요인들로는 초혼연령의 증가와 미혼인구의 증가를 들 수 있으며,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는 교육비를 포함한 자녀양육비용 부담 증가, 소득 및 고용의 불안정, 육아지원 인프라 미흡, 주거 및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의 증가와 불임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문화적 요인으로는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양성평등관을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저출산의 원인에는 이혼율 증가, 산업화, 도시화의 영향, 가족계획정책의 영향 등도 포함된다.

특히 저출산 현상을 초래하게 된 것에는 문화적 요인도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가족형성의 지연과 약화는 무엇보다도 젊은이들의 가치관 변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문화적 요인으로서는 결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 변화 등의 가치관의 변화도 출산을 저하에 역할을 했다. 저출산에 관한 연구로는 현재 자녀수와 향후 출산여부에 대한 결정 요인을 살펴본 이인숙(2005)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몇 십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사회는 유교주의의 전통적인 사고관에 의해 강한 영향을 받아 가족생활에서 혈통을 중시해왔다. 그 결과, 대부분 조기에 결혼을 하였으며, 출산은 모든 남녀의 중요한 의무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혼 및 출산에 관한 보편적인 가치관은 현대에 들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우선 실증적인 연구들에 의하면, 교육참여와 경제활동참가가 증가하면서 혼인시기가 연기되고 있으며, 독신의 경향도 증가하고 있다. 교육 참여 자체는 결혼을 포함한 일반적인 사회생활의 시작시기를 지연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교육은 물리적 시간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의 여러 조건과 능력을 변화시키고 심리적 가치관의 변화를 추구하여, 결혼과 출산 행태에 직접 혹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교육수준이 결혼 여부와 시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서로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 고학력 여성들은 결혼의 잠재적 혜택을 초과하는 한계를 인식하고 결혼을 포기하게 된다고 한다. 이와 달리,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의사가 감소하고 있을지라도 대부분 여성은 교육수준과 상관없이 보편혼의 사회규범을 따르되, 미혼의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그 연령을 늦추고 있다는 것이다(Choe, Kim, Li, 1997).

고학력 여성들이 증가하고 부부간의 연령 차이가 점차 좁혀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고학력 고연령대의 여성들은 점차 결혼시장에서 배우자를 찾기가 어려워져 결국 혼인을 비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Palomba, Menniti, Caruso, 1997). 또한 결혼을 원하는 고학력 여성들이 결혼시기를 늦춘 결과, 교육수준 및 연령 등의 조건에서 적합한 배우자감을

찾지 못하여 결국 결혼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

혼인에 대한 개념의 시대적 변화를 고찰한 박민자(2004)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결혼의 의미는 변화하고 있으며 이를 세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 제도나 규범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는 압박이 사회적으로 용납됨과 동시에 개인들이 재빠르게 이를 수용하게 되었다. 둘째, 개인의 욕구나 필요에 의해서 결혼을 선택하게 되었으며, 선택의 기준은 철저하게 본인의 손익계산에 따르고 있다. 셋째, 개인의 욕구나 가치는 보다 더 구체화되면서 애정은 전제조건이고 그것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누리보겠다는 의지가 강해졌다. 다시 말하자면 한국사회에서 결혼이나 가족 형성의 의미가 제도적 압박에서 벗어나 합리적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되었다는 점에서 신가정경제론의 시각에서 결혼 의미의 변화를 엿볼 수 있다.

하지만 결혼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박이 이전에 비해 줄어들어왔다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비혼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결혼에 대한 의미 변화는 오히려 적절한 상대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게 되었다는 측면에 있어서 만혼에 영향을 주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와 결혼의 상관성을 연구한 Oppenheimer(1997)는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결혼에 대한 매력을 감소시킴에 따라 결혼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이것이 저출산을 야기하고 있다는 합리적 선택이론을 반박한다.

점점 맞벌이 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가내 성별 분화에 따른 노동은 더 이상 현재의 결혼 생활에 맞지 않으며 오히려 결혼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교육수준과 경제활동 참가 기회가 높은 집단일수록 결혼으로 인한 이득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능력을 가진 배우자를 원하고, 이것이 만혼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한경혜(1990)의 연구에서도 결혼 연령의 변화를 산업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가족 수준의 전략으로 보고 이러한 맥락에서 결혼과 저출산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또한, 김경신과 이선미(1998)의 연구는 결혼의 필요성이나 결혼의 목적, 가사분담이나 여성취업 등에서 전통적인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경향을 보여 주면서도 가부장적 결혼이데올로기가 미혼남녀의 결혼가치관 속에 여전히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는 결혼과정에 근대적 요소와 전통적 요소, 가부장적 관점과 양성 평등적 관점이 여전히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동시성의 비동시성으로 이러한 이중적인 경향은 상황에 따라 진보적이거나 전통적인 방식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함인희, 2001). 따라서 결혼의미의 변화를 결혼의 필요성이나 가족의 가치에 대한 부정으로 보는 관점에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일정 연령이 되면 무조건 결혼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규범이 효용성을 상실하게 된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규범이 효용성을 상실하는 순간, 개인들에게 강요하는 압박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결혼과 가족 형성에 따른 선택의 범위와 유보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넓어졌으며, 이것이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만혼화 현상을 빚어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삼식(2005)의 연구에서는 법률혼이 보편적이고 대부분의 출산이 법률혼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들어, 한국사회에서 만혼과 평생비혼은 출산율 저하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만혼은 출산 연령을 상승시키는 작용을 하며, 출산 연령 상승은 직접적으로 남아 있는 가임기간을 단축시킬 뿐 아니라 가임능력을 저하시켜 출생아수 단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만혼은 후천성불임증 등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 Roussel(1994)은 출산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경제적 요인, 문화적 요인, 그리고 역사적 동태 및 생활주기 요인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경제적 요인으로는 자녀 출산이 주거, 식량, 교육 등의 직접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모의 소득활동기회를 상실시키는 등의 간접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간주되어 결과적으로 부모의 출산에 관한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문화적 요인으로는 사회계층간 규범의 차이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 발생한 제2의 출산율 저하는 가

치관의 변화, 학생 및 여성의 이동 증가 등이 결혼뿐만 아니라 이혼 및 출산에 영향을 미쳐 나타나는 현상으로 풀이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역사적 동태 및 생활주기 요인으로는 출산행태가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해 경험된 전기적 모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많은 연구들은 출산행태에 사회문화, 경제, 교육, 가치관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UN(1995)의 연구에 따르면 교육이 출산행태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역이나 개발수준 및 문화적 조건 및 시기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대부분 연구들은 고학력 여성이 저학력 여성보다 출산력이 낮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Beets, 1997). 교육 참가는 그 자체로 혼인연령을 상승시켜 첫아이 출산시기를 늦추어 궁극적으로 전체 자녀수를 줄이게 된다. 교육은 다른 부문에의 영향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 Beets(1997)의 연구에 의하면 교육은 지식과 정보 및 새로운 사상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이는 노동시장과 사회적 지위에서의 여성의 능력과 기회를 고양시키는 역할을 하여, 태도와 행태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교육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고 결혼선호도를 낮추어 궁극적으로 자녀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모의 교육수준 향상은 자녀의 사망률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적은 수의 자녀를 선호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과거에는 고졸수준이 그리고 최근에는 대학이상 고학력층의 출생아수 감소에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다른 어떠한 변수보다 출생아수에 가장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히고 있다(김태현, 이삼식, 김동희, 2005). 많은 학자들은 현재 초저출산현상을 겪고 있는 국가들 대부분 가부장적이고 성분업적 역할규범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문화의 영향이 큰 것으로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아시아 국가 중 한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은 가부장적인 유교주의적 문화의 영향을 오랫동안 받아왔던 국가들이며, 독일어권 국가와 남부 유럽 국가들도 전통보수적인 가톨릭문화의 영향을 받아왔다

Atoh(1998)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주된 저출산의 원인으로 출산 및 양육의



기회비용과 일과 가정의 양립 곤란을 제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대부분 여성들은 전일제로 일하기를 원하고 직장에서의 승진을 추구하고 있으나, 결혼과 출산 시에는 가사와 자녀양육을 도맡게 되어 취업을 중단하게 되는 이른바 경력단절을 경험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들 여성들이 자녀성장 후 재취업을 원하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직업이나 소득을 가지는 것이 아주 어렵다. 이는 가구소득의 감소를 가져오며 기회비용으로 인식되어, 여성들은 결국 혼인 및 출산을 기피하게 된다. 특히, 고학력 여성일수록 행정, 경영, 전문가 등 상위직종에 종사할 개연성이 크고, 남성과의 임금 차이가 적어져 자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기회비용이 더 커지게 된다. 한국사회에서도 일과 가정 양립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전문직종이나 사무직종에 종사한 부인들의 출생아 수가 전체 평균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김태현, 이삼식, 김동회, 2005).

Beets(1997)의 연구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남성의 가사에 대한 역할이 변화하지 않아 저출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가사와 경제활동참가간의 양립이 더 큰 문제로 다가옴에 따라, 여성들은 결국 아이를 늦게 그리고 적게 가지려 하며 심지어는 자녀를 가지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또한 많은 연구들은 저출산 현상을 가사와 육아에 있어서의 남녀 간의 불평등과 연계시키고 있다. 대부분 연구들은 남녀 간 불평등의 지속은 출산율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남녀 간의 평등이 오히려 출산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즉, 남성의 가사의무를 강조하는 경우 여성의 자녀양육과 취업간의 양립이 용이하게 되어 자녀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면, 남녀평등 고취의 영향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여 과거에 비해 출산을 적게 하려는 경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녀 양육비용의 증가가 출산수준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여러 연구에서 제기되어 왔다. 자녀 양육비는 자녀양육을 위한 유무형의 비용으로, 음식물이나 의류, 교육비 등 자녀에게 지출하는 직접적인 화폐의 양과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시간이나 정신적, 육체적 노동과 같은 간접적인 지

출을 의미한다(Lazear & Michael, 1988). 이는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이나 순수한 경제적 부담으로 규정하기도 하지만, 포괄적으로 볼 때는 물자와 금전 등 유형적 지급의 의미와 자녀를 보호와 같은 무형의 의미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정귀호, 1987).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는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이 노동력 창출로서의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산업사회에서는 자녀를 하나의 인격체로서, 권리주체로서 간주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그렇기에 자녀의 양적인 측면보다 오히려 질적인 측면이 강조되면서 자녀교육비를 포함한 자녀양육비의 지출이 증가하였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경제발전의 초기단계에서는 자녀효용이 증가하고 비용은 낮아져 많은 자녀를 갖게 되며, 경제발전의 다음 단계에서는 소득증대로 인하여 자녀의 효용은 감소되고, 비용은 증대되어 소자녀 규범을 형성하게 된다고 하였다. 전통적인 농업중심사회에서는 자녀에 대한 효용이 비용보다 높기 때문에 다자녀 형성의 동기를 갖지만 사회발전에 따라 자녀의 효용은 감소하고, 비용은 증가하여 소자녀관 규범이 보편화된다.

자녀양육비의 증가로 인해 자녀의 경제적 가치는 감소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자녀의 필요성이 감소하여 출산율 감소현상이 심화되었다. Atoh(1998) 역시 일본의 사례를 들어, 교육비 증가가 부모가 젊어질 부담이 크기 때문에 부부는 양보다는 질을 우선하여 출산율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자식이 더 이상 노후보장을 위한 투자로 인식되지 않고, 단지 부부의 시간과 소득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인식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고용의 불안정 및 불경기도 저출산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영국에서는 1970년대 초 이래 직업의 불안정으로 인해 출산율이 저하되었으며, 스웨덴에서는 1990년대에 불경기로 실업률이 높아지고 사회복지비용이 삭감되어 그 영향으로 출산율이 감소되었다(Hoem, Britta, Jan M, 1996). Witt와 Wagner(1995)의 연구에서도 동독의 출산율이 통일 전 1.6명에서 통일 후에 0.7명으로 낮아진 이유를 고실업, 시장에서 노동가격저하 등의 사회경

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Billari와 Kohler(2004)에 의하면, 청년시절의 노동시장 불확실성과 불안한 경제적 전망은 부모의 집에 늦은 나이까지 머물게 하여 혼인연령을 상승시키고 출산율을 하강시키기 쉽다고 한다.

일부 연구들은 주거의 안정성이 출산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장혜경(2005)의 연구에 따르면 출산율이 높은 덴마크나 네덜란드의 경우 주거비 부담이 낮은 반면에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저출산 국가에서는 주거비 부담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높은 주택가격은 여성의 결혼연기 및 20~24세 여성의 둘째 아이 출산에 영향을 주지만 셋째 아이 이상의 출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Emisch, 1988). Heer(1966)의 연구에 따르면 국가 또는 거주지역의 인구밀도나 주택거주자의 절대적 주거밀도 또는 주관적 밀도 등 주거밀도 역시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더해 Felson과 Solaum(1975)은 단독주택에 비해 주거밀도가 높은 아파트 거주자들의 출산율이 낮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아파트 거주자의 출산율이 낮다고 일반화할 수 없으며, 문화적 환경이나 주택시장 등의 특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Booth(1976)의 연구에서는 토론토의 아파트 거주자와 출산력과 연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그리고 소득을 중요시하는 물질주의 만연과 개인주의 사상은 자녀 출산에 대한 이익을 찾지 못하는 여성들의 출산 감소 또는 무자녀 경향을 증대시킨다.

Freedman(1995)의 연구에 따르면 저출산이 경제적인 이유가 아닌 개인주의적 발상으로서 젊은 세대의 결혼 및 출산연기 등 사회·문화적인 이유에 의해 발생된다고 보고 있다. 경제성장으로 인해 생활이 풍족해지면, 안정주의와 개인주의가 가치관을 지배하게 되는데, 젊은 미혼층의 소비활동이 급격히 증가하여 결국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여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젊은 연령층은 부모의 집에서 안정적으로 직장에 다니고 일상생활을 어머니에 의존하며 소비생활을 즐기려는 경향이 높아 가족부양 의무를 지지 않는

일종의 귀족적 미혼이나 기생충적 미혼이 증가하여 결국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Atoh, 1998).

출산에 관한 경제모델 중 고려되어야 할 것은 가구의 출산결정에 관한 동태적 모델인데 이러한 동태적 모델은 부부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노동공급과 출산 및 소비를 장기적으로 결정한다는 가정에 입각하고 있다. 각각의 시점마다 효용함수와 예산제약식이 설정되어 있고 부부는 이러한 모든 것을 고려하여 생애전체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출산과 노동공급을 결정하게 된다. 동태적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은 동태적 모델이 부부의 출산 결정은 물론 출산시기의 결정에 관한 설명을 제공해준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모델(Hotz & Miller, 1988)에서는 자녀출산과 양육을 위한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이탈은 부부의 소득을 감소시키고 이러한 소득감소가 소비와 출산시기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 야기하는 비용은 노동시장에서의 이탈에 따른 여성의 장래소득 감소의 정도에 달려있다. 완벽한 자본시장 하에서 여성의 시장 활동에 필요한 능력이 자녀의 출산과 양육기간 동안에 감소하지 않는다면 부부는 자녀를 갖는 시기에 관해 무차별하다. 따라서 자녀의 출산시기의 결정은 효용극대화와는 무관하게 결정된다. 만약 결혼 당시 부인의 소득 능력이 작거나 거의 없고 시장 활동에 필요한 능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되는 경우 부인의 평생 소득능력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결혼생활 초기에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다. 반면 부인이 일정 정도 이상의 소득획득 능력을 가지고 있고 시장 활동에 필요한 능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되는 경우 출산시기를 늦추고 결혼 초기에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평생소득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된다. 따라서 완전한 자본시장의 가정 하에서 출산시기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인의 소득능력과 그 소득능력이 자녀의 출산과 양육기간 동안에 감소하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만약 불완전한 자본시장이라면 이 경우에는 완전자본시장의 경우와는 달리 남편의 소득이 출산의 최적시기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첫째는 여성의 소득능력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동안 감소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 경우 부부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출산 시점은 남편의 소득이 가장 높은 때, 즉 소비에 대한 소득의 한계효용이 가장 낮은 때이다. 남편의 소득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출산시기를 늦추는 것이 부부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자면 부부는 자녀의 출산을 자신들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작고 소위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소득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연기한다. 또 다른 경우는 여성의 소득능력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동안 감소하는 경우에 출산시기의 결정은 부부의 소비를 포기하는데 따르는 비용과 출산양육으로 인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상실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동태적 모형이 출산과 관련하여 제시하는 또 하나의 결론은 자녀의 출산과 양육비용의 변화가 출산간격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러한 문제는 첫째 아이의 출산과 둘째 아이 출산 사이의 간격이 부모의 효용극대화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효용은 자녀가 미래의 때 시기에 주는 효용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효용이다. 따라서 추가적인 자녀를 가지기를 원한다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출산간의 간격을 좁혀 첫째 아이 출산 이후 곧바로 두 번째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부모의 효용을 증가시킨다. 반면 동태적 효용극대화를 위해 부부는 소득이 높은 시점에서 아이를 출산할 경제적 유인이 있다. 따라서 자녀양육에 비용이 발생하고 이것이 부모의 소비를 감소시키는 경우 부모는 소득이 일정 수준으로 다시 증가할 때까지 추가적인 출산을 늦추어 출산간격을 조정하게 된다.

한편 저출산 정책 및 저출산 문제의 해결 방안에 관한 연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육 및 비용 부담, 가치관 변화 등의 저출산 원인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저출산 정책 방향을 제시한 박미혜(2006)의 연구, 저출산 관련 정책의 현황과 방향성을 검토한 서지원(2007)의 연구, 성과 경제활동에 따른 자녀 및 출산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근거로 저출산 대책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 엄기복(2007)의 연구, 정책효과성에 관한 주요 정책 집단의 인식 차이를 비교 연구함으로써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증적

으로 분석한 이명석 외(2012)의 연구, 저출산 정책의 도입시기와 예산, 주요 정책의 성과에 대한 출산율의 변화를 통해 저출산 정책을 평가하고 비전을 제시한 이삼식(2011)의 연구, 저출산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도를 통해 저출산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한 정성호(2012)의 연구,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여성의 노동권과 모성권 보장에 관한 저출산 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 민연경·이명석(2013)의 연구 등이 있었으며, 저출산 정책의 현황과 효과성, 정책의 발전방향, 저출산 실태 및 원인에 근거한 정책적 해결 방안의 제시 등에 관한 연구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강은주, 2010; 김민주, 2010; 박은미, 2007; 송태민, 2010; 유계숙, 2009; 이삼식, 2006b; 홍승아, 2010)

대부분의 연구에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을 정책의 수혜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여성을 정책의 수혜자로 인식하는 경향은 결국 여성을 양육의 주된 책임자로 인식하는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양한 사회 성원이 부담하기 보다는 여성 또는 정부가 부담하는 형태로 정책방안이 제시됨으로써 오히려 저출산 정책의 효과가 미흡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은현, 2011:23; 손승영, 2007:215-216; 이삼식, 2011:8; 정성호, 2009:174)

저출산 정책 및 저출산 문제의 해결 방안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통해 정부의 출산지원정책에 대한 한계점을 엿볼 수 있었으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즉 기혼여성의 출산 의지에 대한 패탄을 파악함에 있어 앞서 논의하였던 한국사회의 강한 가족주의적 경향, 노동에 대한 성불평등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인 배경에 대해 유념할 필요가 있다.

## 2.4. 출산의지에 관한 연구

‘의지’란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하기 보다는 의도적으로 특정 동기에 기초하여 의미를 부여하고,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행동하는 능력을 의미한다.(이신철, 2009) 즉, 본능이나 충동적인 행위와는 구별되는 의식적이고, 계획적이면서 자기결정적인 행위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의지’이다. (오석철·이신철, 2011)<sup>20)</sup>

즉, 개인의 행위는 특정 동기로부터 출발하여, 그 의미를 실현하기 위한 의지가 형성되고, 의지를 바탕으로 실제 행위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주요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출산연기’란 바로 출산행위에 대한 의지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행위에 대한 계획과 실현 가능성이 특정 요인에 의하여 미뤄지는 것을 의미한다.

계획적 행동이론(Planned Behavior Theory)에 의하면 출산의지의 정도와 행위의 실현 가능성 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비의도적 출산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실제 출산력보다 순수하게 의도적 출산행위를 파악할 수 있는 출산의지를 분석하는 것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오히려 효과적인 예측이 가능할 것이다. 물론 출산의지가 반드시 출산행위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출산의지에는 향후 출산행위에 대한 의도적인 계획 뿐만 아니라 실현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유용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김정석, 2007:98; 민주은, 2013:14; 박영애, 2013:7; 박현욱, 2013:35; 이정원, 2007:60-61; Ajzen, 1991:181)

이처럼 특정 동기를 근거로 의미를 부여하고,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현하고자 하는 의도적인 노력과 그 가능성이 바로 출산의지이다. 출산의지는 연구자에 따라 출산의도, 출산의향,

---

20) 서정연(2015), “출산자녀수별 기혼여성의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영남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pp.22-31.

출산계획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앞에서 논의한 ‘의지’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개인의 출산행위에 대한 핵심 개념으로 보고, ‘출산의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출산의지는 한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의 가치관, 문화, 제도 등에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되며, 사회적으로 동일한 환경에 놓여있더라도 개개인별로 달리 나타나는 자녀출산에 대한 동기에 따라 출산의지는 상이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처럼 기혼여성의 출산의지에는 수많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앞서 논의한 저출산 현상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근거로 크게 인구학적 요인, 가족 가치관 요인, 돌봄 여건 요인, 그리고 정책적 요인 등 네 가지 요인에 대한 접근을 바탕으로 관련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 2.4.1. 인구학적 요인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요인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면, 경제위기 이후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 연구한 공선영(2006)은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가운데 인구학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기혼여성의 출산의지를 분석하였다. 연구를 통해 초혼연령, 아들유무, 교육수준, 가계수준, 경제활동상태 등이 기혼여성의 출산의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가구의 경제적 안정과 성장가능성은 향후 출산의지에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으며, 경제위기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는 출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따른 자녀출산의지에 관해 연구를 실시한 이소영(2008)의 경우 인구통계학적 변수(연령, 교육수준, 가계소득), 결혼관련 변수(결혼지속기간, 자녀수, 이상적인 자녀수, 육아조력자, 결혼 후 자녀출산 시기), 일관련 변수(취업여부, 직업, 주당 근무시간), 가치관 변수(성역할태



도, 일·가정 선호도, 일·가정 만족도)에 의하여 자녀출산의지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분석결과 연령, 자녀수, 이상적인 자녀수, 취업, 가정 선호도 등이 기혼여성의 자녀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특히 취업 기혼여성의 경우 육아조력자에 대해, 미취업 기혼여성의 경우 가계 소득에 대해 각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선형(2009)은 중년층의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자녀관련 변수(연령, 성별), 부인의 취업관련 변수(취업상태, 근로조건), 경제적 변수(소득, 인식)등과 출산의지 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분석결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자녀교육비에 대한 부담과 함께 출산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계수준은 자녀의 출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서 경제적인 어려움은 기혼여성의 출산의지를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인구학적 요인에 초점을 두고 추가자녀 출산의지에 대해 살펴본 임현주(2013)의 연구에 따르면 인구·사회학적 변수(초혼연령, 결혼상태 유지기간, 가구형태), 경제적 변수(어머니 종사상의 지위, 월 가구소득, 부동산 총액, 부채 총액), 양육·출산 변수(모유수유여부, 출생순위, 이상자녀의 수, 기대자녀의 수)등에 따라 추가자녀 출산의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혼여성의 인구학적 요인은 동일한 사회·문화적 배경에서도 자녀출산에 대한 동기를 달리할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기혼여성의 출산의지에는 연령, 경제활동상태, 가계수준 등의 인구학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연구에서 통제변수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공선영, 2006; 김일옥·왕희정·정구철·최소영, 2011; 박영애, 2013; 배정연·홍석자, 2010; 이소영, 2008; 이선형, 2009; 이정원, 2009; 임현주, 2013)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기혼여성의 연령과 경제활동여부, 상대적 가구소득, 주거비 부담 등의 경우 가구의 출산의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인식하여 독립

변수로 활용하고자 한다.

#### 2.4.2. 가족 가치관 요인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가치관 요인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면, 기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의지와 출산기피 요인에 대한 접근을 시도한 마미정(2008)의 연구에서는 인구학적 특성, 자녀가치관, 자녀양육지원 등이 주된 요인으로 정의되었으며, 자녀가치관의 경우 정서적 자녀가치관, 개인적 자녀가치관, 사회적 자녀가치관으로 구분되었다. 정서적 자녀가치관의 경우 기존 자녀를 위한 추가출산과 같은 자녀 자체에 대한 필요성으로 해석할 수 있고, 개인적 자녀가치관의 경우 자녀양육을 위한 경제적 여력, 자녀양육에 대한 자신감 등과 같은 자녀양육에 대한 가능성으로 해석되며, 사회적 자녀가치관의 경우 남편 또는 주위의 권유 등으로 인한 자녀출산행위에 대한 중요성으로 해석된다. 이 가운데 정서적 자녀가치관은 아내와 남편 모두에게 제1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자녀양육지원의 경우 남편에 비해 아내에게 더욱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정원(2009)의 경우 취업 기혼여성의 향후 출산의지가 어떠한 경로로 결정되는지를 규명함에 있어 자녀가치관의 영향력에 주목하였으며, 자녀가치관을 개인주의적 자녀가치관과 집단주의적 자녀가치관으로 구분지어 살펴보았다. 개인주의적 자녀가치관의 경우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한 가치, 자기 자신과 부부관계를 위한 자녀의 필요성 등과 같은 자녀에 대한 선호도로 이해하였고, 집단주의적 자녀가치관의 경우 가족 또는 집안, 그리고 사회를 위한 자녀출산의 가치와 같은 자녀출산에 대한 의무로 이해하였다. 분석결과 자녀가치관은 출산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향력에 있어서는 개인주의적 자녀가치관이 출산의지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개인의 심리사회적 요인들을 중심으로 출산의지와 의 관계를 살펴본 송영

주·이주옥·김준경(2011)의 연구는 아동변인(자녀의 기질), 개인변인(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우울감), 역할변인(부부역할, 부모역할)을 출산의지의 주된 영향요인으로 파악하였다. 여기서 부부역할은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으로 구분하였고, 부모역할은 양육 스트레스, 부모됨의 태도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기혼여성의 추가자녀 출산의지에는 부모됨의 태도가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취업 기혼여성의 경우 결혼만족도가 추가적인 설명요인으로 나타난 반면에 미취업 기혼여성의 경우 어머니의 우울감이 추가적인 설명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여성의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던 이현옥(2011a)의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배경요인(학력, 소득), 경제적 요인(양육비, 주택비, 일과 양립, 직장복귀), 가치관 요인(자신의 삶, 무자녀 소신, 부부의 삶, 자아성취, 만혼성향), 사회적 요인(사회적 지위, 고용안정, 정부정책, 보육시설), 직장근무 환경요인(출산휴가, 탄력근무), 정책지원 요인(사회보험, 보육서비스, 출산의료, 친화적 문화환경)등에 의하여 여성의 출산의지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분석결과 소득수준, 일과 양립, 자신의 삶, 무자녀소신, 부부의 삶, 자아성취, 만혼성향, 고용안정, 정부정책, 보육시설, 탄력근무, 사회보험, 보육서비스 등의 요인들이 여성의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여러 요인들 가운데 가치관 요인이 여성의 출산의지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를 출산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생활의 변화를 가치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 출산의지가 보다 강해진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기혼여성의 출산의지에는 자녀에 대한 가치, 자녀출산의 의무, 부모됨의 가치 등 가족 가치관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마미정, 2008; 송영주 외, 2011; 윤미라, 2006; 이삼식·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이삼식, 2006a; 이정원, 2009; 이현옥, 2011a; 최향준, 2013) 특히 자녀출산에 있어 과거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집단주의적 자녀가치관은 최근 들어 그 영향력이 많이 약화되었으며,

앞서 언급하였던 정서적 자녀가치관이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 잡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마미정, 2008; 윤미라, 2006:25)

#### 2.4.3. 돌봄 여건 요인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돌봄 여건 요인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면, 여성의 출산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실증적 연구를 실시한 이미란(2008)의 경우 자녀교육 및 양육에 대한 부담이 출산의지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특히 자녀에 대한 비용에 있어 경제적인 비용 외에도 정신적 또는 신체적 비용 또한 파악하여 연구에 활용하였으며, 그 결과 자녀에 대한 비용은 여성의 출산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자녀에 대한 양육비가 향후 출산의지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고, 경제적 지원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이성림(2010)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자녀에 대해 사교육비를 포함한 양육비의 지출수준이 높을수록 둘째 자녀에 대한 출산의지가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나리(2013)의 경우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중심으로 기혼여성의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 아버지의 양육참여 정도는 기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의지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어머니의 양육에 대한 노동부담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향후 출산의지를 고취시킨다고 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양육스트레스와 보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중심으로 추가자녀 출산의지를 살펴본 강은마·김순규(2011)의 연구에서는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이 추가자녀 출산의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취학 이전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하여 추가자녀를 출산하는 데 보다 회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영선·이연숙(2014)의 연구에 의하면 조부모의 자녀 돌봄 및 지원정도는 기혼여성의 추가자녀 출산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부모와 함께 동거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추가자녀의 출산가능성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조부모가 이를 대체함으로써 기혼여성의 출산의지를 보다 유연하게 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기혼여성의 출산의지에는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 부모로서 자녀를 돌보고 책임지는 것에 대한 부담 등 돌봄 여건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가족 내의 자녀 돌봄에 대한 분담비중에 따라 또는 부모의 자녀 돌봄에 대한 노동을 대신 수행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경우에 따라 기혼여성의 출산의지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강은마·김순규, 2011; 박영애, 2013; 배광일·김경신, 2012; 신나리, 2013; 이미란, 2008; 이성림, 2010; 주효진 외, 2010; 한영선·이연숙,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돌봄 여건 요인을 비용부담과 노동부담으로 구분 짓고, 노동부담에 있어 가족 내 자녀 돌봄에 대한 분담정도와 돌봄을 조력 받을 수 있는 여력(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부모와의 동거 여부) 등을 포함하고자 한다.

#### 2.4.4. 정책적 요인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적 요인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면, 출산지원 정책이 가임여성의 요구조건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앞으로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한 신효영·방은령(2009)의 경우 시행 중인 출산지원정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파악

하고자, 출산지원정책에 대한 이해와 효과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출산지원정책의 제감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출산을 격려하는 정책 내용(경제지원, 사회환경개선)을 분석함으로써 출산지원정책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수혜대상자들의 대부분이 출산지원정책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나 혜택을 경험하지 못하였으며, 출산지원정책의 혜택을 경험한 대부분은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출산지원정책의 내용이 수혜대상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출산을 격려하는 정책에 있어 경제적인 지원(보육비, 교육비, 양육비)보다 사회적 환경개선(보육서비스, 교육정책, 사회분위기)이 더욱 요구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정책적 지원에 대한 수혜의 필요성은 개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기혼여성의 출산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한 정책적 지원에 있어 출산지원정책의 수혜 가능성 또한 중요하게 작용할 것을 짐작케 한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기혼여성의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배정연·홍석자(2010)의 연구에서는 남녀 평등의식, 교육환경 부담감, 육아보육 지원정책, 직장 내 가족 친화적 분위기 등이 자녀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남녀 평등의식, 육아보육 지원정책, 직장 내 가족 친화적 분위기가 자녀출산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를 통해 출산지원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만큼 출산지원정책의 수혜가능성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짐작할 수 있다.

정부의 출산지원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기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구한 김일옥 외(2011)의 연구에 따르면 정부의 출산지원정책은 미취업 기혼여성의 출산의지보다는 취업 기혼여성의 출산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출산지원정책의 차별적 제시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배광일·김경신(2012)의 경우 가족 가치관(결혼관, 성역할관, 자녀관, 남아 선호관, 효도관, 가족주의 가치관)과 출산지원정책(출산정책인지도, 출산정책 수혜경험)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남아선호관과 효도관 그리고 출산정책수혜경험이 출산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 가운데 출산정책수혜경험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출산지원정책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출산지원정책의 필요성과 함께 출산지원정책의 수혜정도가 기혼여성의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기혼여성의 출산의지에는 출산지원정책에 대한 인식, 출산지원정책의 수혜경험과 만족도, 출산지원정책의 필요성, 수혜가능성 등의 정책적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김일옥 외, 2011; 배광일·김경신, 2012; 배정연·홍석자, 2010; 신효영·방은령, 2009)그 가운데에서도 출산지원정책에 대한 지지도와 수혜가능성은 기혼여성의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핵심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간접적 출산지원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보육인프라(국공립 어린이집)이 출산을 및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 제3장 연구 방법

### 3.1.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앞선 가구형성(결혼 및 출산)에 관련된 개념 및 이론 고찰을 바탕으로 경제적 요인(특히 상대적 임금과 주거비 부담)이 가구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하는 근본적인 연구 질문으로부터 출발한다. 기존의 가구형성에 관한 경제적 요인에 대한 분석은 거의 대부분 절대적 임금에 국한되어 있었고 주거비 부담의 경우에도 주택가격(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모두)의 절대적인 크기에만 논의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에서 벗어나 임금의 경우에는 지역 내 상대적 임금과 소득불평등 정도가 가구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주거비 부담의 경우에는 주택가격 대신에 주택마련 비용 부담( $PIR = \text{Price to Income Ratio}$ )가 가구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의 한계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불평등과 주거비 부담은 가구형성(혼인율과 출산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기존의 연구에서 가구형성(혼인율과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에 대한 주된 관심은 가구 또는 개인의 절대적 소득(또는 임금)과 지역의 주택가격(매매가격, 전세가격 또는 매매가격지수, 전세가격 지수)였다. 본 연구



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발전시켜 소득불평등(상대적 임금, 소득의 지니계수)과 가구의 소득을 고려한 주거비 부담(PIR)이 지역의 가구형성(혼인율과 출산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으로 분석한다.

둘째, 사회 경제적 요인이 미혼 남녀의 결혼 의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미혼남녀의 초혼연령 상승과 비혼 상태의 지속은 저출산 문제의 핵심 원인 중 하나이다. 그런데 이러한 초혼연령의 상승과 비혼 상태의 지속은 일반적으로 결혼과 결혼생활 지속에 필요한 사회적 자원부족의 측면과 결혼을 장려하는 사회적 규범 약화의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조혼인율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고 향후 여성의 결혼에 대한 인식이 더욱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변화되어 혼인율이 낮아질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결혼의향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가장 큰 이유는 결혼의향에 대한 서베이 자료의 부족으로 계량적 분석에 제한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저출산 문제가 본격화 된 2000년대 중반 이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와 「여성가족패널조사」에서 결혼의향을 물어보는 질문이 포함되면서 연구 결과가 점차 축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 지역, 연령, 자산, 임금,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가치관 등이 미혼 남녀의 결혼 의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미혼 남녀의 임금수준을 절대적 임금이 아닌 비교집단과의 상대적 임금으로 표준화 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셋째, 가구의 경제적 상황(상대적 임금과 주거비 부담)은 신혼부부의 출산 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정부에서도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계획’을 작성하고 2006년 이후 수십조에 달하는 예산을 투자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정책을 통하여 출산에 의도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우선 출산이 무엇에 의하여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신혼부부들의 자녀를 가지는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은 단순히 경제적 요인에만 국한되어 있지는 않을 것이지만 아동수당의 지급, 보육비용에 대한 세금공제 및 보조금 지원 등 주요한 출산장려정책이 기본적으로 출산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출산의 경제적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에서는 신혼부부가구의 경제적 상황(특히 상대적 임금과 주거비 부담)이 신혼부부의 출산 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다른 분석과 마찬가지로 신혼부부가구의 절대적 임금 수준이 아닌 비교집단과의 상대적 임금으로 표준화 하여 분석을 진행하며, 현재 자녀를 가지고 있는 가구와 자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가구를 구분하여 분석한다.

### 3.2. 연구 가설

본 절에서는 앞서 살펴본 연구문제로부터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가설을 연구문제와 함께 순차적으로 제시한다.

연구문제 1. 소득불평등과 주거비 부담은 가구형성(혼인율과 출산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가설 1. 소득불평등과 주거비 부담은 가구형성 의지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할 것이며 이는 혼인율과 출산율의 감소로 나타날 것이다.

가구형성(혼인율과 출산율)에 대한 경제적 요인 중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은 가구소득과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주된 관심요인인 소득불평등과 주거비 부담은 개인의 가구형성 의지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할 것이며 이는 지역의 혼인율과 출산율을 감소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소득불평등은 계층이동가능성을 저하시키는 주된 요인 중 하나이며 이는 개인의 결혼과 출산의 포기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많은 조사에서 밝혀진대로 결혼과 출산에 있어 가장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주거비(본 분석에서는 PIR)의 상승 또한 가구의 형성 의지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는 지역의 혼인율과 출산율을 감소시킬 것이다.

연구문제 2. 사회 경제적 요인이 미혼 남녀의 결혼 의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가설 2. 사회 경제적 요인이 결혼 의향에 미치는 영향은 남녀가 서로

상이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 지역, 연령, 자산, 임금,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가치관 등이 미혼 남녀의 결혼 의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은 성별에 따라 서로 상이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가정경제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성에 비해 남성이 자산이나 임금수준에 대한 중요도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 고용의 안정성이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가치관도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3. 가구의 경제적 상황(상대적 임금과 주거비 부담)은 신혼부부의 출산 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가설 3. 가구의 상대적 소득 및 주거비 부담은 출산 의지를 약화시킬 것이며 이는 현재 출산자녀의 유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문헌연구나 설문조사에 따르면 신혼부부가구의 출산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 중 가장 큰 부분은 가구의 소득과 주거비 지출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가구의 출산에 대한 의지는 높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것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이 문제는 부모가 자녀의 수나 출산 시기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여건을 고려하여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결정을 내린다는 경제학적 가정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소득이 증가하고 재화의 가격이 변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재화에 대한 수요는 증가한다. 그러나 자녀의 경우 양육시간의 기회비용이 소득과 연결되

어 있다. 부모의 시간 가치 상승은 자녀의 ‘가격’(직접적 양육비용과 시간의 기회비용의 합)을 증가시킨다. 즉, 부모 소득의 변화는 자녀양육시간의 기회비용과 가격, 그리고 자녀와 기타 재화와의 상대가격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녀에 대한 수요는 이러한 소득 및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 변화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부모의 소득 상승으로 인한 자녀 수요 증가가 자녀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요 감소를 능가하지 못하면 자녀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고 출산율은 하락한다. 그러나 부모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소득 수준의 상승으로 인해 자녀를 더 갖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자녀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 감소를 별충할 수 있게 되고, 이때 출산율은 상승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예상되는 결과는 상대적 소득이 낮을수록, 주거비 부담이 높을수록 신혼부부 가구의 출산 의지는 약화될 것이라는 것과 이는 현재 자녀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다.

### 3.3. 분석의 틀

#### 3.3.1. 분석대상 및 범위

본 연구는 크게 거시적인 차원에서 소득불평등과 주택마련 비용 부담( $PIR = \text{Price to Income Ratio}$ 로 측정) 등의 경제적인 요인들이 지역의 혼인율과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과 미시적인 차원에서 소득불평등과 주거비 부담 및 기타 경제적인 요인들이 개인의 결혼 의향 및 신혼부부 가구의 출산 지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며 각각은 분석 단위와 분석 대상에 따라 세분화 된다.

미시분석 중 개인의 결혼 의향의 경우 경제적 요인이 남녀 전체의 결혼 의향에 미치는 영향, 남자와 여자 각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남자와 여자에 결혼의 의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차이를 보고자 하였다.

또한 신혼부부가구의 출산 지연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에는 조사시점에 자녀가 없는 무자녀가구와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는 유자녀가구의 출산지연에 관한 요인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경제적 요인이 지역의 혼인율 및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써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전국으로 하되, 주요 연구 자료의 특성을 반영하여 시도 혼인율 및 합계출산율 분석에서는 15개 광역시·도(제주도 및 세종시 제외)를 공간적 범위로 한정하였다. 또한 합계출산율 분석의 경우 분석단위를 세분화하기 위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공간적 범위로 하였다.

미시분석의 경우 결혼 의향 분석(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2015)과 출산 지연 분석(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 패널조사 2015) 모두 전국을 공간적 범위로 한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기본적으로 자료구득이 가능한 모든 기간으로 설정한다. 시도 혼인율 및 합계출산율 분석의 경우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총 8년을 시간적 범위로 하고 서울시 자치구 합계출산율 분석의 경우 임대주택을 변수로 포함하는 경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임대주택을 변수에서 제외한 경우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총 12년이다. (구득 가능한 시군구 단위 임대주택 재고 통계가 2012년부터임)

미시분석의 경우 결혼 의향 분석(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2015)과 출산 지연 분석(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 패널조사 2015) 모두 분석데이터의 제공 시점인 2015년을 시간적 범위로 한정한다.

### 3.3.2. 분석의 흐름 및 방법

본 연구의 분석의 흐름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크게 경제적 요인이 결혼 및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다. 각각 거시분석 : 시도별 혼인을 결정 요인, 미시 분석 : 미혼 남녀 결혼 의향 요인과 거시분석 : 시도별 합계출산율 결정 요인, 서울시 자치구별 합계출산율 결정 요인, 미시 분석 : 신혼부부가구 출산 지연 요인에 대한 분석으로 나뉘진다.

구체적으로 실증분석을 통해 상대적 임금과 주거비 부담이 결혼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미시 연계 분석으로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먼저, 거시적으로 15개 광역시·도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도별 혼인을 결정 요인을 분석한 후 미시적으로는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실태조사(2015)를 이용하여 개인단위의 결혼 의향 영향요인을 도출한다.

다음으로는 비슷한 맥락으로 상대적 임금과 주거비 부담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미시 연계 분석을 통해 규명한다. 먼저, 거시적으로 15개 광역시·도 데이터를 이용한 시도별 합계출산율 결정 요인과 서울시 자치구별 합계출산율 결정 요인을 분석한 후 미시적으로는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 패널조사(2015)를 이용하여 가구단위의 출산 지연 요인을 밝힌다.

표 4. 분석의 흐름

실증 연구	제4장 경제적 요인이 결혼에 미치는 영향
	4.1 거시 분석 : 시도별 혼인율 결정 요인 4.2 미시 분석 : 미혼 남녀 결혼 의향 요인
	제5장 경제적 요인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5.1 거시 분석 : 시도별 합계출산율 결정 요인 5.2 거시 분석 : 서울시 자치구별 합계출산율 결정 요인 5.3 미시 분석 : 신혼부부가구 출산 지연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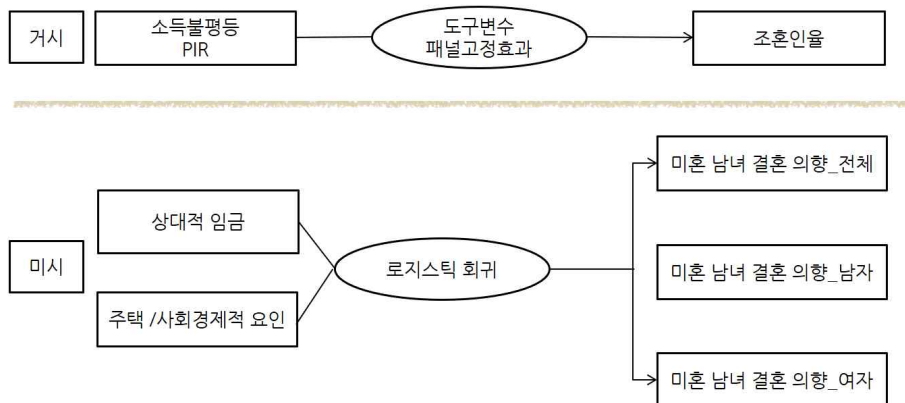


그림 1. 경제적 요인이 결혼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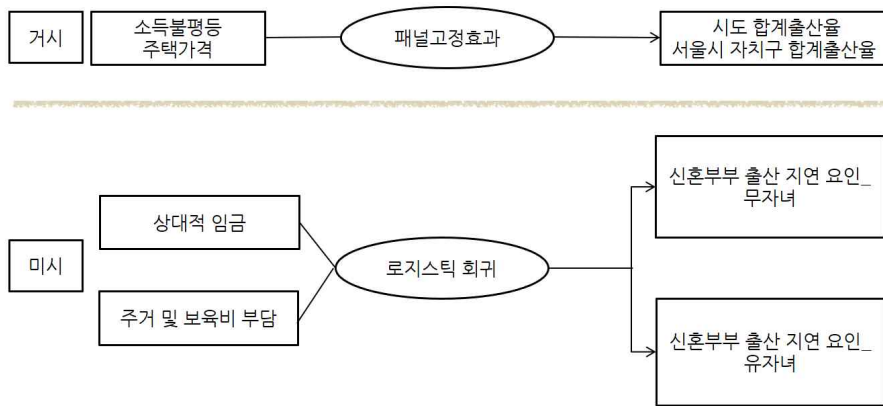


그림 2. 경제적 요인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 제4장 경제적 요인이 결혼에 미치는 영향

### 4.1. 거시 분석 : 시도별 혼인율 결정 요인

#### 4.1.1. 자료 탐색 및 기초 분석

거시적인 관점에서 경제적 요인이 시도별 혼인율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지역별 혼인율 및 지역 경제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구득 가능한 자료는 주로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인구)와 한국감정원의 평균 매매가격/전세가격(주택), 한국노동패널 데이터의 지역별/성별 임금, 가구의 소득(소득) 자료가 있다.

통계청의 2015년 혼인·이혼 통계를 살펴보면 혼인 건수는 30만 2천 8백건으로 전년대비 0.9%(2천 7백건) 감소하였고 조(粗)혼인율(인구 1천 명당 혼인 건수)은 5.9건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이다.

남녀 모두 초혼인 부부는 전체 혼인의 78.7%, 남녀 모두 재혼은 11.5%를 차지하였고 평균초혼연령은 남자 32.6세, 여자 30.0세로 전년대비 각각 0.2세 상승하였다.(여자의 평균초혼연령이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하였다.)

시도별 조혼인율은 세종(8.2건), 서울(6.5건), 울산(6.4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초혼연령은 남녀 모두 서울(남자 33.0세, 여자 30.8세)이 가장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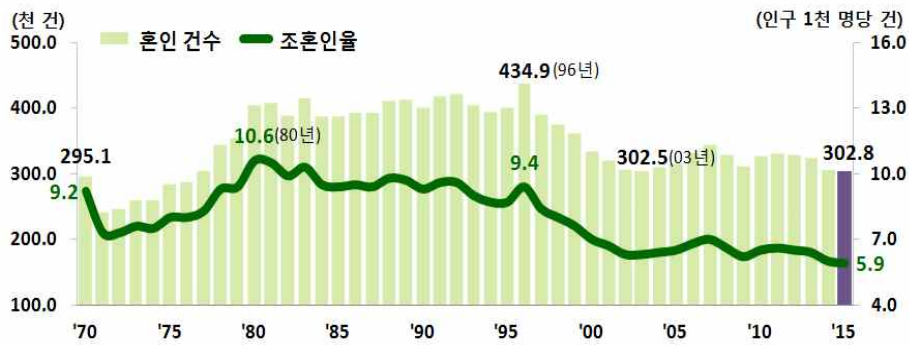


그림 3.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추이(1970-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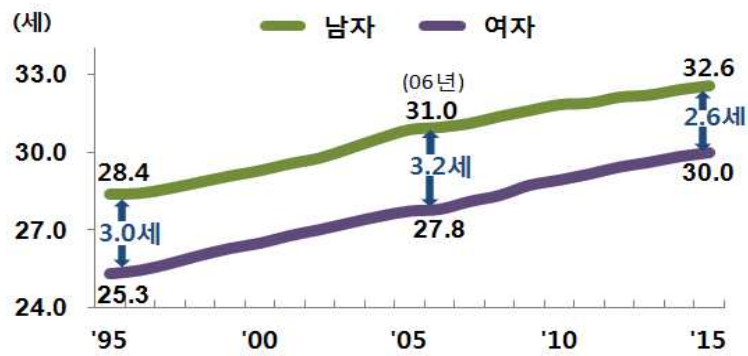


그림 4. 평균초혼연령(1995-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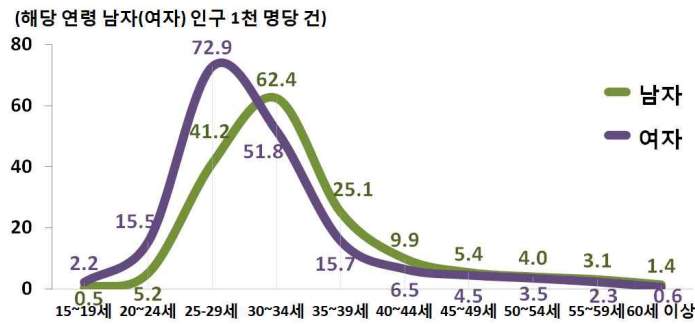


그림 5. 연령별 혼인율(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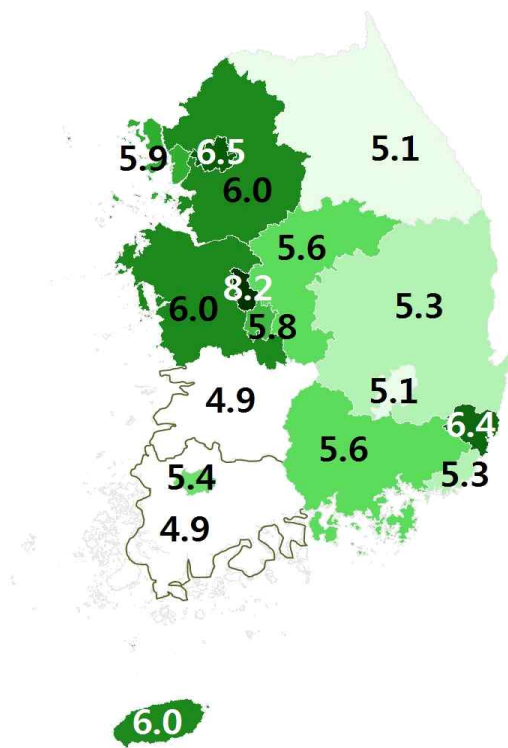


그림 6. 시도별 조혼인율(2015)

분석에 사용되는 주요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조혼인율, 평균 매매가격/평균 전세가격과 같은 자료들은 통계청 및 한국감정원에서 공표한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PIR(Price to Income)의 경우 지역의 평균매매가격은 한국감정원의 자료를 사용하였고 지역의 평균가구소득은 한국노동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직접 가공하였다. 남성의 임금, 여성의 시간당 임금, 가구의 소득의 경우도 한국노동패널 데이터를 직접 가공하여 사용하였다.

지역의 소득불평등을 측정하는 변수로 사용된 Gini계수(또는 임금의 표준 편차) 역시 한국노동패널의 개별 가구소득 및 임금 데이터를 가공하여 변수로 사용하였다.

표 5. 시도별 혼인율 결정 요인 자료

요인	해당 자료	자료 출처
조혼인율	지역의 1년간 혼인건수/주민등록연앙인구	통계청
평균 매매가격/ 평균 전세가격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	한국감정원
PIR(Price to Income Ratio)	지역의 평균매매가격/지역의 평균가구소득	한국감정원 및 한국노동패널
남성 임금	임금근로자의 경우 월평균 임금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월평균 소득을 연소득화	한국노동패널
여성 시간당 임금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월평균 임금*12)/(주평균근무시간*52)	한국노동패널
가구소득	가구의 연간 근로소득	한국노동패널
Gini계수(가구/남성임금/여성시간당임금)	개별 가구소득 및 임금의 Gini계수 ->소득불평등 측정	한국노동패널
실업률	지역의 남녀 전체 실업률	통계청

#### 4.1.2. 연구가설 및 분석 방법

연구가설 : 소득불평등과 주거비 부담은 가구형성 의지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할 것이며 이는 혼인율의 감소로 나타날 것이다.

소득불평등과 주거비부담이 결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도별 혼인율 결정 요인을 규명하였다. 분석의 공간적 범위는 전국으로 하되, 주요 연구 자료의 특성을 반영하여 15개 시도(제주도 및 세종시 제외 - 제주도와 세종시의 경우 노동패널 응답 데이터가 소수에 불과해 평균임금 및 Gini 계수를 추정하는데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음)로 한정하였으며 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데이터가 구득 가능한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이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위하여 2008년~2015년 우리나라 15개 광역시도

단위의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패널 데이터란 횡단면 데이터와 시계열 데이터가 결합된 자료를 의미하며, 패널 데이터의 경우에는 연도별 지역에 대한 정보와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에 관한 정보도 포함된다.

패널 분석의 장점은 먼저 동일한 개체에 대해서 반복하여 측정된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통계값에 대한 신뢰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그리고 회귀분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누락변수(omitted variable)의 문제를 줄이므로 패널 분석을 통해 얻어진 추정치들의 효율성과 신뢰성이 커지게 된다. 즉, 패널 분석은 회귀분석과 시계열 분석의 한계점을 보완한 것으로 패널 분석은 각각의 분석보다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정확한 추론이 가능하다. 한편 패널모형은 개체 간 특성과 시점별 차이에 대한 가정에 따라 유형화 될 수 있다. 즉, 개체 특성이나 시간 특성의 효과를 상수로 가정하는 경우 고정효과(fixed-effect) 모형을 사용하며, 개체 특성효과와 시간 특성효과를 확률항으로 가정하는 경우에는 확률효과(random-effect) 모형을 사용한다. 확률효과 모형은 고정효과 모형과 비교하여 모든 오차항이 독립적이고 등질적으로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하며, 개체 특성 효과가 설명변수와 상관성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이희연 등, 2014)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 결과 조혼인율 결정모형에서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시도 혼인율 모형 하우스만 검정 결과

	FE(b)	RE(B)	Difference (b-B)	S.E.
PIR(Price to Income Ratio)	-.1422207	.0130348	-.1552555	.0469495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	-4.384695	-3.085946	-1.298749	.3915682
실업률	-.1849006	-.1281786	-.0567219	.0114596
남성임금표준편차	-7.92e-06	-9.46e-06	1.54e-06	.
여성시간당임금 표준편차	-.0216107	-.0235264	.0019157	.

b = consistent under Ho and Ha; obtained from xtvreg

B = inconsistent under Ha, efficient under Ho; obtained from xtvreg

Test: Ho: difference in coefficients not systematic

$$\text{chi2}(4) = (b-B)'[(V_b-V_B)^{-1}](b-B) = 15.80$$

$$\text{Prob} > \text{chi2} = 0.0033$$

(V\_b-V\_B is not positive definite)

또한 분석의 주요 변수인 PIR의 경우 지역의 평균주택가격과 지역의 평균 가구소득으로 가공한 변수인데 기타 다른 변수들과의 내생성이 발생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패널모형으로는 일치추정량을 얻을 수 없으므로 도구변수 (instrumental variables)를 이용하여 도구변수 패널모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 4.1.3. 분석 결과

시도별 혼인율 결정 요인에 관한 도구변수 패널고정효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

표 7. 시도 혼인율 모형 : 도구변수 패널고정효과

Number of obs = 120		Wald chi2(5) = 100715.56		
Number of groups = 15		Prob > chi2 = 0.0000		
종속 변수	조혼인율			
독립 변수	Coef.	Std. Err.	z	P>z
PIR(Price to Income Ratio)	-.1422207	.0681826	-2.09	0.037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	-4.384695	.8827101	-4.97	0.000
실업률	-.1849006	.0519991	-3.56	0.000
남성임금표준편차	-7.92e-06	4.08e-06	-1.94	0.052
여성시간당임금 표준편차	-.0216107	.0112404	-1.92	0.055
_cons	10.20356	.8212055	12.43	0.000
sigma_u	.7900073			
sigma_e	.20577679			
rho	.93646376 (fraction of variance due to u_i)			
F test that all u_i=0:	F(14,100) = 32.88		Prob > F = 0.0000	
Instrumented:	PIR			
Instruments:	실업률 남성임금표준편차 여성시간당임금표준편차 로그평균주택가격 로그가구소득			
R-sq	within		0.4355	
	between		0.1769	
	overall		0.0542	

조혼인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도구변수 패널고정효과 모형에서 주택 관련 변수와 조혼인율의 관계를 보면 PIR와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PIR와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 모두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시도 단위에서 PIR나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상승하는 경우에 조혼인율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결국 주택가격상승은 미혼남녀들의 결혼을 어렵게 만드는 큰 요인



중에 하나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혼부부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매매가보다는 전세가에 더욱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높아질수록 조혼인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소득불평등의 대리변수인 남성임금표준편차와 여성시간당임금표준표차 모두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경제적 불평등이 결혼 의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암시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의 실업률 역시 조혼인율에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고용불안정성을 해결하는 것이 조혼인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는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다.

## 4.2. 미시 분석 : 미혼 남녀 결혼 의향 요인

### 4.2.1. 자료 탐색 및 기초 분석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2015에 따르면 미혼남녀의 결혼의향, 결혼계획연령, 배우자 조건과 결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통계는 다음과 같다.<sup>21)</sup>

#### 1) 결혼의향

미혼남녀(20~44세)를 대상으로 결혼 의향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미혼남성의 74.5%, 미혼여성의 64.7%가 결혼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미혼남성의 9.9%, 미혼여성의 13.9%로 나타났다. 요컨대 미혼여성이 미혼남성에 비해 본인의 결혼에 대하

---

21)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pp.383-399.

여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이었다.

거주지에 따른 차이는 미혼남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미혼남녀 모두 고연령층일수록 결혼 의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과거에는 결혼할 생각이 있었으나 현재는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고연령층일수록 상대적으로 높았다.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미혼남녀 모두에게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는데, 저학력층일수록 결혼 의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저학력인 경우 결혼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생각으로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짐작된다.

미혼남녀 모두 비취업 중인 경우에 비해 취업하고 있는 경우에 결혼 의향이 없다고 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미혼남녀들이 경제적 독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특히 여성인 경우 결혼 후 경력 단절 등 기회비용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본인의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표 8. 미혼남녀(20~44세)의 일반특성별 결혼 의향

(단위: %, 명)

구 분	결혼할 생각이 있다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모르겠다)	계	(명)
미혼남성 전체	74.5	7.8	2.1	6.0	9.6	100.0	(1,096)
거주지( $\chi^2=11.5$ )							
대도시	71.5	8.2	2.4	6.0	11.9	100.0	( 536)
중소도시	76.9	6.7	1.7	6.7	8.0	100.0	( 402)
농촌	79.0	9.6	1.9	3.8	5.7	100.0	( 157)
연령( $\chi^2=103.3^{***}$ )							
20~24세	79.5	2.7	2.2	9.6	6.0	100.0	( 365)
25~29세	79.3	4.2	2.5	6.0	8.1	100.0	( 285)
30~34세	74.1	12.7	0.5	3.2	9.5	100.0	( 220)
35~39세	65.9	15.9	2.9	2.9	12.3	100.0	( 138)
40~44세	52.8	16.9	4.5	1.1	24.7	100.0	( 89)
교육수준( $\chi^2=38.1^{***}$ )							
고졸이하	69.3	12.0	1.4	5.3	12.0	100.0	( 283)
대학재학	80.6	2.4	2.8	9.3	4.8	100.0	( 289)
대졸이상	74.0	8.6	1.9	4.6	10.9	100.0	( 524)
취업여부( $\chi^2=14.9^{**}$ )							
취업	74.4	9.7	1.4	4.6	10.0	100.0	( 652)
비취업	74.7	5.2	2.9	7.9	9.3	100.0	( 443)
미혼여성 전체	64.7	8.8	5.1	7.7	13.8	100.0	(1,287)
거주지( $\chi^2=7.9$ )							
대도시	65.3	9.7	5.3	6.6	13.1	100.0	( 681)
중소도시	65.0	7.3	4.8	9.5	13.4	100.0	( 463)
농촌	60.1	9.1	5.6	7.0	18.2	100.0	( 143)
연령( $\chi^2=185.9^{***}$ )							
20~24세	71.6	4.3	2.3	10.8	11.0	100.0	( 517)
25~29세	74.3	8.2	4.8	3.4	9.3	100.0	( 378)
30~34세	54.6	8.4	9.3	5.3	22.5	100.0	( 227)
35~39세	39.6	19.8	7.5	6.6	26.4	100.0	( 106)
40~44세	25.4	33.9	11.9	16.9	11.9	100.0	( 59)
교육수준( $\chi^2=63.3^{***}$ )							
고졸이하	49.4	22.0	10.4	6.7	11.6	100.0	( 164)
대학재학	65.7	7.7	3.6	11.3	11.7	100.0	( 274)
대졸이상	67.3	6.6	4.5	6.7	15.0	100.0	( 849)
취업여부( $\chi^2=24.0^{***}$ )							
취업	64.8	10.3	5.1	5.1	14.6	100.0	( 816)
비취업	64.3	6.4	4.9	11.9	12.5	100.0	( 471)

\*  $p<0.05$ , \*\*  $p<0.01$ ,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작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취업 중인 미혼남녀의 경제활동특성별로 결혼 의향의 차이를 살펴보면, 미혼남성의 경우 비정규직인 경우에 결혼 의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미혼여성의 경우 사무직(67.6%), 관리직 및 전문직(66.3%), 서비스·판매직

(58.8%), 기타(54.3%) 순으로 결혼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직장유형별로는 대기업(78.4%), 중소기업(67.1%), 공무원 및 공공기관(66.1%), 개인사업체 등(57.3%)의 순으로 결혼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요컨대, 미혼남성의 경우 고용안정이 그리고 미혼여성의 경우 직업 및 직장의 안정성이 결혼조건으로 유리하게 작용하여 결혼 의향을 높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미혼남성의 직업과 직장유형, 종사상지위와 근로소득 그리고 미혼여성의 종사상지위, 정규직 여부, 근로소득은 결혼 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혼남성의 경우 정규직 여부가 특히 중요한 결혼조건이며, 이외의 특성들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남성과 달리,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직업, 직장 유형 등이 결혼조건 등으로 결혼 의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 2) 결혼 계획 연령

결혼 의향이 있는 미혼남녀(20~44세)를 대상으로 결혼을 계획한 연령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미혼남성의 경우 30~31세 26.4%, 32~33세 22.1%, 34~35세 17.8%, 40세 이상 12.1%, 36~39세 9.1% 등의 순으로 평균 33.7세로 나타났다.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30~31세 34.0%, 28~29세 22.8%, 32~33세 13.5%, 27세 이하 10.4%, 34~35세 10.0% 순으로 평균 31.5세로 나타났다.

미혼남녀의 일반특성별로 결혼 계획 연령의 차이를 살펴보면, 미혼남성의 경우에는 연령, 교육수준, 취업여부에 따라 그리고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교육수준과 취업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미혼남성의 연령에 따라서는 센서링 효과에 의해 고연령층일수록 결혼 계획 연령도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미혼남녀 모두에게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대학 재학 중인 경우 결혼을 상대적으로 이른 나이에 계획하고 있으며, 고졸 이하의 저학력층인 경우 결혼 계획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학 재학 중인 미혼층은 결혼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인하여 보다 이른 연령에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경향을 보인 것이며, 이는 앞서 결혼 가치관의 응답 결과와도 어느 정도 일치한다 하겠다. 이와 달리, 이미 사회생활을 시작한 고졸 이하 미혼남녀들은 상대적으로 결혼 조건이 불리하여 그만큼 결혼연령도 늦추어 계획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도 미혼남녀 모두에게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는데, 취업자인 경우 비취업자인 경우에 비해 결혼연령을 상대적으로 늦추어 계획하고 있었다. 취업자인 경우 취업 준비 등의 기간이 소요되면서 결혼을 늦추어 계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표 9. 결혼 의향이 있는 미혼남녀(20~44세)의 일반특성별 결혼 계획 연령

(단위: %, 명, 세)

구 분	27세 이하	28~29세	30~31세	32~33세	34~35세	36~39세	40세 이상	계	(명)	평균 연령
미혼남성 전체	3.8	8.6	26.4	22.1	17.8	9.1	12.1	100.0	(814)	33.7
거주지( $\chi^2=13.0$ )										
대도시	3.7	7.9	25.9	23.6	16.0	11.5	11.5	100.0	(382)	33.8
중소도시	5.2	8.1	27.3	20.8	18.5	7.5	12.7	100.0	(308)	33.6
농촌	1.6	12.0	25.6	20.8	21.6	5.6	12.8	100.0	(125)	33.5
연령( $\chi^2=1177.2^{***}$ )										
20~24세	8.3	21.1	44.3	20.1	5.5	0.3	0.3	100.0	(289)	30.7
25~29세	3.1	4.0	37.4	39.2	15.4	0.4	0.4	100.0	(227)	32.2
30~34세	-	-	1.2	20.2	57.7	17.8	3.1	100.0	(163)	35.1
35~39세	-	-	-	-	-	48.9	51.1	100.0	( 90)	39.6
40~44세	-	-	-	-	-	-	100.0	100.0	( 46)	43.7
교육수준( $\chi^2=225.8^{***}$ )										
고졸이하	6.1	4.1	19.9	14.8	18.4	14.3	22.4	100.0	(196)	35.2
대학재학	4.7	21.9	44.2	24.0	4.7	0.4	-	100.0	(233)	30.9
대졸이상	2.3	3.1	18.9	24.5	25.3	11.6	14.2	100.0	(387)	34.6
취업여부( $\chi^2=115.4^{***}$ )										
취업	4.3	4.1	18.4	21.5	21.3	12.0	18.2	100.0	(483)	34.9
비취업	3.0	15.4	38.1	23.0	12.7	4.8	3.0	100.0	(331)	32.0
미혼여성 전체	10.4	22.8	34.0	13.5	10.0	4.9	4.4	100.0	(832)	31.5
거주지( $\chi^2=16.7$ )										
대도시	10.6	20.0	33.5	15.5	9.9	6.3	4.3	100.0	(445)	31.7
중소도시	9.0	25.0	35.0	12.0	10.7	3.0	5.3	100.0	(300)	31.4
농촌	13.8	29.9	34.5	8.0	8.0	4.6	1.1	100.0	( 87)	30.4
연령										
20~24세	19.5	34.7	37.9	7.0	0.8	-	-	100.0	(369)	29.5
25~29세	5.0	22.1	47.7	20.3	5.0	-	-	100.0	(281)	30.8
30~34세	-	-	7.3	23.6	52.8	9.8	6.5	100.0	(123)	34.8
35~39세	-	-	-	-	2.4	66.7	31.0	100.0	( 42)	38.9
40~44세	-	-	-	-	-	-	100.0	100.0	( 15)	45.3
교육수준( $\chi^2=73.0^{***}$ )										
고졸이하	21.0	12.3	22.2	13.6	14.8	9.9	6.2	100.0	( 81)	32.1
대학재학	13.4	30.7	44.1	9.5	1.7	0.6	-	100.0	(179)	29.8
대졸이상	7.7	21.9	32.6	14.7	11.9	5.6	5.4	100.0	(570)	31.9
취업여부( $\chi^2=57.2^{***}$ )										
취업	9.8	19.8	28.9	15.5	13.2	7.4	5.3	100.0	(529)	32.0
비취업	11.2	28.1	42.9	10.2	4.3	0.7	2.6	100.0	(303)	30.5

\* p<0.05, \*\* p<0.01, \*\*\* p<0.001

주: 1)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chi^2$ 값을 제시하지 않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취업 중인 미혼남녀의 경제활동특성별로 결혼계획연령을 살펴보면, 미혼남성의 경우 직종, 종사상지위 및 정규직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직장유형, 종사상지위, 정규직 여부 및 근로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미혼남성의 직종에 따라서는 사무직이나 서비스·판매직의 경우 32~33세로 계획한 비율이 높은 반면, 관리자 및 전문직의 경우 34~35세 그리고 기타 직종(농업, 기능직, 단순노무직 등)의 경우에는 40세 이상으로 결혼을 계획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소득이나 지위 등이 안정적인 직종에 있는 경우 결혼 계획 연령이 낮게 나타나는데, 관리직 및 전문직의 경우에는 고위직 직종에 종사하기 위하여 준비하였던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 결혼 계획 연령이 다소 높게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직장유형에 따른 차이는 취업 미혼여성에게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인 경우 30~31세, 대기업 종사자인 경우 28~29세, 중소기업 종사자인 경우 36~39세, 개인사업체 종사자인 경우 34~35세를 결혼할 시기로 계획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평균 결혼계획연령은 개인사업체, 공공기관, 중소기업, 대기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고용이나 소득이 안정된

대기업에서 결혼계획연령이 낮고, 개인사업체 등 고용이나 임금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소규모 사업체에 종사하는 경우에 결혼계획연령이 높게 나타났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입직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 결혼계획연령이 다소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종사상지위의 경우에는 미혼남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남녀 모두 평균 결혼계획연령은 비임금근로자, 상용직, 임시일용직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상용직에서 비임금근로자(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에 비해 이른 나이에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직업 안정성 등에 의한 결과일 것이다. 임시일용직에서 결혼계획연령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직업의 안정성 차원보다 연령 효과에 의한 결과일 수 있어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정규직 여부에 따라서는 미혼남녀 모두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해 결혼 계획 연령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정규직의 경우 고용 안정성 등이 비정규직보다 높으나, 정규직이 되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이 길고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저연령층이 집중되어 나타난 연령 효과에 의한 결과로 풀이할 수 있다.

근로소득은 취업 미혼여성에게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27세 이하를 결혼계획 연령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34~35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한편으로는 고소득층일수록 고연령층이 집중되어 나타난 연령 효과에 의한 것일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고소득 취업여성들의 경우 자기 개발 등을 위하여 결혼을 상대적으로 지연하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을 것이다.

### 3) 배우자 조건

미혼남녀(20~44세)를 대상으로 배우자 조건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미혼남성의 경우 성격(44.1%), 신뢰와 사랑(20.6%), 건강(9.3%) 등의 순으로 중시하고 있었으며,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성격(37.0%), 경제력(21.1%), 신뢰와 사랑(16.1%), 가정환경(8.7%) 등의 순으로 중시하고 있었다. 미혼남성의 일반특성 중 연령에 따라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20~24세의 경우에는 외모 등 신체적 조건, 30~34세는 신뢰와 사랑, 35~39세는 건강, 40~44세는 성격을 배우자 조건으로 더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미혼남성의 다른 특성이나 미혼여성의 일반특성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대체적으로 배우자 조건에 대한 선호가 보편화되어 있음을 짐



작할 수 있다.

표 10. 미혼남녀(20~44세)가 제시한 배우자 조건

(단위: %, 명)

구 분	신체적 조건	건강	직업	경제력	성격	신뢰와 사랑	가정 환경	기타 <sup>1)</sup>	계	(명)
미혼남성 전체	3.9	9.3	3.6	4.0	44.1	20.6	6.1	8.5	100.0	(1,096)
거주지( $\chi^2=22.5$ )										
대도시	3.5	9.5	5.0	4.3	42.8	18.0	8.0	8.9	100.0	( 538)
중소도시	4.7	8.7	2.5	3.2	45.3	23.6	5.0	7.0	100.0	( 402)
농촌	3.2	10.1	1.3	5.1	45.6	22.2	2.5	10.1	100.0	( 158)
연령( $\chi^2=68.6^{***}$ )										
20~24세	5.5	8.3	1.9	5.2	41.9	21.8	5.5	9.9	100.0	( 363)
25~29세	2.1	10.2	5.6	1.8	49.1	14.4	7.4	9.5	100.0	( 285)
30~34세	4.5	6.3	5.9	4.1	39.2	28.8	6.3	5.0	100.0	( 222)
35~39세	1.5	14.7	2.2	5.1	43.4	19.9	8.8	4.4	100.0	( 136)
40~44세	4.5	9.1	-	4.5	51.1	17.0	-	13.6	100.0	( 88)
교육수준( $\chi^2=16.9$ )										
고졸이하	5.3	12.0	3.2	3.9	46.3	17.7	4.2	7.4	100.0	( 283)
대학재학	2.8	7.3	3.1	4.5	43.9	20.4	6.2	11.8	100.0	( 289)
대졸이상	3.6	8.8	4.2	3.6	42.9	22.3	7.1	7.4	100.0	( 524)
취업여부( $\chi^2=4.1$ )										
취업	3.8	10.3	4.1	3.7	42.6	21.0	6.0	8.4	100.0	( 652)
비취업	3.8	7.9	2.9	4.5	46.1	20.0	6.3	8.5	100.0	( 445)
미혼여성 전체	0.4	4.3	7.2	21.1	37.0	16.1	8.7	5.1	100.0	(1,287)
거주지( $\chi^2=23.2$ )										
대도시	0.3	4.4	7.3	22.3	36.5	14.2	9.1	5.9	100.0	( 682)
중소도시	0.2	5.2	6.7	20.5	34.5	19.6	8.8	4.5	100.0	( 464)
농촌	1.4	1.4	8.4	17.5	47.6	14.0	6.3	3.5	100.0	( 143)
연령										
20~24세	0.6	3.7	7.8	22.3	37.3	15.1	8.7	4.5	100.0	( 515)
25~29세	-	4.2	8.5	18.3	37.8	17.5	10.6	3.2	100.0	( 378)
30~34세	0.4	3.1	5.7	21.1	35.2	18.9	7.9	7.5	100.0	( 227)
35~39세	-	7.5	7.5	26.4	34.0	10.4	6.6	7.5	100.0	( 106)
40~44세	-	10.2	-	20.3	42.4	15.3	3.4	8.5	100.0	( 59)
교육수준( $\chi^2=16.0$ )										
고졸이하	-	4.3	5.5	30.5	36.0	12.2	6.1	5.5	100.0	( 164)
대학재학	0.4	3.6	6.2	22.3	36.9	15.7	10.2	4.7	100.0	( 274)
대졸이상	0.4	4.6	7.9	18.8	37.3	17.1	8.8	5.2	100.0	( 850)
취업여부( $\chi^2=13.0$ )										
취업	0.1	3.8	8.8	20.7	36.2	16.0	9.3	5.0	100.0	( 815)
비취업	0.6	5.1	4.5	21.9	38.5	16.4	7.9	5.1	100.0	( 470)

\* p<0.05, \*\* p<0.01, \*\*\* p<0.001

주: 1) 기타에는 연령, 학력, 학벌, 종교, 궁합, 형제순위, 출산지역, 조건 없음이 포함되어 있음.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chi^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4) 결혼하지 않는 이유

##### ① 결혼의향이 없는 미혼남녀의 현재까지 결혼하지 않은 이유

앞서 결혼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미혼남녀(20~44세)에 한하여 현재까지 결혼하지 않는 이유를 분석한 결과,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가 22.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11.5%)’, ‘상대방에 구속되기 싫어서(10.4%)’, ‘결혼보다 내가 하는 일에 충실하고 싶어서(9.0%)’ 등의 순으로 주로 가치관 관련된 이유들이었다.

미혼남녀 모두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의 이유가 공통적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미혼남성의 경우 결혼 생활의 비용 부담(14.5%), 상대방에 구속되기 싫어(9.1%), 본인의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9.1%), 소득이 적어서(7.3%), 실업 상태여서(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12.9%), 결혼보다 내가 하는 일에 충실하고 싶어(11.8%), 상대방에 구속되기 싫어(11.2%), 소득이 적어(5.6%), 결혼생활로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을까봐(5.6%), 결혼제도가 남편 집안 중심(5.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혼남녀 간의 차이로는 미혼남성은 경제적인 이유로 그리고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사회문화적 가치관을 이유로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결혼의향이 없는 미혼남녀(20~44세)의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구 분		전체	미혼남성	미혼여성
경제적 요인	소득이 적어서	6.3	7.3	5.6
	실업상태여서	2.8	6.4	0.6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	2.1	3.6	1.1
	집이 마련되지 않아서	0.7	1.8	0.0
	결혼비용(혼수비용 등)이 마련되지 않아서	2.4	3.6	1.7
	결혼 생활의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서	7.3	14.5	2.8
사회적 요인	결혼으로 인한 직장 내에서의 불이익	0.7	-	1.1
	결혼생활과 직장일을 동시에 수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2.8	-	4.5
	결혼생활로 인하여 본인의 사회활동 지장이 있을까봐	4.2	1.8	5.6
가치관	아직 결혼하기에는 이른 나이이므로	3.5	1.8	4.5
	결혼에 적당한 나이를 놓쳤기 때문에	3.5	2.7	3.9
	상대방에 구속되기 싫어서	10.4	9.1	11.2
	결혼보다 내가 하는 일에 더 충실하고 싶어서	9.0	4.5	11.8
	본인의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11.5	9.1	12.9
	교육을 더 받을 계획이어서	1.0	1.8	0.6
	결혼을 하면 응당 아이를 낳아야 하는 상황이 부담스러워서	1.0	1.8	0.6
가족 요인	결혼제도가 남편 집안 중심이기 때문에	3.1	-	5.1
	장애 또는 만성질환을 경험하는 가족 수발 때문에	1.0	1.8	0.6
건강	건강문제·장애 때문에	1.7	2.7	1.1
기타	시간이 없어서(바빠서)	1.0	1.8	0.6
	형이나 언니가 아직 미혼이어서	0.3	0.9	-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	22.2	20.0	23.6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1.4	2.7	0.6
전체(계)		100.0(288)	100.0(110)	100.0(178)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미혼남녀의 연령별로 살펴보면, 35세 미만의 미혼남성의 경우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가 20.2%, ‘결혼생활의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서’가 14.3%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들의 경우 소득/고용불안정이나 결혼 비용 등 경제적인 부담으로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0%수준이다. 한편, 35세 이상의 미혼남성의 경우에는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21.7%)’와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15.2%)’가 결혼을 하지 않은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미혼여성의 경우는 35세 미만의 경우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25.0%)’, ‘결혼보다 내가 하는 일에 더 충실하고 싶어서(12.5%)’ ‘결혼 생활과 직장일 동시 수행 곤란 및 사회활동 지장(11.7%)’을 결혼하지 않은 이유로 응답한 반면, 35세 이상의 경우에는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19.3%)’,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19.3%)’, ‘결혼에 적당한 시기를 놓쳐서(12.3%)’ 등의 순으로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35세 미만 연령층에서 이와 같은 응답을 보인 것은 여전히 결혼 후에 여성이 본인의 경력 개발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12. 결혼의향이 없는 미혼남녀(20~44세)의 연령별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구 분	미혼남성			미혼여성		
	전체	35세 미만	35세 이상	전체	35세 미만	35세 이상
소득이 적어서	7.1	9.1	4.3	5.6	5.0	7.0
실업상태여서	6.6	9.1	2.2	0.5	0.8	0.0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	3.5	6.1	-	1.3	1.7	1.8
집이 마련되지 않아서	1.9	1.5	2.2	-	-	-
결혼비용(혼수비용 등)이 마련되지 않아서	3.7	1.5	6.5	1.5	2.5	-
결혼 생활의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서	14.3	16.7	10.9	2.8	3.3	-
결혼생활-직장일 동시 수행 곤란, 결혼생활로 사회활동 지장 우려	1.5	3.0	-	10.2	11.7	7.0
아직 결혼하기에는 이른 나이	2.0	3.0	-	4.3	5.8	1.8
결혼에 적당한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2.4	-	6.5	4.2	-	12.3
상대방에 구속되기 싫어서	9.2	7.6	13.0	11.1	10.8	12.3
결혼보다 내가 하는 일에 더 충실하고 싶어서	4.2	7.6	-	11.8	12.5	10.5
본인의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9.6	6.1	15.2	13.1	10.0	19.3
결혼제도가 남편 집안 중심이기 때문에	-	-	-	5.1	6.7	1.8
건강문제, 장애 때문에	2.8	-	6.5	1.3	-	3.5
시간이 없어서	1.9	3.0	-	.4	-	1.8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	20.2	18.2	21.7	23.3	25.0	19.3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2.9	4.5	-	.5	-	1.8
기타	6.2	3.0	10.9	3.1	4.2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09)	(66)	(46)	(179)	(120)	(57)

주: 1) 기타에는 직장 내 불이익, 교육을 더 받을 계획, 아이를 낳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가족 수발, 형이나 언니가 미혼, 외모에 자신이 없어서, 기타 등이 해당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② 30세 이상 미혼남녀의 현재까지 결혼하지 않은 이유

30세 이상 미혼남녀에 한하여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은 이유를 분석한 결과, 미혼남성(30~44세)의 경우 ‘본인의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17.2%)’, ‘소득이 적어서(10.9%)’,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8.6%)’, ‘집이 마련되지 않아서(8.3%)’, ‘결혼 생활의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서(7.9%)’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대도시 지역 거주자는 주택장만 곤란, 결혼 시기 놓침, 시간이 없어서, 이성을 만날 기회 없음 등을 결혼하지 않은 이유로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도시 지역의 경우 높은 주택 비용이나 장시간 근로 등이 미혼남성의 결혼 이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혼남성의 연령별로는 30~34세 연령층의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해 경제적인 이유(소득/고용 불안정, 주택 비용 등 포함한 결혼 비용 등)로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상대적으로 높고, 35~39세 연령층의 경우에는 시간, 이성 만날 기회 부족,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 등이 미혼으로 있는 이유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40~44세 연령층의 경우에는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라는 이유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미혼남성이 비취업인 경우 결혼하지 않은 이유로 실업상태, 고용 불안정을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취업인 경우에는 비용 부담, 결혼에 적당한 시기 놓침, 결혼보다 내가 하는 일에 충실하길 희망,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 등을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미혼여성(30~44세)이 현재까지 결혼하지 않은 이유는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가 32.5%로 높았고, 그 다음으로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11.0%)’, ‘결혼보다 내가 하는 일에 더 충실하고 싶어서(9.2%)’, ‘결혼생활과 직장일 동시 수행 곤란, 결혼생활로 본인의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까봐(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혼여성의 거주지별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일-가정양립 곤란에 대한 우려나 결혼보다 본인의 일에 충실하고 싶어

결혼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30~34세 미혼여성이나 취업 중인 미혼여성에게서도 나타났다. 이는 여성들의 경우 결혼 후에는 본인의 일을 지속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결혼보다는 본인의 경력개발 등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4.2.2. 연구가설 및 분석 방법

연구가설 : 사회 경제적 요인이 결혼 의향에 미치는 영향은 남녀가 서로 상이 할 것이다.

미혼 남녀의 결혼 의향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2015”를 이용하였다. 미혼 남녀(20~44세)의 결혼 및 출산에 관한 태도를 조사한 자료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를 모집단으로 하여 전국적으로 표본추출한 600개의 조사구 내의 약 12,000가구와 이들 가구에 거주하고 있는 기혼여성(15~49세) 및 미혼남녀(20~44세)를 조사하였으며 조사항목 및 분석에 사용된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사회경제적 요인이 결혼 의향에 미치는 영향이 남녀가 서로 상이할 것이라는 가설하에 미혼남녀 전체/남자/여자 세 가지로 나누어 각각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13. 미혼 남녀 결혼 의향 자료

요인	해당 자료
결혼 의향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대답 반드시 해야한다/ 하는 편이 좋다 1, 그 외 0
남녀 성역할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일이다에 대한 답변 : 1~4점 척도

혼전 동거태도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좋다는 것에 대한 답변 : 1~4점 척도
자녀가치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가 있는 일이다/ 자녀는 부부 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는 것에 대한 답변: 1~4점 척도
상대적 임금(표준화)	지역별(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성별 임금에 대한 표준화 임금

#### 4.2.3. 분석 결과

표 14. 미혼 남녀의 결혼의향 영향 요인 남녀 전체 : 로지스틱 회귀분석

종속 변수	결혼 의향			
독립 변수	Coef.	Std. Err.	z	P>z
성 (준거 : 남성)				
여성	-.6644488	.1045151	-6.36	0.000
연령 구간 (준거 : 20~24세)				
25~29세	-.3259426	.131559	-2.48	0.013
30~34세	-1.054474	.1549357	-6.81	0.000
35~39세	-1.532159	.1796034	-8.53	0.000
40~44세	-2.458027	.2386319	-10.30	0.000
교육 수준 (준거 : 고등학교 이하)				
전문대학	.1746418	.1583138	1.10	0.270
대학교	.212131	.1445621	1.47	0.142
대학원	.6410335	.2884438	2.22	0.026
자가 여부				
공공임대주택 거주	-.3416116	.1981926	-1.72	0.085
순자산(재산-부채)	.0000191	.0000104	1.83	0.067
상대적 임금(표준화)	.1629077	.0729758	2.23	0.026
정규직 여부	.393208	.1283889	3.06	0.002
남녀 성역할	.3182269	.0723354	4.40	0.000
혼전 동거태도	-.2868848	.0673472	-4.26	0.000
자녀가치	1.01246	.0898138	11.27	0.000
_cons	-1.521416	.4211288	-3.61	0.000

Number of obs = 2,382

Log likelihood = -1260.7707

LR chi2(16) = 433.56

Prob > chi2 = 0.0000

Pseudo R-sq = 0.1467

표 15. 미혼 남녀의 결혼의향 영향 요인\_남자 : 로지스틱 회귀분석

종속 변수	결혼 의향			
독립 변수	Coef.	Std. Err.	z	P>z
연령 구간 (준거 : 20~24세)				
25~29세	-.4559102	.2113834	-2.16	0.031
30~34세	-.9355606	.2469429	-3.79	0.000
35~39세	-1.389732	.2680216	-5.19	0.000
40~44세	-2.128614	.3325881	-6.40	0.000
교육 수준 (준거 : 고등학교 이하)				
전문대학	.1289642	.230781	0.56	0.576
대학교	.2004454	.2043236	0.98	0.327
대학원	.0653752	.4997604	0.13	0.896
지역 구분 (준거 : 대도시)				
중소도시	.2753207	.1719329	1.60	0.109
농어촌	.2831951	.2136104	1.33	0.185
자가 여부	-.7554328	.197898	-3.82	0.000
공공주택 거주	-.8347855	.3156349	-2.64	0.008
상대적 임금(표준화)	.2431201	.1087038	2.24	0.025
정규직 여부	.4011531	.206819	1.94	0.052
남녀 성역할	.2029131	.1118037	1.81	0.070
혼전 동거태도	-.3555967	.1070428	-3.32	0.001
자녀가치	.9826818	.1342657	7.32	0.000
_cons	-.7080161	.6410525	-1.10	0.269

Number of obs = 1,096  
 Log likelihood = -530.71714  
 LR chi2(16) = 166.79  
 Prob > chi2 = 0.0000  
 Pseudo R-sq = 0.1358



표 16. 미혼 남녀의 결혼의향 영향 요인 여자 : 로지스틱 회귀분석

종속 변수	결혼 의향			
독립 변수	Coef.	Std. Err.	z	P>z
연령 구간 (준거 : 20~24세)				
25~29세	-.1731079	.1711114	-1.01	0.312
30~34세	-1.105857	.2013347	-5.49	0.000
35~39세	-1.552347	.244725	-6.34	0.000
40~44세	-2.656441	.3491953	-7.61	0.000
교육 수준 (준거 : 고등학교 이하)				
전문대학	.248266	.2251906	1.10	0.270
대학교	.2685677	.2125513	1.26	0.206
대학원	1.05922	.3739593	2.83	0.005
지역 구분 (준거 : 대도시)				
중소도시	-.1254992	.1425938	-0.88	0.379
농어촌	-.2346356	.1842587	-1.27	0.203
자가 여부	.090134	.1530642	0.59	0.556
공공주택 거주	-.088081	.2616202	-0.34	0.736
상대적 임금(표준화)	.1621662	.0862027	1.88	0.060
정규직 여부	.3508044	.1665167	2.11	0.035
남녀 성역할	.3914635	.096238	4.07	0.000
혼전 동거태도	-.2343745	.0874974	-2.68	0.007
자녀가치	1.040723	.1229438	8.47	0.000
_cons	-2.736167	.5491444	-4.98	0.000

Number of obs = 1,286  
 Log likelihood = -718.62454  
 LR chi2(16) = 251.28  
 Prob > chi2 = 0.0000  
 Pseudo R-sq = 0.1488

미혼남녀 결혼의향 영향요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거주지에 따른 차이는 미혼남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게 분석되었다. 연령에 따른 차이는 미혼남녀 모두 고연령층일수록 결혼 의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남녀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때는 대학원 이상 학력에 대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결혼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남자와 여자를 따로 분석하였을 때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경제적인 변수들을 살펴보면 남녀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때 순자산이 높을수록, 상대적 임금이 높을수록 결혼의향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규직 여부도 결혼의향에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치관에 따른 결혼의향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남녀 성역할과 자녀가치 변수는 결혼의향에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남성은 직업을 가지고 여성은 가정을 돌본다는 명제에 동의할수록 결혼의향이 높음을 뜻한다. 자녀가치관 변수는 가족생활에서 자녀의 가치를 높게 생각할수록 결혼의향이 높음을 뜻한다. 하지만 혼전 동거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한 사람일수록 결혼의향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제5장 경제적 요인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 5.1. 거시 분석 : 시도별 합계출산율 결정 요인

#### 5.1.1. 자료 탐색 및 기초 분석

거시적인 관점에서 경제적 요인이 시도별 합계출산율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지역별 합계출산율 및 지역 경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구득 가능한 자료는 주로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인구)와 한국감정원의 평균 매매가격/전세가격(주택), 한국노동패널 데이터의 지역별/성별 임금, 가구의 소득(소득) 자료가 있으며 어린이집 개소수 및 이용률과 같은 보육관련 통계도 사용하였다.

표 17. 시도 합계출산율 결정 요인 자료

요인	해당 자료	자료 출처
합계출산율	가임기여성(15~49세)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통계청
평균 매매가격/ 평균 전세가격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	한국감정원
남성 임금	임금근로자의 경우 월평균 임금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월평균 소득을 연소득화	한국노동패널
여성 시간당 임금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월평균 임금*12)/(주평균근무시간*52)	한국노동패널
가구소득	가구의 연간 근로소득	한국노동패널
Gini계수(가구/남성임금/여성시간당임금)	개별 가구소득 및 임금의 Gini계수 -> 소득불평등 측정	한국노동패널
실업률	지역의 남녀 전체 실업률	통계청
어린이집개소수 및 이용률	어린이집 및 이용률 통계	보육통계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총 출생아 수는 40만 6천 3백 명으로 전년(43만 8천 4백 명)보다 3만 2천 1백 명(-7.3%) 감소하였고 조(粗)출생률(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은 7.9명으로 전년보다 0.7명(-8.1%) 감소하였다.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17명으로 전년(1.24명)보다 0.07명(-5.6%) 감소하여 끝없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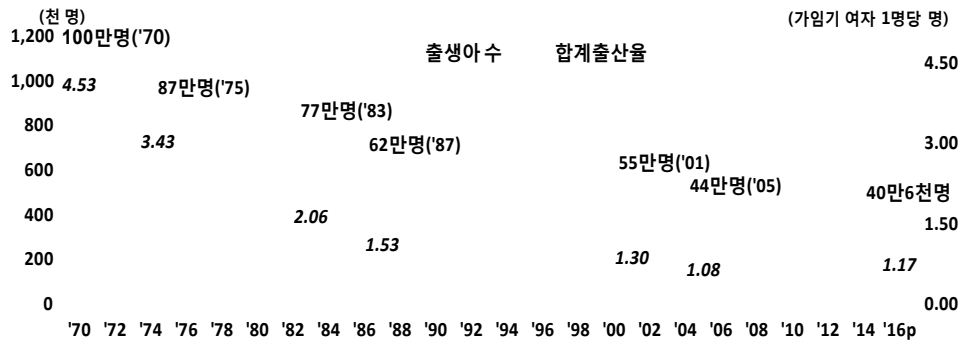


그림 7.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1970-2016)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해당 연령 여자 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을 살펴 보면 30대 초반이 110.1명으로 가장 높고, 20대 후반이 56.4명, 30대 후반이 48.7명 순으로 나타났다. 35세 미만의 출산율은 감소하고 35세 이상의 출산율은 증가하였고 25-29세의 출산율은 56.4명, 30-34세의 출산율은 110.1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6.7명(-10.6%), 6.6명(-5.7%) 감소하였으며 35-39세의 출산율은 48.7명, 40-44세의 출산율은 5.9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0.4명(0.8%), 0.3명(5.4%)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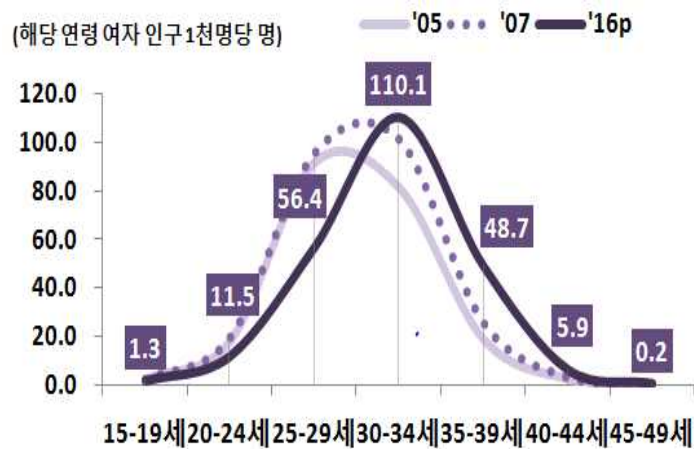


그림 8.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 2005, 2007, 2016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은 32.4세로 전년보다 0.2세 상승하였다. 첫째아 출산 모(母)의 평균 연령은 31.4세로 전년보다 0.2세 상승하였고 둘째·셋째·넷째아 이상 출산 모(母)의 평균 연령도 전년보다 각각 0.2세, 0.1세, 0.1세 상승하였다. 이는 출산율은 감소하고 평균출산연령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는 통계라고 할 수 있다.

모(母)의 연령별 출생아 수는 35세 미만은 감소, 35세 이상은 증가하였다. 30대 초반 모(母)의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크게 감소(2만 3천 2백 명)한 반면, 30대 후반 모(母)의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소폭 증가(2천 2백 명)하였으며 35세 이상 고령산모 구성비는 26.3%로 전년보다 2.4%p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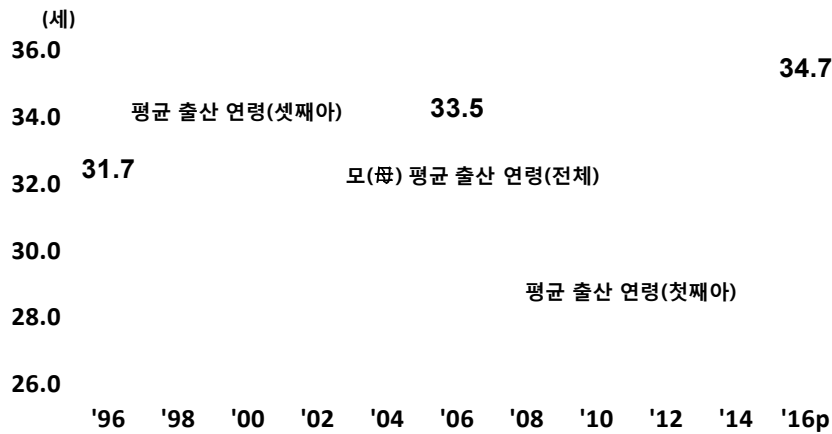


그림 9.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 1996-2016

### 5.1.2. 연구가설 및 분석 방법

연구가설 : 소득불평등과 주거비 부담은 가구형성 의지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는 출산율의 감소로 나타날 것이다.

소득불평등과 주거비부담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도별 출산율 결정 요인을 규명한다. 분석의 공간적 범위는 전국으로 하되, 주요 연구 자료의 특성을 반영하여 15개 시도(제주도 및 세종시 제외 - 제주도와 세종시의 경우 노동패널 응답 데이터가 소수에 불과해 평균임금 및 Gini 계수를 추정하는데 부적절하다고 판단)로 한정하며 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데이터가 구득 가능한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이다.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 결과 합계출산율 결정모형 역시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시도 합계출산율 모형 하우스만 검정 결과

	FE(b)	RE(B)	Difference (b-B)	S.E.
로그 평균매매가격	.1359134	-.062962	.1988755	.0333582
매매가 대비 전세가	-.6151663	-.3741399	-.2410264	.0977728
실업률	-.0356212	-.0501885	.0145673	.
로그 국공립어린이집 수	.1865619	-.0134284	.1999903	.0637185
로그 가구소득	.1675239	.3764904	-.2089664	
가구소득 Gini	-.3500675	-.3917935	.0417261	

b = consistent under Ho and Ha; obtained from xtreg

B = inconsistent under Ha, efficient under Ho; obtained from xtreg

Test: Ho: difference in coefficients not systematic

$$\chi^2(6) = (b-B)'[(V_b-V_B)^{-1}](b-B) = 65.95$$

$$\text{Prob} > \chi^2 = 0.0000$$

(V\_b-V\_B is not positive definite)

### 5.1.3. 분석 결과

표 19. 시도 합계출산율 모형 : 패널고정효과

Number of obs = 120		F(6,99) = 13.47		
Number of groups = 15		Prob > F = 0.0000		
종속 변수	합계출산율			
독립 변수	Coef.	Std. Err.	t	P>t
로그 평균매매가격	.1359134	.0663298	2.05	0.043
매매가 대비 전세가	-.6151663	.2010545	-3.06	0.003
실업률	-.0356212	.0111413	-3.20	0.002
로그 국공립어린이집 수	.1865619	.0692106	2.70	0.008
로그 가구소득	.1675239	.0733982	2.28	0.025
가구소득 Gini	-.3500675	.1951639	-1.79	0.076
_cons	-2.315726	.5638545	-4.11	0.000

sigma_u	.32827694	
sigma_e	.04268362	
rho	.98337503(fraction of variance due to u_i)	
F test that all u_i=0:	F(14, 99) = 26.51	Prob > F = 0.0000
R-sq	within	0.4494
	between	0.1344
	overall	0.0944

합계출산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패널확률효과 모형에서 주택 관련 변수와 합계출산율의 관계를 보면 지역의 로그 평균매매가격은 합계출산율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주택가격과 출산율의 관계는 연구마다 결과 및 해석이 다양한데 본 연구의 결과는 주택매매가격은 가구의 자산효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지역은 주거비 부담 때문에 합계출산율이 낮을 수 있을 것이다.

소득관련 변수를 살펴보면 가구의 소득은 합계출산율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지역의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가구소득의 Gini 값은 합계출산율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육환경을 대표하는 지역의 국공립 어린이집 수는 합계출산율에 양(+)의 영향을 고용불안정을 의미하는 실업률은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5.2. 거시 분석 : 서울시 자치구별 합계출산율 결정 요인

### 5.2.1. 자료 탐색 및 기초 분석



시도 분석과 동일한 자료를 사용하여 서울시 자치구 합계출산율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공공임대주택 재고량 변수를 이용하여 주택정책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또한 시군구 단위의 매매가격지수와 전세가격지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KB은행의 주택가격 동향 자료를 사용하였다.

표 20. 서울시 자치구 합계출산율 결정 요인 자료

요인	해당 자료	자료 출처
합계출산율	가임기여성(15~49세)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통계청
매매가격지수/ 전세가격지수	KB 주택가격 동향	KB은행
남성 임금	임금근로자의 경우 월평균 임금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월평균 소득을 연소득화	한국노동패널
여성 시간당 임금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월평균 임금*12)/(주평균근무시간*52)	한국노동패널
가구소득	가구의 연간 근로소득	한국노동패널
Gini계수(가구/남성임금/여성 시간당임금)	개별 가구소득 및 임금의 Gini계수 ->소득불평등 측정	한국노동패널
실업률	지역의 남녀 전체 실업률	통계청
어린이집개소수 및 이용률	어린이집 및 이용률 통계	보육통계
공공임대주택 재고량	자치구별 임대주택 재고량	통계청

## 5.2.2. 연구가설 및 분석 방법

연구가설 : 소득불평등과 주거비 부담은 가구형성 의지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는 출산율의 감소로 나타날 것이다.

경제적 요인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분석의 단위를 세분화하기 위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공간적 범위로 하는 서울시 자치

구 합계출산을 결정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는 모형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시군구 단위 임대주택 재고량 제공 시점이 2012년부터이다.)이고 임대주택을 포함하지 않는 모형은 시군구별 주택가격지수를 구득할 수 있는 2004년부터 2015년까지로 하였다.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 결과 임대주택 포함 모형과 임대주택 미포함 모형 모두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서울시 자치구 합계출산율 모형(임대주택 포함) 하우스만 검정 결과

	FE(b)	RE(B)	Difference (b-B)	S.E.
매매가격 지수	.016235	.0162612	-.0000263	.
로그 남성임금	.1013076	.0234653	.0778423	.0131067
로그 시간당여성임금	-.1018986	-.0791252	-.0227734	.
남성임금 Gini	-.3203804	-.3136551	-.0067253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3669958	-.2231681	.5901639	.135938
로그 공공임대주택 재고량	.1140461	-.0076649	.121711	.0067112

b = consistent under Ho and Ha; obtained from xtreg

B = inconsistent under Ha, efficient under Ho; obtained from xtreg

Test: Ho: difference in coefficients not systematic

$\chi^2(6) = (b-B)'[(V_b-V_B)^{-1}](b-B) = 21.55$

Prob>chi2 = 0.0015

(V\_b-V\_B is not positive definite)

표 22. 서울시 자치구 합계출산율 모형(임대주택 미포함) 하우스만 검정 결과

	FE(b)	RE(B)	Difference (b-B)	S.E.
매매가격 지수	.0020768	.0020262	.0000506	.0000408
남성임금 Gini	-.189704	-.1960616	.0063576	.0106453
초혼연령_여성	-.0405706	-.0381644	-.0024062	.0026729
로그 국공립어린이집 개소수	.1126124	.0973571	.0152553	.009041
로그 남성임금	.0550537	.0546057	.000448	.0065476
로그 여성시간당임금	-.0272025	-.0244826	-.0027198	.002511

b = consistent under Ho and Ha; obtained from xtreg

B = inconsistent under Ha, efficient under Ho; obtained from xtreg

Test: Ho: difference in coefficients not systematic

$$\chi^2(6) = (b-B)'[(V_b-V_B)^{-1}](b-B) = 15.77$$

$$\text{Prob} > \chi^2 = 0.0151$$

(V\_b-V\_B is not positive definite)

### 5.2.3. 분석 결과

표 23. 서울시 자치구 합계출산율 모형(임대주택 포함) : 패널고정효과

Number of obs = 100 Number of groups = 25	F(6,69) = 22.15 Prob > F = 0.0000			
종속 변수	합계출산율			
독립 변수	Coef.	Std. Err.	t	P>t
매매가격 지수	.016235	.0018087	8.98	0.000
로그 남성임금	.1013076	.0432226	2.34	0.022
로그 시간당여성임금	-.1018986	.0294054	-3.47	0.001
남성임금 Gini	-.3203804	.0987884	-3.24	0.002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3669958	.1958967	1.87	0.065
로그 공공임대주택 재고량	.1140461	.0256968	2.37	0.021

_cons	-0.4300333	.4731458	-0.91	0.367
sigma_u	.18125058			
sigma_e	sigma_e .03027473			
rho	rho .97285743 (fraction of variance due to u_i)			
F test that all u_i=0:	F(24, 69) = 22.60		Prob > F = 0.0000	
R-sq	within		0.6627	
	between		0.1857	
	overall		0.0705	

표 24. 서울시 자치구 합계출산율 모형(임대주택 미포함) : 패널고정효과

Number of obs = 300 Number of groups = 25	F(6,269) = 10.40 Prob > F = 0.0000			
종속 변수	합계출산율			
독립 변수	Coef.	Std. Err.	t	P>t
매매가격 지수	.0020768	.000345	6.02	0.000
남성임금 Gini	-.189704	.0653698	-2.90	0.004
초혼연령_여성	-.0405706	.0089435	-4.54	0.000
로그 국공립어린이집 개소수	.1126124	.0243195	4.63	0.000
로그 남성임금	.0550537	.0273417	2.01	0.045
로그 여성시간당임금	-.0272025	.0157027	-1.73	0.084
_cons	1.18618	.2273982	5.22	0.000
sigma_u	.08239905			
sigma_e	.04690745			
rho	.75524694 (fraction of variance due to u_i)			
F test that all u_i=0:	F(24, 269) = 31.66		Prob > F = 0.0000	
R-sq	within		0.1883	
	between		0.0219	
	overall		0.0522	

합계출산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패널확률효과 모형에서 주택 관련 변수와

합계출산율의 관계를 보면 시도 모형과 비슷하게 지역의 매매가격지수는 합계출산율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역시 매매가격지수의 상승은 가구의 자산효과가 상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소득관련 변수를 살펴보면 로그 남성의 임금은 합계출산율에 양(+)의 영향을, 로그 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합계출산율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신가계경제학에서 여성의 임금을 자녀양육의 기회비용으로 간주하여 출산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이다. 지역의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남성임금의 Gini 값은 합계출산율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육환경을 대표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이나 로그 국공립어린이집 개소수는 합계출산율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의 저소득층 또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중 하나인 공공임대주택재고량 변수도 합계출산율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정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이 출산율 제고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낸다.

### 5.3. 미시 분석 : 신혼부부가구 출산 지연 요인

#### 5.3.1. 자료 탐색 및 기초 분석

신혼부부가구의 출산 지연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2015년도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 패널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분석에 관련된 항목은 다음과 같다.

조사 대상 : 2010~2014년에 혼인신고 한 가구(혼인1~5년차)

조사 규모 : 2,702가구 (표본오차 : 95%신뢰수준에  $\pm 1.89\%$ )

조사 내용 : 주거 - 결혼준비, 희망 신혼집, 거주주택, 주거만족, 주거이동, 주택자금 마련방법, 선호 정책, 주거의식생활 - 관심사, 라이프스타일, 자녀계획, 보육 및 육아, 경제활동, 소득 및 지출, 대출 및 용자

또한 세대구성 및 자녀계획과 관련된 기초통계는 다음과 같다.<sup>22)</sup>

#### ① 세대구성

신혼부부가구의 세대구성은 ‘부부+자녀’의 2세대 구성이 76.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부만 거주하는 가구는 17.8%, ‘부부+부모+자녀’의 3세대 구성은 3.9%, ‘부부+부모’의 세대구성은 1.0%로 나타났다.

표 25. 세대구성

구분			부부	부부+자녀	부부+부모	부부+부모 +기타혈연	부부+ 기타혈연	부부+부모 +자녀	부부+ 비혈연	계
2014년 (1차)	소득	전국	15.6	76.7	1.0	0.5	0.7	5.4	0.1	100
		저소득(1~4분위)	8.9	84.4	0.5	0.2	0.7	5.1	0.1	100
		중소득(5~8분위)	24.6	67.0	1.5	0.8	0.9	5.3	0.0	100
		고소득(9~10분위)	27.7	62.7	1.8	1.3	0.0	6.5	0.0	100
	경제활동	맞벌이	31.2	59.3	1.8	1.0	0.7	5.9	0.1	100
		외벌이	6.3	87.1	0.5	0.2	0.7	5.1	0.1	100
2015년 (2차)	소득	전국	17.8	76.6	1.0	0.4	0.3	3.9	0.1	100
		저소득(1~4분위)	10.8	84.3	0.5	0.2	0.4	3.7	0.1	100
		중소득(5~8분위)	23.8	70.0	1.4	0.7	0.1	4.0	0.0	100
		고소득(9~10분위)	28.6	63.9	1.9	0.5	0.0	4.6	0.5	100
	경제활동	맞벌이	33.4	59.2	2.0	0.5	0.2	4.6	0.2	100
		외벌이	7.4	88.3	0.4	0.3	0.3	3.3	0.0	100

22)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2015), 「2015년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 패널조사 연구보고서」.

## ② 부모와의 동거 이유

부모와 동거하는 신혼부부가구의 64.8%는 부모집에 얹혀사는 편에 가까우며, 22.8%는 부모를 모시고 사는 편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집에 얹혀사는 비율은 저소득 가구 53.8%, 중소득 가구 72.5%, 고소득 가구는 75.4%로서 소득이 높을수록 부모에게 얹혀사는 가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동거하는 신혼부부가구의 37.1%는 독립하기 위한 주택자금부족, 31.1%는 자녀의 육아·보육 문제 해결, 20.6%는 부모의 동거희망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는 저소득 가구는 독립하기 위한 주택자금 부족 때문이며, 중소득 및 고소득 가구에서는 자녀의 육아·보육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부모와 동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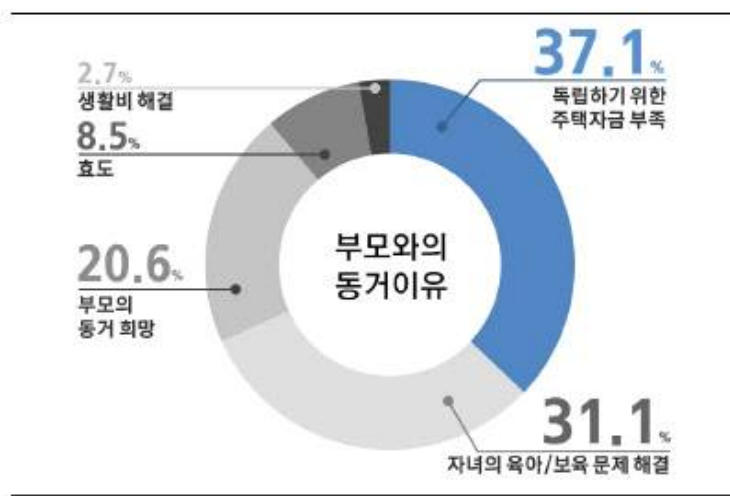


그림 10. 부모와의 동거이유

## ③ 자녀계획

신혼부부가구의 현재 자녀수는 평균 1.16명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없는 가구는 18.9%, 1명 47.9%, 2명 31.2%, 3명 이상 2.0%로서 1명 가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맞벌이 가구는 0.87명, 외벌이 가구는 1.36명으로 외벌이 가구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26. 현재 자녀 수

구분			0명	1명	2명	3명 이상	계	평균(명)
2014년 (1차)	소득	전국	16.5	50.1	31.5	1.8	100	1.19
		저소득(1~4분위)	9.5	53.3	35.5	1.7	100	1.30
		중소득(5~8분위)	26.1	44.9	27.3	1.7	100	1.05
		고소득(9~10분위)	28.5	47.8	20.2	3.5	100	0.99
	경제활동	맞벌이	32.9	44.9	21.7	0.4	100	0.90
		외벌이	6.7	53.2	37.4	2.6	100	1.36
2015년 (2차)	소득	전국	18.9	47.9	31.2	2.0	100	1.16
		저소득(1~4분위)	11.3	51.9	34.9	1.9	100	1.27
		중소득(5~8분위)	25.3	43.9	28.9	1.9	100	1.08
		고소득(9~10분위)	31.0	46.1	20.3	2.5	100	0.94
	경제활동	맞벌이	35.6	43.3	20.1	0.9	100	0.87
		외벌이	7.7	50.8	38.8	2.7	100	1.36

현재의 자녀를 포함하여 신혼부부가구가 계획하는 총 자녀의 수는 평균 1.77명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2명으로 계획하는 가구가 63.6%로 가장 많고, 1명 27.3%, 3명 6.6%이며, 맞벌이 가구는 1.69명, 외벌이 가구는 1.82명으로 나타났다.

표 27. 총 계획 자녀수(현재 자녀 포함)

구분			0명	1명	2명	3명	4명 이상	모름/무응답	계	평균(명)
2014년 (1차)	전국		2.0	24.2	63.7	9.3	0.8	0.0	100	1.83
		저소득(1~4분위)	1.5	22.9	64.7	10.3	0.7	0.0	100	1.86
		중소득(5~8분위)	2.6	26.2	63.2	7.3	0.7	0.0	100	1.78
	고소득(9~10분위)	3.7	26.4	57.6	10.5	1.8	0.0	100	1.80	
	경제활동	맞벌이	3.8	29.4	59.7	6.3	0.8	0.0	100	1.72
		외벌이	1.0	21.2	66.1	11.0	0.8	0.0	100	1.89
2015년 (2차)	전국		1.7	27.3	63.6	6.6	0.6	0.1	100	1.77
		저소득(1~4분위)	1.4	25.4	65.8	6.7	0.5	0.2	100	1.80
		중소득(5~8분위)	2.1	27.8	63.8	6.0	0.3	0.0	100	1.75
		고소득(9~10분위)	2.0	36.8	48.8	9.4	3.0	0.0	100	1.75
	경제활동	맞벌이	2.8	32.4	58.1	5.4	1.0	0.2	100	1.69
		외벌이	1.0	23.8	67.4	7.4	0.4	0.0	100	1.82



자녀를 가질 계획이 있지만 미루고 있는 이유는 37.0%가 경제활동·직장생활의 어려움, 31.8%는 육아·교육비 등의 부담과 관련된 경제적 사정, 25.7%는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등 자녀양육의 부담 때문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는 경제활동·직장생활의 어려움에 의한 경우가 54.6%, 외벌이 가구는 육아·교육비 등 경제적 사정에 의한 경우가 38.4%로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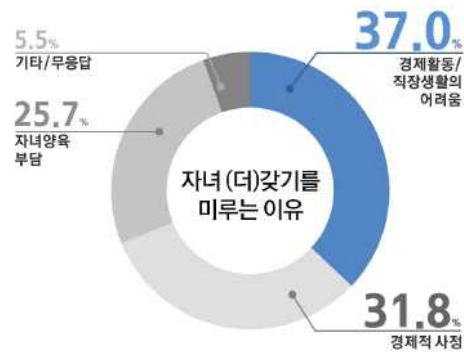


그림 11. 자녀를 (더) 갓기를 희망하지만 미루는 이유

자녀를 (더)가질 계획이 없는 이유는 43.1%가 육아·교육비 등의 부담과 관련된 경제적 사정, 33.8%는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등 자녀양육의 부담, 16.4%는 경제활동·직장생활의 어려움 때문으로 나타났다. 육아·교육비 등의 부담과 관련된 경제적 사정에 의한 경우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높고, 경제활동·직장생활의 어려움에 의한 경우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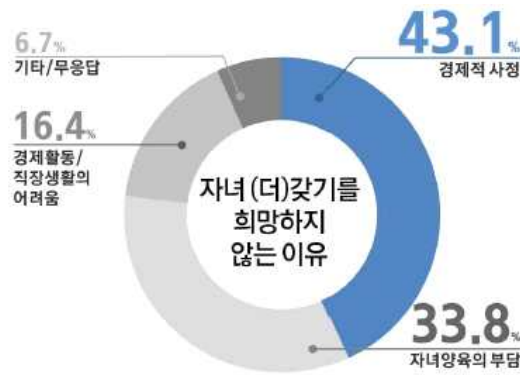


그림 12. 자녀를 (더) 갖기를 희망하지 않는 이유

### 5.3.2. 연구가설 및 분석 방법

연구가설 : 가구의 상대적 소득 감소 및 주거비 부담은 출산 의지를 약화시킬 것이며 이는 현재 출산자녀의 유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출산 지연 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으로는 “자녀를 (더) 가질 계획이 있습니까?”에 대한 대답으로 자녀를 (더) 가질 계획이 있지만, 미루고 있다가 1, 그 외 0으로 이항로짓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경제적 요인에 의한 출산의지는 현재 출산자녀의 유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하에 무자녀 가구와 유자녀 가구에 대하여 각각 분석하였다.

상대적 임금은 지역별(17개 시도별 임금에 대한 표준화 임금)을 변수로 사용하였고 그 외 주거 및 개인관련 특성을 변수로 하였으며 주거비 부담을 측정하기 위하여 월평균 주거생활비 + 주택구입이나 유지를 위해 빌린 금액에 대한 대출 상환금을 주거비 지출액으로 정의하고 이를 월 총소득으로 나눈 것을 주거비 부담비율로 정의하였다. 유자녀 가구의 경우 교육비(보육비

포함)을 추가 부담금으로 설정하였다.

### 5.3.3. 분석 결과

표 28. 신혼부부가구의 출산 지연 요인 무자녀 : 로지스틱 회귀분석

종속 변수	출산 지연			
독립 변수	Coef.	Std. Err.	z	P>z
주거비 부담비율	2.822012	1.635865	1.73	0.085
상대적 임금(표준화)	.2458523	.1160955	2.12	0.034
부인의 나이	-.1295058	.0244419	-5.30	0.000
자가 여부	-.5686313	.2353926	-2.42	0.016
방 수	-.3646826	.1561123	-2.34	0.019
맞벌이 여부	.3443332	.2085712	1.65	0.099
_cons	3.969229	.9327145	4.26	0.000

Number of obs = 678  
 Log likelihood = -377.05683  
 LR chi2(8) = 66.63  
 Prob > chi2 = 0.0000  
 Pseudo R-sq = 0.0812

표 29. 신혼부부가구의 출산 지연 요인·유자녀 : 로지스틱 회귀분석

종속 변수	출산 지연			
독립변수	Coef.	Std. Err.	z	P> z
상대적 임금(표준화)	-.13263	.0723944	-1.83	0.067
로그 주거비 지출액	.3703632	.1148493	3.22	0.001
부인의 나이	-.058268	.0145618	-4.00	0.000
자가 여부	-.0992585	.1288927	-0.77	0.441
방 수	-.1894726	.1059421	-1.79	0.074
맞벌이 여부	.3122823	.1459655	2.14	0.032
부모와 동거 여부	-.2950174	.2369657	-2.09	0.037
_cons	.0524048	.6594204	0.08	0.937

Number of obs = 1,918  
 Log likelihood = -1006.9242  
 LR chi2(9) = 49.63  
 Prob > chi2 = 0.0000  
 Pseudo R-sq = 0.0241

분석결과 주거비부담은 자녀가 없는 가구와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모두 출산을 연기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혼인한 가구가 자녀 출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거비 부담이 출산연기라는 의사결정에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주거점유형태는 출산결정에 있어서 현재 자녀가 없는 가구에서만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주택 점유 형태는 첫 자녀를 갖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주거 점유 형태가 자가인 경우와 같이 결혼 이후 주거안정성이 보장되는 경우에는 출산을 지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택의 규모도 출산연기 결정에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낸다. 방 수가 많을수록 출산을 연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결혼 초기 가정을 확장해 나가는 시기에 주택의 규모가 작으면 첫 자녀 출산과 추가적인 출산의 결정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맞벌이인 경우에는 자녀가 있는 가구와 자녀가 없는 가구에서 모두

출산을 미룰 가능성이 높았다. 이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출산을 결정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배우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양 집단 모두에서 출산을 미루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유자녀의 경우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가정은 출산을 미루지 않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제6장 결론

### 6.1. 주요 연구결과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크게 거시적인 차원에서 소득불평등과 주택마련 비용 부담(PIR = Price to Income Ratio로 측정, 이하 PIR) 등의 경제적인 요인들이 지역의 혼인율과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과 미시적인 차원에서 소득불평등과 주거비 부담 및 기타 경제적인 요인들이 개인의 결혼 의향 및 신혼부부가구의 출산 지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였다.

미시분석 중 개인의 결혼 의향의 경우 경제적 요인이 남녀 전체의 결혼 의향에 미치는 영향, 남자와 여자 각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남자와 여자에 결혼의 의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차이를 보고자 하였다.

또한 신혼부부가구의 출산 지연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에는 조사시점에 자녀가 없는 무자녀가구와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는 유자녀가구의 출산지연에 관한 요인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주요 내용 및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소득불평등과 주거비 부담이 가구형성(혼인율과 출산율) 의지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는 혼인율과 출산율의 감소로 나타날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제시하고 경제적 요인이 조혼인율과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혼인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도구변수 패널고정효과 모형에서 주택 관련 변수와 조혼인율의 관계를 보면 PIR와 매매가 대비 전세가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PIR와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 모두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시도 단위에서 PIR나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상승하는 경우에 조혼인율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결국 주택가격상승은 미혼남녀들의 결혼을 어렵게 만드는 큰 요인 중에 하나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혼부부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매매가보다는 전세가에 더욱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높아질수록 조혼인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소득불평등의 대리변수인 남성임금표준편차와 여성시간당임금표준표차 모두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경제적 불평등이 결혼의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암시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의 실업률 역시 조혼인율에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고용불안정성을 해결하는 것이 조혼인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는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또한 합계출산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패널확률효과 모형에서 주택 관련 변수와 합계출산율의 관계를 보면 지역의 로그 평균매매가격은 합계출산율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주택가격과 출산율의 관계는 연구마다 결과 및 해석이 다양한데 본 연구의 결과는 주택매매가격은 가구의 자산효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지역은 주거비 부담 때문에 합계출산율이 낮을 수 있을 것이다.

소득관련 변수를 살펴보면 가구의 소득은 합계출산율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지역의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가구소득의 Gini 값은 합계출산율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육환경을 대표하는 지역의 국공립 어린이집 수는 합계출산율에 양(+)의 영향을 고용불안정을 의미하는 실업률은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저소득층 또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중

하나인 공공임대주택재고량 변수도 합계출산율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정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이 출산을 제고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낸다.

둘째, 본 연구는 사회 경제적 요인이 결혼 의향에 미치는 영향은 남녀가 서로 상이할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거주지에 따른 차이는 미혼남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게 분석되었다. 연령에 따른 차이는 미혼남녀 모두 고연령층일수록 결혼 의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남녀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때는 대학원 이상 학력에 대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결혼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남자와 여자를 따로 분석하였을 때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경제적인 변수들을 살펴보면 남녀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때 순자산이 높을수록, 상대적 임금이 높을수록 결혼의향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규직 여부도 결혼의향에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치관에 따른 결혼의향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남녀 성역할과 자녀가치 변수는 결혼의향에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남성은 직업을 가지고 여성은 가정을 돌본다는 명제에 동의할수록 결혼의향이 높음을 뜻한다. 자녀가치관 변수는 가족생활에서 자녀의 가치를 높게 생각할수록 결혼의향이 높음을 뜻한다. 하지만 혼전 동거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한 사람일수록 결혼의향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가구의 상대적 소득 및 주거비 부담은 출산 의지를 약화시킬 것이며 이는 현재 출산자녀의 유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주거비부담은 자녀가 없는 가구와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모두



출산을 연기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혼인한 가구가 자녀 출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거비 부담이 출산연기라는 의사결정에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주거점유형태는 출산결정에 있어서 현재 자녀가 없는 가구에서만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주택 점유 형태는 첫 자녀를 갖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주거 점유 형태가 자가인 경우와 같이 결혼 이후 주거안정성이 보장되는 경우에는 출산을 지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택의 규모도 출산연기 결정에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낸다. 방 수가 많을수록 출산을 연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결혼 초기 가정을 확장해 나가는 시기에 주택의 규모가 작으면 첫 자녀 출산과 추가적인 출산의 결정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맞벌이인 경우에는 자녀가 있는 가구와 자녀가 없는 가구에서 모두 출산을 미룰 가능성이 높았다. 이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출산을 결정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배우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양 집단 모두에서 출산을 미루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유자녀의 경우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가정은 출산을 미루지 않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6.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본 연구의 의의는 기존의 가구형성에 영향을 주는 경제적 요인에 대한 분석을 절대적 임금과 주거비 부담(주택매매가격, 전세가격 또는 매매가격지수, 전세가격지수)의 수준에 국한되어있던 것을 절대적 임금을 발전시켜 지역의 비교집단과의 상대적 임금으로 분석, 주거비 부담을 발전시켜 주택마련

비용 부담(PIR)로 분석하였다는 것에 있다.

또한 소득불평등과 가구 형성에 관한 최초의 거시-미시적 연계 분석이며 Leibenstein의 사회적 상대소득 모형을 국내에 적용한 연구라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신가계경제학 이론을 실증분석으로 규명하였다.

연구의 한계로는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불평등의 범주 중 주로 노동시장이나 가정에서의 여성의 상대적 지위와 관련되는 젠더불평등(성별차이)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지 못했다는 것과 거시-미시 연계적 분석이 좀 더 유기적인 과정으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 [ 참 고 문 헌 ]

### [국내 문헌]

- 강경희(2013), “보육지원정책과 출산율과의 관계 : OECD 가입국을 중심으로”, 배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강병구·윤명수(2003), ‘근로소득의 불평등변화에 대한 요인분석’, 「국회도서관보」 경제개발연구 9(1): 155-175.
- 공선영(2006), ‘경제위기 이후 인구학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특성이 기혼여성 의출산에 미친 영향’, 「보건과 사회과학」 19:119-149.
- 김도영(2007), “육아지원정책이 자녀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명중(2006), ‘인구감소시대에 진입한 일본의 저출산 현황과 대책’, 「국제노동브리프」 4(1): 70-79.
- 김성혜, 김초강(1991), ‘결혼관련 요인의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보건교육학회지」 8(1).
- 김소희(2013), “출산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성결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승권(2003), ‘저출산의 원인과 안정화 대책’, 「보건복지포럼」.
- 김승권(2003), ‘전국 출산력 및 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2005),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 「국회도서관보」.
- 김은지(2017), ‘결혼의 경제적 손실비용 추정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92(1): 7-30.

- 김현숙(2008), ‘보육료 지원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차등 보육료 확대 방안’, 「재정학연구」 1:(2) 61-103.
- 대한민국정부(2005),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0)’.
- 대한민국정부(2010),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0)’.
- 대한민국정부(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5)’.
- 마미정(2007), “맞벌이 부부의 둘째 자녀 출산의도와 출산기피 요인 탐색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민희철·우석진·김현숙·김혜원·류덕현·옥우석(2007), ‘저출산 극복 및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가족친화정책. 조세, 재정, 보육, 교육, 여성노동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 「연구보고서」 07:(6).
- 박길진(2007), “·가정 양립지원정책이 양육부담과 출산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세경(2006), ‘저출산 시대의 자녀양육비 부담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 박영애(2012),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한성대학교대학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 박영창(2005), ‘저출산 관련 정책평가 및 입법과제’, 「한국법제 연구원」.
- 방영이(2010), “출산장려정책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배광일(2011), “출산의도 및 출산행동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배민환(2007), “한국 저출산의 원인과 출산장려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논문.
- 배상석(2010), ‘출산장려금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수도권 자치단체를 중심

으로', 「한국정책학보」 19(4): 273-299.

- 백나영(2013), “출산환경요인과 출산의지와 의 관계 연구; 개인가치관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2010~2014),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사례집’.
- 보건복지부(2014), ‘국민보건 의료실태조사’, 「보육통계」.
- 서문희(2007), ‘취약보육 대안 마련을 위한 저소득가정 영유아보육 실태조사 보고’, 서울 : 육아정책개발센터.
- 서정연(2015), “출산자녀수별 기혼여성의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석호원(2011), ‘출산장려금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5(2): 143-180.
- 손승영(2005), ‘한국사회 저출산 원인과 가족친화적 정책대안’, 「가족과 문화」 17(2): 285-316.
- 송다영(2004), ‘가족위기 지표에 대한 비판적 재고찰 : 이혼율과 출산율 문제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5: 117-141.
- 신윤정(2008), ‘보육·교육비 부담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건사회연구」 28(2): 103-134.
- 신호영(2009),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치관과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사회적 인식”, 한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호영·방은령(2009),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치관과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사회적 인식’, 「대한가정학회」 47(10): 123-136.
- 안명옥(2004),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안명옥 의원실」 50-52.
- 유해미(2009), “출산 대응 주요정책의 현황 및 과제”, 현안보고서 제39호, 국회입법조사처.

- 윤은숙 (2011), “출산장려정책의 수용성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 이강재(2011), “한국의 저출산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사회정책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명석·김근세·김대건(2012),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정책 효과분석’ 「한국행정연구」 21(3).
- 이미란(2007), “출산행태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학위논문.
- 이삼식(2005),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2006), ‘저출산 원인구조와 정책방향’, 「보건복지포럼」.
- 이상호, 이상현(2010), ‘저출산·인구고령화의 원인에 관한 연구: 결혼결정의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금융경제연구」 제445호.
- 이소영(2007), “기혼여성의 자녀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 및 출산장려정책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인순(2011), “한국 기혼여성의 출산기피요인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재경·조영미·유정미·이은아(2005), ‘유럽의 저출산 관련 정책에 대한 여성주의적 분석’, 「한국여성학」 21(3): 133-161.
- 이정원(2007), “유자녀 취업여성의 후속출산의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충환(2011), “출산장려정책의 활성화에 따른 효과성 분석”,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현옥(2010), “한국여성의 출산행태 결정요인분석”,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상빈(2012), “출산장려금 정책의 효과에 관한 실증적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영남(2012), “출산장려정책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 국제신학대학교 원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세훈(2007),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변수에 관한 분석”. 서강대학교 경제 대학 석사학위논문.
- 정연숙(2005), “저출산에 따른 자녀수와 출산의지 및 출산장려정책 요구분석”,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영금(2004), ‘가족 친화적 정책을 통한 일-가족 균형에 관한 연구’, 「한국 가정학회지」 22(5): 91-100.
- 정옥분·정순화·홍계옥(2007), 결혼과 가족의 이해, 시그마프레스.
- 정창무(2008), ‘초혼연령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변인’, 「국토계획」 43(4): 105-118.
- 천현숙·이길제·김준형·윤창원(2016), ‘주택과 출산 간의 연계성에 관한 거시-미시 접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분희(2015), “출산장려정책수단의 효과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상빈(2012), “지방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연구; 광역 자치단체 출산 양육사업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숙희·김정우(2005), ‘외환위기 이후 저출산의 원인 분석’, 「삼성경제연구소」.
- 허만형·이정철(2011), ‘출산장려금의 정책효과 연구. 제도도입 전후 출산율 증감경향 비교분석’, 「한국정책연구」 11(3): 387-409.
- 현대경제연구원(2014), ‘저출산 해법 유럽에서 배운다’

- 홍성란(2010), “지방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관한 연구: 안동시를 중심으로”, 안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해외 문헌]

- Andersson, G. (2002). “Childbearing development in Denmark, Norway, and Sweden from the 1970s to the 1990s”, *A comparison. MPIDR Working Paper*.
- Becker, G. S. (1993). “A Treatise on The Family”, *Economic Journal*, 75 493-517.
- Becker, G. S. (1976). *The Economic Approach to Human Behavior*,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erry, F. & Berry, W (1990). “State Lottery Adoptions as Policy Innovations: An Event History Analysi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4(2): 395-415.
- Berry, Frances & Berry, William (1992). “Tax Innovation by American States Capitalizing on Political Opportunity”,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6(3): 715-742.
- Blake, J. (1968) “Are Babies Consumer Durables? A Critique of the Economic Theory of Reproductive Motivation”, *Population Studies*, 22:2.
- Caldwell Toward(1976). “A Restatement of Demographic Transition Theory”, *Population Development Review*, 2: 321-366.
- Chapman, B. M. G. Dunlop, A. Liu and D. Mitchell(1999). “The Forgone Earnings from Child Raising Revisited”, *Centre for Economic Policy*.



- Chesnais, J. C. (1996). "Fertility, Family and Social Policy in Contemporary Western Europ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2(4): 729–739.
- Esping-Andersen, G. (1999). *Social Foundation of Postindustrial Economics*, Oxford.
- Gray, V. (1973). "Innovation in the States : A Diffusion Stud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7(4) :1174–1185.
- Greenstein, T. N. (1995). "Are the 'Most Advantaged' Children Truly Disadvantaged by Early Maternal Employment? Effects on Child Cognitive Outcomes", *Journal of Family Issues*, 16: 149–169.
- Hakim, C. (2000). *Women–Life style Choice in the 21st Century : Preference Theory*, Oxford University Press
- Leibenstein, H. 1974, "An Interpretation of the Economic Theory of Fertility: Promising Path or Blind Alley?", *JEL*, 457~479.
- Letablier, M. T. (2003). "Fertility and Family Policies in France", *Journal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1–7.
- McDonald, P. (2000). "The Costs of Children: A Review of Methods and Results", *Family Matters*, 27: 1–16.
- Mohr, Lawrence (1969), "Determinants of Innovation in Organization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5: 111–126.
- Sleebos, J. (2003). "Low Fertility Rates in OECD Countries: Facts and Policy Responses", *OECD Labor Market and Social Policy Responses* (15, OECD Publishing).
- Torr, B. M. and Short, S. E. (2004). "Secon Births and the Second Shift: a Research Note on Gender Equity and Fertil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0(10).

- Walker, J. (1969). "The Diffusion of Innovations Among the American Stat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3: 880–899.

# The Effects of Economic Factors on Household Formation

Kwak, Yun Chul

A DISSERTATION  
IN  
URBAN PLANNING

Presentyed to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Supervised by Professor  
Jung, Chang Mu

Department of Civil & Environmental Engineering  
College of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August 2017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 The Effects of Economic Factors on Household Formation

–Focused on Relative Income and Housing Expenses–

Kwak, Yun Chul

Department of Civil & Environment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economic factors on the formation of furniture based on the concepts and theoretical considerations related to furniture formation. The analysis of the economic factors of the existing furniture formation was mostly limited to the absolute wage, and in the case of the housing cost burden, the discussion focused only on the absolute size of the house price (both the sale price and the charter price).

This study focuses on how relative wages affect the formation of households in case of wage, and how housing cost burden affects the

formation of household instead of housing price in case of housing cost burden. .

The main contents and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income inequality and the housing cost burden will decrease the willingness of household formation (marriage rate and fertility rate), which will result in a decrease in marriage rate and fertility rate and suggest that economic factors affect the marriage rate and total fertility rate The effect was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housing-related variables and crude marriage rate shows that both the PIR and the sale price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rent rate. This implies that if the rental rate is higher than the PIR or the selling price in the unit of trial, the marriage rate can be reduced. In addition, it is generally known that married couples are more sensitive to the rent than the sale price. The higher the rent rate of the sale price, the lower the marriage rate. It can be seen that both male and female standard deviation of wage standard of wage, which are proxy variables of income inequality, are affected by negative (-) and local unemployment rate has negative effect on crude marriage rate. Income inequality and employment Resolving instability could be one way to increase marriage rates.

In addi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ousing-related variables and the total fertility rate shows that the log average selling price of the region affects the total fertility rate positively (+) while the ratio of the rent-to-price ratio is negative (-).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interpreted as reflecting the asset effect of households. The Gini value of household income, which indicates the degree of income inequality in the

region,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total fertility rate, while household income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total fertility rate. The number of national daycare centers representing the childcare environment is affected by the positive (+) effect on the total fertility rate and the negative (–) effect on the unemployment rate by the employment instability. The public rental housing inventory variable, which is one of the housing policies for housing,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total fertility rate. This indirectly indicates that the government's housing policy for housing stabilization can be a means to raise the fertility rate.

Second, this study tried to test and establish a research hypothesis that the effects of socioeconomic factors on marital intentions are different between men and women. The difference according to age shows that the marriage intention of the unmarried men and women is relatively low in the older age group. As for economic variables, when analyzed for male and female, the higher the net asset value, the higher the relative wage, the higher the marriage intention. Also, it was analyzed that the full – time job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intention to marry. The difference of marriage intention according to the values was also statistically significant. Gender roles and children's value variables were analyzed as having a positive effect on marriage intention. This means that the more agree to the proposition that men have jobs and women take care of family, the higher the marriage is. The value of children's value means that the higher the value of the child in the family life, the higher the incentive for marriage. However, those who responded positively to marriage cohabitation were analyzed as having a lower intention to marry.

Third, the relative hypothesis that the relative income of households

and the burden of housing expenses will weaken the will of childbirth will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presence or absence of childbirth. As a result, the housing cost burden has a significant effect on delaying the birth of both children without children and those with children. In the process of determining the birth of a child by married households, it means that the burden of housing expenses is largely influencing the decision to postpone birth. The larger the number of vacancies, the less the delay in giving birth. These results show that the smaller the size of the housing at the time of the expansion of the initial marriage, the more negative the decision to give birth.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dual-income households, it is highly likely that both children with children and those without children will postpone birth. This suggests that women's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negatively affects the decision to give birth. In addition, the higher the age of the spouse, the higher the likelihood of delaying the birth in both groups. In the case of the spouses, the family living with the parents were more likely not to postpone the birth.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the analysis of the economic factors affecting the existing furniture formation was limited to the level of absolute wage and housing cost (home sale price, lease price or sales price index, lease price index) (PIR), which is the relative cost of living in the region.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are that it does not include analysis of gender inequality (gender differences) related to the relative status of women in the labor market or home, among the category of inequalities affecting childbirth, and that macro- It was not connected to a more organic process.



Keywords : Low Fertility Rate, General Marriage Rate, Total Fertility Rate, Income inequality, Housing expenses

*Student Number : 2009-23159*